

제428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8월25일(월)

장 소 제2회의장

의사일정

1. 결산 공청회 생략의 건
2.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3.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4.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종합정책질의

상정된 안건

1. 결산 공청회 생략의 건 1
2.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2
 - o 소위원장(박형수) 인사 2
3.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6
4.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6
 - 종합정책질의

(10시32분 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사 간 기합의된 바에 따라 공청회 생략 및 소위 구성 등 의결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결산 공청회 생략의 건

○위원장 한병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84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결산에 대한 공청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촉박한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간사 간 합의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3분)

○위원장 한병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동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간사 간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4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 3인으로 하며 각 교섭단체의 추천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 간사이신 박형수 위원님께서 맡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소위원장(박형수) 인사

○위원장 한병도 방금 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형수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박형수 위원입니다.

결산심사소위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결산심사는 한 해 동안의 예산을 제대로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한 치의 허투루 쓰임이 없도록, 세금이 한 치도 허투루 쓰이는 곳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를 하고 결산심사를 통해서 그동안 정부에서 제대로 지출했는지 여부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감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은 각 교섭단체에서 제출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별심사를 마치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저희 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이후 아직 위원님 간 인사를 못 하였기에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인사는 가장 앞 열에 계시는 유영하 위원님부터 시작을 해서 이어서 옆으로 이동을 하되 한 줄이 끝나면 바로 그 뒤에 계시는 위원님께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편하게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榮夏 위원 안녕하십니까? 대구 달서갑의 유영하입니다.

주어진 책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안녕하십니까? 영주·영양·봉화 지역구의 임종득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예결위 다시 맡게 됐는데 우리 귀중한 국가 예산들이 제대로 편성되고

또 운영되는지를 잘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저도 작년에 이어서 또 예결위 위원으로 역할을 다하게 됐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김용만 위원님.

○김용만 위원 경기 하남시를 김용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전종덕 위원님.

그렇게 즉 좌우로 돌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진보당 전종덕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결산심사를 처음 하게 됐는데요, 국가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결산하고 이 결산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에 그리고 국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민규 위원 서울 관악갑 박민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고양갑 김성희입니다.

정치의 본령이 자원의 배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국가의 행위 중에서 실제로 수치화될 수 있고 수치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예산과 결산입니다. 예산결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일 위원 청주시상당구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위원입니다.

잘 살피고 잘 따져서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한 푼까지 잘 살피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하게 돼서 기쁘고 잘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 김위상 위원입니다.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대구 중구남구 국민의힘 김기웅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안녕하세요? 창원특례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종양 위원입니다.

이번 시간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의미 있는 시간,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준영 위원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민의힘 배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계원 위원 전남 여수시를 출신의 조계원 위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요즘 여수 국가산단이 경쟁력을 잃고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마음이 많

이 무거운데요, 여수 국가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또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애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대표선수 임미애 위원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 위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윤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지 보편적인 의료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충남 천안을 이재관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광주 동구남구를 국회의원 안도걸입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는 데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수도권 2600만 명의 모항을 두고 있는 평택, 안보·평화·산업의 심장 평택을의 이병진입니다.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광주 동·남갑 정진욱 위원입니다.

나라의 경제와 살림이 가장 어려운 때 예결위원을 맡아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대한민국 기계산업의 요람이고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의 메카인 창원 성산구 민주당 허성무 위원입니다.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위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위원입니다.

국가재정이 방만하게 쓰이는 곳은 없는지 혹은 너무 박하게 집행이 되어서 할 일을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챙겨서 보고, 여러 위원님들 따라 많이 보고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근 위원**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민생부대표를 맡고 있는데 특히 민생예산에 대해서 철저히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 위원**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지난 3년 동안 예산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한 번은 점검해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 성남 중원구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일반산업단지가 만들어진 상대원동 하이테크밸리가 저희 지역구에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효능감을 느끼는 그런 예결산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현 위원** 강원 원주를 송기현 위원입니다.

국가가 다시 발전할 수 있고 민생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 예결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서로의 지혜를 잘 모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저도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예결위 동안에도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같이 잘 참작해 주시고 고민해 주셔서 지방이 실질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번 예결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많은 관심을 또한 부탁드립니다.

○**윤후덕 위원** 저는 경기도 파주의 국회의원입니다.

정부에서 오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야당 위원님들은 많이 봤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예결위 민주당 간사 맡고 있는 이소영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수 위원**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예결위 간사 박형수 위원입니다.

각자 자기 지역구 소개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네 군데라서 다 소개하면 한 30분 걸릴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또 민생이 제대로 챙겨질 수 있도록 예결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전북을 대표하고 있는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또 작년에 이어서 예결위를 맡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위원님들과 같이 일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 꼼꼼히 살펴서 잘못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원으로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호 위원**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구의 한기호 위원이고 국방위원입니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 와서 소외된 곳이 어디 있는지 또 우리가 미처 못 챙긴 곳이 어디 있는지 이런 곳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배 위원** 충북 충주 이종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돼서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서울 서초갑의 좋은 사람 조은희입니다.

정부 예산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천하람 위원님 인사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천하람 위원**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한병도 위원장님,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고 또 계속해서 성장하는, 우상향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쓰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니깐 저도 든든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를 못 하신 위원님들은 다음 기회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결위의 활동을 보좌해 줄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 및 심의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신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대영 전문위원입니다.

이동훈 심의관입니다.

다음은 최철민 심의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3.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4.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종합정책질의

(10시45분)

○**위원장 한병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정부가 원칙과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확인하고 정부의 잘못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묻는 한편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결산심사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민생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재정의 근본적 역할과 방향에 대하여 성찰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결산심사 시 정부의 재정집행 내용을 꼼꼼히 확인·평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 정부 측 관계자분들도 우리 위원회 결산심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일정은 오늘과 내일 양일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고 8월 27일에는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 9월 1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별심사 대상 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질의 접수와 관련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8월 27일 회의 산회 시까지,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9월 1일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질의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20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5분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와 일부 상임위 일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예결위와 상임위 양쪽에 출석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예결위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출석 문제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반드시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시고 회의 도중 이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물론 앞으로 진행될 부별심사까지 우리 위원회 전 일정이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존경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결산안 심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정부는 총 656조 6000억 원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예산을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자 했습니다만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선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가 겹치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재정건전성 유지를 우선함에 따라 저성장과 경기 부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고 민생의 어려움도 세심하게 돌보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정은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입니다. 이에 정부는 성과중심 재정운용을 통해 재정이 민생 안정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지속가능성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산심사가 국회와 정부가 함께 재정의 본질적 역할을 되새기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방향성도 함께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결산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소기의 정책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위원님들께서 주실 지혜와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올해 예산집행과 향후 국정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존경하는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개월간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2차 추경을 시작으로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마주하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었으나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다행히 최근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2024년 2분기 이후 지속된 부진 흐름이 반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추경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경기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경제는 지금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 정책에 AI, 바이오, 에너지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혁신과 성장을 가속화하는 초혁신 경제로의 전환을 담아 이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저성과 부문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하여 그 여력을 성과가 높은 부문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세제 개편과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 핵심전략 산업 중심의 효율적인 재정 투자를 통하여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겨 경제성장과 함께 세수 기반이 확대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만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회계와 2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535조 9000억 원으로 세입예산액 550조 원보다 14조 1000억 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529조 5000억 원이며 예산현액 554조 원 중 95.6%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이 6조 5000억 원 발생하였고, 다음 연도로의 세출이월액 4조 5000억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4458억 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공적자금 상환 기금 출연 및 채무 상환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입니다.

총 68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자체 수입과 여유자금 회수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118조 8000억 원이 증가한 1008조 5000억 원입니다.

세 번째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입니다.

총수입 594조 5000억 원에서 총지출 638조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 5000억 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년 대비 48조 6000억 원이 늘어난 1141조 2000억 원이며, 지자체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175조 원입니다.

네 번째로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따른 국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국가자산은 국민연금의 투자자산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09조 원 늘어난 3218조 4000억 원입니다. 국가부채는 국고채 발행 잔액 증가, 연금충당부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46조 2000억 원 증가한 2585조 7000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순자산은 전년 대비 62조 8000억 원 증가한 632조 7000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민생 안정과 국민 보건의료 지원 등을 위해 예산 4조 2000억 원 중 1조 6000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정부 결산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해 감사원장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존경하는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결산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 및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매년 국가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를 정리한 결산검사보고서를 지난 5월 30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 일반회계와 21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35조 9000억 원, 세출결산액은 529조 4000억 원이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4조 5000억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 원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등 68개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액은 각각 1008조 5000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수지는 43조 5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서 전년 대비 적자 폭이 6조 7000억 원 증가하였고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8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검사 결과 자산의 경우 취득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 총 2조 9000억 원의 오류가 확인되었고, 부채와 관련해서는 미래 지출예상액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등 총 1000억 원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류사항을 수정해서 반영한 자산은 3218조 4000억 원, 부채는 2585조 7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은 2조 3829억 원이 과소 계상, 물품은 16억 원이 과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류사항을 수정해서 반영한 국유재산은 1344조 5000억 원, 물품은 16조 5000억 원이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말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1141조 2000억 원으로 전년도 1092조 5000억 원에 비해 48조 7000억 원이 증가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8%로 전년 대비 0.7%p 감소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가채권은 576조 7000억 원, 정부보증채무는 11조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기획재정부 등 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사한 결과 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한 사례 그리고 성과지표의 실적치를 계획서와 다르게 측정한 사례 등 총 15건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이를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원 감사활동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2024회계연도에 136개 기관에 대한 결산검사 또는 기관정기감사를 실시하였고 74개 사항의 성과감사, 특정감사와 국민제안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 결과는 국회의 예결산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산검사보고서에 수록해서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2024회계연도 중 국회에서 감사 요구한 역사교과서 검정 절차에 대한 감사 등 20개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결산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감사원 감사 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존경하는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감사원에서 보고한 2024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정부의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 국가결산에 대한 감사원 검사 결과는 5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감사원이 해당 기관에게 처분을 요구한 144건 중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88.9%에 해당하는 128건은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1.1%인 16건은 조치 중입니다. 조치 중인 16건을 내용별로 보면 변상판정이 1건이고 징계요구가 14건이며 시정요구가 1건입니다. 조치 중인 사안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이 책임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결산 업무가 더욱 적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24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현황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서 아직 인사를 못 하신 위원님들 인사를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인사말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부산 사상구에 지역구를 둔 김대식입니다.

한병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그리고 국무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서로 협치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병도 다음 차지호 위원님.

○차지호 위원 경기도 오산시 차지호입니다.

AI나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예결위 업무에 대해서 집중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다음은 정대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4회계연도 결산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검토입니다.

먼저 2024년 재정운용의 경제적 성과입니다.

성장 측면입니다.

2024년 세계경제 회복세를 바탕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였음에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는 우리 경제의 내수 부진이 당초 예상보다 심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더불어 과거 민간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성장이 견인된 측면이 있으나 최근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정체되면서 민간 성장기여도 하락이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0년간 사례를 보면 재정 지출의 규모와 정부의 성장기여도 사이에 직접적인 연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부의 성장기여도 제고를 위해 재정 규모 외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민생경제 어려움 완화를 위해 재정의 신속 집행을 추진하였으나 2024년과 같은 상고하저의 경기 흐름에서는 오히려 경기변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므로 향후 경기 전망에 따라 재정의 신속 집행 시행 여부와 규모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고용 측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요 고용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와 시간제근로자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고용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

16쪽입니다.

또한 실업률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정부는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실시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17쪽, 재정수입, 연례적 세수 오차 발생 및 대응입니다.

2024년에도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세입결손이 발생되었고 2025년 제2회 추경에서도 10.3조 원의 세입경정을 실시하는 등 연례적으로 세수 오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국세수입 및 국세외수입의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입니다.

국세수입의 경우 2021년 이후 4년간 오차가 최근 10년간 오차 규모의 71.7%에 달하는 등 세수추계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므로 정부는 주요 거시경제 변수의 급격한 변동 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입예산안의 적정성 검토 도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 국세외수입도 절댓값 기준으로 오차 규모가 38.8조 원, 오차율은 22.8%에 이르고 있으므로 정부는 국세외수입 예산안을 기계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국세외수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수결손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불용 처리한 것은 국회가 요구한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사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세수결손을 대응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하고 있으나 원활한 외국환거래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을 세수결손 대응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쪽, 조세지출 정비입니다.

2년 연속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등 어려운 국세수입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는 비과세, 감면 등 조세지출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국회와 함께 조세지출의 신설 및 연장에 대한 통제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쪽, 재정 지출, 4대 중점투자 분야 분석입니다.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민생안정, 경제활력, 국민안전, 미래대비라는 목표하에 4대 중점투자 분야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20대 핵심과제를 제안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입니다.

정부는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를 기조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사업에서 기존 사업과의 중복, 사전제도 설계 미흡, 현장 수용성 부족 등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입니다.

정부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투자 준비를 위해 혁신 기반 산업 경쟁력 확보, 에너지 시스템 효율화,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추진하였으나 사전 준비 부족과 미흡한 사업관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실적이 부진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사례가 일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수출을 지원하며 지자체와 민간 중심의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하였으나 펀드 결성 지연에 따른 투자 미흡, 수요예측 실패 등으로 인해 당초 기대한 정책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을 뒷받침합니다.

정부는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및 ODA 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재난안전사업에서 사전 협의 없는 예산편성 및 이연 집행 등이 나타났고 급격한 ODA 예산 증액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과 재원 배분의 합리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8쪽, 재정 지출, 재정 정상화 관련 분석입니다.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중점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3조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국가연구개발과 보조금 예산을 중점 정비 분야로 지정하였습니다.

먼저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 및 내역 공개 필요입니다.

정부는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 및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지출구조조정이 지출 효율화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그 세부 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연구개발 예산 감액 편성입니다.

정부는 2023년 3월 수립한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준수하지 않고 R&D 전체 예산 및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예산을 2024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수립한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수정한 것으로서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R&D 사업은 법령상 규정된 성과나 추진 현황에 대한 평가 없이 예산이 감액 편성됨에 따라 매몰비용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재정비 검토입니다.

정부가 전체 보조사업에 대한 재정비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고보조사업 중 유사 중복, 집행 부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정비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3쪽, 주요 주제별·유형별 검토입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의 국가재정 내 편입 필요입니다.

저성장 및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제약된 재정 여건하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나 건보 재정의 수입·지출이 적절한 외부 통제 없이 정부의 일방 정책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여타 4대 보험과 같이 건보 재정의 기금화를 통한 국가재정 편입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즉 보험료율과 수가 등 국민건강보험의 주요 사항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정부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결정되고 있으나 전 국민이 의무가입 대상이고 보험료가 사실상 준조세 성격을 가지며 수가가 건보 지출의 9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건보 재정의 주요 사항에 대한 결정은 국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민주적 통제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비상진료대책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공공정책,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성 지원금, 복지정책 성격의 시범사업 등 국민건강보험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별다른 통제 없이 건보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재정지출에 대한 책임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통합재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복지지출 비중의 과소 추계와 더불어 총지출 규모에 혼선을 초래하므로 기금화를 통해 국가재정으로 편입하여 통합재정의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공공기관 결산 검토입니다.

첫째, 자본잠식 상태인 아래의 3개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 중인 비핵심 자산을 조속히 매각하고 사업관리를 체계화하는 등 정부의 철저한 점검과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정부의 정책 결정 등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으로 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보전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셋째, 일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복리후생제도를 노사 협의 등을 이유로 운영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넷째, 일부 공공기관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40쪽입니다.

투자지원 사업 검토입니다.

첫째, 모태펀드 일부 투자 분야에서 정책 출자 비중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민간자금의 마중물이라는 사업 목적을 감안하여 민간 출자 비중이 제고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모태펀드 중 일부 자펀드의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이 정책자금 출자 비율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어 국가재정이 자펀드의 주목적에 투자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이 최소한 정책자금의 출자 비율보다는 높게 설정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동일한 분야 내 자펀드 간 기준수익률에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운용사의 수익률 제고 유도 및 민간 출자자의 유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분야별 기준수익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일부 정책펀드 사업은 자펀드 결성 및 투자가 지연되어 출자된 정책자금이 모펀

드 내에서 장기간 유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펀드의 신속한 결성 및 조기 투자를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44쪽, 빈집 사업 검토입니다.

현재 빈집 정비를 위해 범부처적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나 사업 간 유사성, 법령상 중복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TF 방식의 한시적 협의 구조를 넘어 명확한 주무부처를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빈집정비 사업들도 행정절차 지연, 사업계획 변경, 사업 중복 등으로 집행 부진 및 정책효과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일원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6쪽, 인공지능 관련 사업 검토입니다.

정부는 기존 산업이나 서비스에 AI 기술을 단순히 적용하는 형태의 투자를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 역량의 적용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 AI 산업 전반에 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2024년에 수행된 일부 AI 사업은 사업관리가 미흡하거나 결과물의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개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재정제도 개선과제입니다.

첫째, 2024년 기준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당시 배분 비율과 사실상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재정 여건과 지출소요 변화 등으로 인해 복권기금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0쪽입니다.

둘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 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일부 공공기관들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어 관리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합리적인 지정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1쪽입니다.

51쪽은 검토보고의 주요 분석 내용을 요약해서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 대구 중구남구 국민의힘 김기웅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정상회담하고 관세협상 관련해서 외교부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께서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배석을 못 하시고 미국으로 급히 가셨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국무장관 만났는데, 어느 측에서 먼저 요청을 한 겁니까? 우리 측에서 만나자고 한 겁니까, 미국의 국무장관이 만나자고 한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양측 간의 협의를 거쳐서 가셨습니다.

○**김기웅 위원** 아니, 먼저 얘기한 쪽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상적인 것은 아니니까. 왜냐하면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 대사가 없는데 배석도 해야 되고 현지에서 할 일이 아주 많으신데 그걸 제치고 미국 갈 때는 급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상황 전체를 한번 종합 점검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만나고 나서 발표문을 보니까 주요 의제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부분, 대만해협 관련한 주한미군 역할 확대 그다음 방위비 분담 증가 문제, 농산물 관련한 협상, 이게 주요 의제라고 미국 국무부가 디브리핑을 한 것을 읽었거든요. 맞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한미동맹 현대화 또 관세 문제, 경제 또 통상 문제 또 앞으로의 기술 협력 이런 부분 전반이 다루어집니다.

○**김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자세한 내용은 말씀하실 수가 없을 것 같고.

좀 접근이 있었나요, 아니면 별로 접근이 안 됐나요? 그것도 말씀하시기 어려운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지금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김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시는 걸 좀 여쭙볼게요. FTA 관련해서 여쭙볼게요.

외교부 국제법규과가 조약에 대해서는 유권해석할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FTA에 대해서 지금 유효하다, 사실상 형해화됐다 혹은 개정 중에 있다 이렇게 학자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평이 다른데 외교부차관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법적으로?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법적으로는 일단 한미 FTA는 유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상호관세라든가 이런 관세협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법적 검토를 조금 더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기웅 위원** 그런데 지금 상호관세 하는데,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게 미국 물건이 들어올 때는 FTA에 따라서 관세를 안 내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김기웅 위원** 우리가 나갈 때는 부품·품목별로 15% 이렇게 매기잖아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김기웅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지금 표 보시지만 저게 어떻게 상호관세입니까? 저걸 왜 상호관세라고 부르세요? 국민들이 헷갈리잖아요. 상호적인 게 아니지요, 저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미국이 전체적인……

○**김기웅 위원** 아니, 미국이 뭐라 부르든 우리 국민들한테 상호관세라고 하면 사실과 안 맞는 거잖아요. 저게 일방관세지 어떻게 상호관세예요? 그리고 미국 측에서 볼 때는 FTA는 그냥 아무 관세 없이 오니까 맞지만 우리 물건 나갈 때는 다 세율이 달라져 있

는데 그게 FTA가 형해화되지 않았다,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FTA 자체에 대해서 아직 뭐 무효화를 한다거나 그런 어떤 조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김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가 FTA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일단 저희가 법적 검토를 조금 더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위배된다면 미국 측에다가 FTA에 위배된다는 말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지금 한미 관계 전체로 상호관세 자체도 미 측에서 나름대로……

○김기웅 위원 얘기하신 적 있어요? FTA에 위배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미국 측에 얘기한 적 있냐 이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이게 경제……

○김기웅 위원 아니, 대통령께서 5000만 국민이 뒤에 있고 당당하게 임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건가요, 위배되는 얘기다 이렇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어떤 말씀을 하셨다 안 하셨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실무선 각급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레벨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김기웅 위원 그러면 미국 측에서 FTA에 대해 밝힌 입장이 있습니까, 한미 FTA에 대해서 유효하다라든가 이걸 고쳐야 된다라든가 폐기됐다라든가 이렇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사안, 각급 레벨에서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상호관세라든가 관세협상 위주로 지금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상호관세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면 이게 상당히 오해가 생긴다니까요. 왜 자꾸 국민들한테 상호관세라고 얘기를 하세요, 미국 물건 들어올 때는 세금이 하나도 안 붙는데?

그리고 지금 자꾸 말씀하시기 어려운 건 이해가 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협상을 잘 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데, 이게 우리 국민경제에 주는 부담이라든가 FTA를 개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국회의 동의, 뭐 비준동의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뭐 서면으로 된 것도 없이 말로 해 놓고 일방적으로 관세를 매기고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기본적으로 관세 합의 자체가 정치적 합의의 형태로 일단은 되어 있고요. 후속적인 조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기웅 위원 그런데 정치적 합의인데 실제로 관세는 지금 부과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니면 실제로 한미 FTA는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한미동맹의 주요한 근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신중한데, 그래서 이걸 선불리 다루지 않고 앞으로 미국과 잘 협의를 해서 이 근간이 잘 유지되면서도 좀 국익에 맞는 안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든가 설명을 좀 해 주면 좋은데 뭐 이렇

게 두루뭉술하면서 상호관세라는 말로 마치 서로 부과하는 것처럼 말을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정확한 얘기를 해 줘야 된다, 제 얘기는. 그것 국민들이 이해하거든요. 그것 이해 못 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만간에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겠습니까마는 전략적 유연성이든 원자력협정 개정이든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굳이 설명 안 해도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바는 정확한 것을 얘기해라, 자꾸 이렇게 덮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해가 자꾸 생기고 혼선이 생기니까 국민들에게 혼선이 생기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협상 과정을 다 공개할 수 없어서, 좀 그런 외교적으로……

○김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부별 할 때 다시 그 부분은 질의를 드릴 것이고요.

다음 질의는 국방부장관님께 최근 DMZ 내 동향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김기웅 위원 얼마 전에 북한군 MDL 침범이 있었고 우리가 경고사격을 했는데 지난해 6월이나 올해 4월에는 북한군 침범이 있고 나서 1시간 정도 후에 국민들에게 공개를 했거든요,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안보가 상당히 예민하고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도발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예의 주시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도발이 있었는데 국방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가 북한의 담화가 나오니까 발표를 했어요, 4일 뒤에. 19일이고 23일인데요.

4일 뒤 북한군 담화 후에 발표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전의 관행에 비추어 보면 MDL에서 총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국민들한테 즉각 발표할 때도 있었고 또 발표 안 할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런데 유사한 사례를 제가 봤더니 작년 6월과 올해 4월에는 1시간 뒤에 발표를 했던데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때는 여러 가지 MDL, 소위 말하는 두 국가론 이후에 국경화 작업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남측의……

○김기웅 위원 저 표를 한번 보십시오, 올해 4월에 했던 것.

○국방부장관 안규백 올해 4월에는 제가……

○김기웅 위원 저렇게 똑같은 상황인데 1시간 뒤에 발표를 했거든요.

이번에 발표 못 한 이유가 있냐 이거지, 하면 될 것을.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번에도 했습니다.

○김기웅 위원 예?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번에도 바로 즉각 했습니다.

○김기웅 위원 당일 날 했다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날……

○김기웅 위원 아니, 4일 뒤에 했다니깐요, 북한 담화 나오고 나서.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기웅 위원 그래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MDL에서 약 10m 월선했을 때 바로 했습니다.

○김기웅 위원 19일 날 침범을 했는데 저 발표가 23일 날 북한이 나오고 우리 합참이 다시 23일 날 저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국방부·합참에서 당일 날 19일 날 보도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침범이 있었다고?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13일 날 그날 바로 한 것으로……

○김기웅 위원 19일.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날……

○김기웅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군이 몇 명 넘어온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북한군이 최초에 7명 정도 월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전체지요, 7명?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김기웅 위원 우리 군은 수 명인데 유엔사에서 수십 명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합참에서 다시 처음에는 조금 확인이 잘 안 됐는데 확인을 했더니 수십 명이 맞다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러니까 저런 횡수가 좀 빈번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열 발의 충기를……

○김기웅 위원 아니요, 넘어온 사람이 몇 명이나, 넘어온 북한군이.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러니까요. 최초에 7명 왔을 때 저희들이 경고사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의 경고방송을 하고 바로……

○김기웅 위원 넘어온 게 수십 명은 맞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최초에 7명입니다, 7명.

○김기웅 위원 아니, 최초 뒤에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유엔사 발표가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면 수십 명이 맞는 거네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 뒤에 좀 일단……

○김기웅 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4일이나 늦게 했을까? 또 유엔사는 수십 명이라고 발표하는데 왜 우리 군은 수 명이라고 얘기할까? 이것을 보면서 뭔가 자꾸 축소하고 뭔가 감추려고 하는 것처럼 인상을 받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렇지 않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전 정권, 과거 정권에도 마찬가지였고요. MDL 총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안을 판단해서 즉시 할 때도 있었고 또 며칠 지나서 할 때도 있었고 또 아예 안 할 때도 있었고.

○김기웅 위원 또 북한은 보니까 우리보고 엄중한 도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반하장이라고. 우리 군은 그에 비해서는 좀 대응이, 발표 내용이 좀 약한 것 아닐까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래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왜냐하면 MDL 선상 10m 월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바로 경고사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은 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김기웅 위원 다음은 확성기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쭙볼 텐데요.

제가 알기로, 6월부터 최근까지 제 나름의 설명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어떤 일일 까.

지금 국민들은 이게 증설된 건지 철거된 건지, 숫자가 몇 개인지, 뗐다 붙였다 한다니 까 헛갈려 하시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그리고 여쭙볼게요, 중간에.

북한군은 대남 확성기가 40여 곳에 있는데 확성기를 조금 더 달기도 하고 혹은 때 가 지고 정비하기도 하고 이동 배치도 하고 이런 작업을 늘 해 오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김기웅 위원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 하면 7일 날 국내 언론에서 갑자기 ‘우리 는 철거했는데 북한군은 증설했다더라’ 이 보도가 나갔지요, 7일 날.

○국방부장관 안규백 7일이 아니고요 8월 9일입니다.

○김기웅 위원 7일 날 보도를 한번 보시지요. 이 보도 나갔습니다. 장관님, 보도 보시 고.

7일 날 저 보도가 나갔더니 갑자기 8일 날 합참에서 간담회를 요청했어요, 기자분들 오시라고. 왜 그랬겠어요? 우리는 확성기를 철거했는데 갑자기 북한군이 확성기를 증설 했다고 그러니까 놀란 거지요.

그래서 기자들을 다 불러서 간담회를 했는데 기자들이 물었지요. ‘7일 날 언론 보도가 맞습니까?’ 이랬더니 ‘세트가 는 것은 아니고 그 세트에 소형 확성기 몇 개를 더 단 겁니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기존부터 해 오던 그런 것이지 우리 철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확성기를 늘린 걸로 하시면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라고 간담회를 한 거지 요, 저게. 그래서 8일 날 보도가 저렇게 나갔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저 일정이 약간 다른데요. 8월 9일입니다. 8월 9일 날……

○김기웅 위원 9일 제가 말씀드릴게요.

7일 날 TV조선 보도가 있었고요. 8일 날 긴급히 간담회를 했어요, 국방부에서 오라고 해서. 저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합참에서. 장관님,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설 명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9일 날 다시 설명이 나왔어요. 9일 날 뭐라고 설명이 나왔냐면, 보십시오. 북 한군이 오늘 오전부터, 오전에가 아니고 오전부터 일부 지역에서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 는 동향이 식별됐다.

저기서 오늘 ‘오전에’라고 하지 않고요 ‘오전부터’라고 해서 마치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어요. 표현을 보면 급히 수습을 한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저도 부처에도 있었고 대통령실에도 있었는데. 8일 날 저 보도 나가고 나서, 7·8일 보도 이후에 우리의 확성기 철거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확

성기 증설하고 있다는 보도가 막 퍼져 나갈 때…… 오전에 보통 아침에 언론점검회의 하시지요, 부처에서?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합니다.

○김기웅 위원 장관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김기웅 위원 장관님이 직접 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직접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보고받습니다.

○김기웅 위원 차관이 하시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김기웅 위원 제가 예상을 해 보니까 7일·8일 보도가 나오고 나서 안에서 많이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확성기 철거하고 이러는데 북한이 말이야 같이 호응은 못 할망정 증설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가면 어떡하냐. 도대체 이게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다 보니까 9일 날 아침에 언론점검회의를 하면서 아마도……

정무수석님 나와 계십니까라는 대통령실에서도 언론점검회의 하시지요, 아침에? 비서실장 주제로 하시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우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9일 날 아침에 아마도 많이 요란했을 것 같아요. 정신들이 있다 없다부터 해서 사실관계가 뭐냐, 대응해라라는 지시까지 있었을 것 같고. 부랴부랴 9일 날 오후에 합참에서 다시 문자를 띄웁니다. 문자 내용이 뭐냐 하면 2개소에서 철거하는 게 아까 전에 보이고, 오늘 오전부터 하고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확산될지는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데 2시간 뒤에 북한이 하나를 다시 추가로 재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루틴하게 개들은 늘 하던 것, 자리 재배치하는 것, 더 달고 이런 것들을 늘 하고 있던 일을 우리 언론과 여기에서 지금 대응을 하다가 약간의 해프닝이 벌어진 거다. 그러더니 결국은 대통령실에서도 나중에 보면……

김여정하고 비교한 것 한번 띄워 보세요.

그러다가 국무회의 때 12일 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북측에서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그런데 김여정이가 ‘철거한 적 없다’. 그러니까 누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냐, 거짓말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진실게임처럼.

나는 이게 누가 거짓말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시점에서 북한이 하나 철거한 건 맞는 거고요. 다만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다 철거인지 일부 철거인지 증설한 건지는 시간을 갖고 좀 신중하게 봐야 되는데 일단 급하게 그냥 ‘하나 철거한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거고 그걸 보고 또 국무회의 때 ‘철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김여정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걸 철거한다거나 하는 계획은 없었는데 전방에서 늘 하던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남측에서 철거했니 안 했니, 호응하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웃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위성락 실장도 얘기를 했지만 그냥 그 자체 그 시점에서 보면 틀린 말들은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짓말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안보 사안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특히 북측의 동향을 평가하는 것은 뭐 하나 번쩍했다고 ‘아이고, 이것 번쩍했네’라고 하시면 안 된다. 우리가 선불리 하면서 김여정의 저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진중하게 보시고 추이도 좀 보시고 이런 게 있는데 좀 지켜보자라든가, 뭐 급하게 우리 조치에 호응했다고 그렇게 언론에 얘기를 해야 우리 대북정책이 힘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혼란스러울 뿐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FTA도 그렇고 확정기 또 북한의 도발도 그런데 앞으로 한미 관계든 외교관계에서도 또 우리 안보 사안에서도 아무리 초반에 성과를 내는 데 좀 급하고 마음이 급하실 수 있겠는데 그게 우리끼리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이. 그런데 우리만 급해 가지고 저렇게 계속 국민들에게 뭘 던지면 국민들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옳다 그르다, 진짜다 가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외교부든 국방부든 외교·안보 부처에서, 특히 한미 정상회담 지금 이루어지고 하는데 앞으로도 어떤 북한의 반응을 평가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좀 신중하게…… 그리고 좀 지켜보자 하면 될 일을 뭘 벌써 철거했다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또 저렇게 이상한 김여정 말이 나오게 하고 꼴이 우스워지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에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좀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은 잘 모르실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 지역 관련해서 대통령 공약 사항이긴 한데, 대구에 순환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있는데 3차 순환도로가, 저기 보십시오.

92년에 시작이 돼 가지고, 지도를 보시면 한 900m지요. 900m가 지금 안 뚫렸는데 30년째 순환도로가 개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30년 됐는데 저 900m, 제가 현장에 가 보면 그 뒤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담을 조금 뒤로 밀면 대구시민들이 굉장히 편하게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900m, 캠프워커 담 뒤로 10m 미는 게 30년째 안 되고 있다. 이건 외교부에서도 SOFA 과제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외교부하고 국방부에서 저희 대구시랑 잘 협조하셔서, 대선 때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이니까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번 잠깐 설명드리면 95년에 SOFA 과제가 됐고 동편은 이미 정리가 됐고요. 서편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좀 늦어지고 있는데 동편은 이미 10월에 준공합니다. 그런데 한 900m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제가 현장 가 보니까 담만 조금 뒤로 밀면 되는 일인데, 하여간 실무진에게 맡겨 놔더니—저도 회의해 보니까—굉장히 지지부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외교부하고 국방부에서 장관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거 대통령 공약이시니까 조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역구 의원으로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웅 위원** 예, 하십시오.

○**국방부장관 안규백** 확성기 철거 문제와 관련해서 8월 9일 이전에는 특별히 식별된 게 없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TV조선에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8월 9일은 특별히 식별된 게 없고 8월 9일 날 오전에 2개가 세트가, 한 세트에 보통 이삼십 개 있는데 그게 2개가 철거됐고 철거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브리핑을 하니까 오후 상당히 늦은 시간에 거의 일몰이 끝날 무렵에……

○**김기웅 위원** 추가가 됐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했고 그 이후에 8월 21일에 중부전선에다가 또 2개 추가 설치를 한 내용이 팩트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기웅 위원** 팩트는 저도 아는데……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러니까 8월 9일 이전에는……

○**김기웅 위원** 하나 또요.

그러면 9일 날 추가 설치를 계속한 건 왜 문자메시지로 안 알려 줬어요, 철거한 것만 얘기하고?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걸 일일이 미주알고주알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아직 인사를 못 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요.

짧게 인사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종면 위원님 짧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마이크가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다음은 황정아 위원님.

○**황정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난해에 이어서 지금 2년 연속 예결위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참고로 오전 질의는 안도걸 위원님까지 하고 오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광주 동구남구를 국회의원 안도걸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을 대표해서 지난 한 해 나라살림의 실상을 살피고 또 그 공과를 따져

보고자 합니다.

금년 결산은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전 정부가 꾸렸던 나라살림에 대한 총괄적인 성적표다. 그리고 또한 새 정부가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상속받은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결산에 대해서 주로 총리님과 또 경제부총리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결산, 작년 나라살림의 특징,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세입은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기반이 붕괴가 되었다. 세출은 초긴축 재정과 재원 분배 실패 그리고 독단적인 재정운용의 반복이 있었다. 셋째로 전 정부가 전가의 보도로 삼았던 재정건전성, 결코 지켜 내지 못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은 모든 정책을 마비시키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만 정작 본인의 정책 목표는 전혀 달성을 못 했습니다.

총리께 여쭙기 전에, 이러한 정책 실패의 결과는 참담하지요. 우리 경제는 역대급 저성장에 빠졌습니다. 성장률은 0%대로 추락했지요. 서민경제는 내수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질식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무려 97.5조 원에 달하는 국세 결손으로 나라 곳간은 텅 비고 세수 기반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이러한 총체적인 재정운용의 실패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총체적으로 보면 객관적 상황 자체가 어려웠지요. 그러나 주체적 대응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봅니다. 경기둔화로 해서 기업 실적도 안 좋고 또 토지 거래가 안 좋으니까 자산시장도 부진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 세 인하를 유지해야 되는 면들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감세정책 등에 너무 집착하면서 세입 기반을 약화시킨 것이 재정에 있어서 무리를 가져왔다. 결국 성장의 어떤 불씨를 살려 내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봅니다.

○**안도걸 위원**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경제철학 그리고 총리께서 지적하셨던 경제 현실에 대한 오판 그리고 엇박자 정책 처방이 만들어 낸 합작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했던 현실은 분명했지요.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글로벌 산업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분명했습니다. 세수를 튼튼히 확보하고 적극적인 재정으로 국민의 삶을 지탱하면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 정부는 현실을 외면했지요. 시장이 알아서 한다는 낡은 자유방임론, 일시적 기저효과에 취한 근거 없는 경제 회복 낙관론에 집착했습니다. 그 결과 전 정부가 선택한 정책 처방은 국민과 시장의 요구와는 정반대의 길, 즉 부자감세와 초긴축 재정으로 이어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 처방이 불러일으킨 나라살림, 얼마나 어렵게 되었는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재정건전성,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전 정부 3년 동안 발생한 세수결손이 97.5조 원입니다.

지난 한 해 30.8조 원의 세수결손이 추가되었지요.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123조가 넘

는 초과세수 숫자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참담한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세부담률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작년도 조세부담률 17.6%에 불과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어렵게 끌어올렸던 22.1% 수준에서 3년 만에 8년 전 수준으로 후퇴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 OECD 평균 수치가 25%입니다. 물경 7.4%나 낮습니다.

게다가 조세형평성도 완전히 무너졌지요. 지난해 근로소득세 64조 2000억입니다. 법인세가 1000억 원 더 많습니다. 처음으로 넘어선 겁니다. 국세 집계 이래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선 사상 최초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역대급 세수 핑크가 난 23년도에도 법인세가 더 많았지요. 그런데 작년은 완전히 세수 기반이 무너지고 과세형평성마저 훼손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왜 직장인은 세금을 더 내고 대기업은 감세 혜택을 받습니까?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세수 기반과 과세형평성이 동시에 무너진 이유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경제를 살릴 때는 적극적인, 세출을 늘릴 때는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줄일 때는 줄여야 되는데요. 단계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너무 재정건전성만 유지하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되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재정운용은 그때의 경제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재정운용이냐 하는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봐 주면 오히려 과감한 투자가 또 성과가 나면 경제성장에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도결 위원 맞습니다.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균형 잡힌 진단과 처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 정부는 이렇게 하지 못했지요.

첫 번째로 저성장 국면을 방치해 버렸습니다.

지난해 1분기 반도체 수출 덕분에 또 그리고 기저효과 때문에 1.2% 반짝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시 정부는 모든 것이 정상화됐습니다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2분기부터 민간 소비와 투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세수 기반이 동시에 무너져 버린 것이지요.

두 번째, 무분별한 부자감세 정책입니다.

전 정부가 추진한 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 규모는—5년 누계 기준이거든요—84조 원에 달합니다. 시행령 개정 효과까지 포함하면 약 90조에 육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 정부가 감세 명분으로 내세웠던 투자·소비 진작 효과는 정녕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오히려 작년도 투자증가율은 22년 대비 -5.6배, 성장기여도는 2.3배나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낙수 효과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손에 남은 것은 역대급 세수결손이었지요. 법인세만 보더라도 22년 대비 40%가 줄어 버렸습니다.

당시 정부가 22년도 법인세율을 1% 인하하면서 큰소리를 쳤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4조 원 정도의 감세효과는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연 7조~8조 원의 성장세수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근거 없는 공허한 구호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나라 곳간을 물려받으시고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너진 세수 기반 그리고 과세형평을 가지고는 나라살림이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35조 넘는 세제 개편을 단행을 하신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맞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 규모가 걱정했는지 보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지출 증가율이 2.8%, 아주 역대급이지 않습니까? 초긴축적으로 책정을 좀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도 중에 설상가상으로 30.8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거지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세출 삭감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상 총지출 증가율은 -0.1%입니다. 그리고 재정의 성장기여도는 0.5%p에 그쳤습니다. 10년간 장기 평균치가 0.8%p거든요. 여기에 크게 미달하고 만 겁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는 뭘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해서 경기하강을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성장을 잠식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크지요.

다음으로 재원 배분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첫 번째가 국가경쟁력의 뿌리인 연구개발 예산을 4조 6000억, 15%나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4대 과기원에서만 연구인력 950명이 이탈했습니다. 기초연구과제 수도 20% 이상 줄었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구 역량이 훼손되면서 연구 생태계가 무너졌지요. 공든 탑은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 복구에는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ODA 예산 문제가 큼니다. 검증되지 않은 설익은 예산들이 집중적으로 반영되면서 전년 대비 32%가 늘어 버렸습니다. 특히 유상차관인 EDCF 사업은 사업 승인도 받지 않은 51개 사업이 무더기로 예산에 반영되었고, 그런데 실제 집행된 것은 단 3건에 불과합니다. 정치적인 고려가 예산 배분을 왜곡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청년 연구자는 일자리를 잃고 기초과학은 뿌리째 흔들리는데 준비도 안 된 해외차관 사업 등 ODA 예산이 급증한 것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ODA 사업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작년 일부 ODA 항목 가운데 과하게 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조사 중입니다. 관련한 부분 중의 일부는 특검에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 면밀한 분석을 요망드립니다.

다음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파행적 재정운용이 반복되었습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 없이 독단적으로 30.8조 원이라는 세수결손을 했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결손액 중 14조 9000억 원은 기금 등 돌려막기로 충당했고 나머지 14.7조 원은 강제 세출을 단행했습니다.

세출 삭감을 보면 지방교부금 6.5조 원을 삭감했고 교통·환경·지역균형 필수예산을 줄

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특히나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등 필수 민생 지출이 삭감될 수밖에 없었고 재정운용의 예측성과 신뢰성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67개 기금을 탈탈 털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줘야 할 돈들은 줄였어요. 그리고 거꾸로 기금에 상환해야 될 자금은 만기 연장이라는 방법으로 세수결손 재원으로 끌어다 썼습니다.

외환 안정용 예비 실탄인 외평기금 재원은 2년간 세수결손에 동원되면서 이 금액이 67.4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원화가 강세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외환 대응 능력을 그만큼 약화시켜 놓은 꼴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금 재원을 끌어다 쓰면서 국회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서 만기 연장이라는 꼼수를 좀 동원을 했습니다. 기금 재원은 공짜로 가져다 쓰는 게 아니지요. 2~3%의 이자를 또 지불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266억 원의 추가 이자 부담도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산재기금 같은 경우는 여유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산운용을 좀 하고 있지요. 이러다 보니까 뺀 돈만큼 8% 이상 운용수익률 상실이라는 기회비용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반복된 것은 바로 이렇게 30조 원 넘는 예산을 행정부가 국회 심의 없이 임의대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확정 권한이 심히 훼손된 것입니다.

부총리님, 국회가 매년 차년도 정부예산 심의하지 않습니까? 증감액이 통상 얼마 정도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재정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한 4조~5조 정도 수준……

○**안도결 위원** 맞습니다. 그것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부가 임의대로 23년도에는 56.4조 원을 그리고 금년에 30조 원 넘는 돈을 독단적으로 세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문제 재발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건의를 했고 저도 관련 법안을 제출해 왔습니다.

총리님, 그래서 당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세수결손이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세입과 세출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님의 견해를 여쭙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와 유사한 내용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법을 제출하시면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함께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 정부가 금과옥조로 내세웠지요, 재정건전성. 전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수치를 보지요.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23년도에 -3.6%, 작년에 -4.1%입니다.

정부 스스로가 내세웠던 재정준칙 -3%를 훨씬 넘어선 숫자지요.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 3년 연속 초과했습니다. 이 제도는 2007년 도입 이후 금융위기나 코로나 때 단 몇 차례 예외가 허용되었을 뿐입니다. 3년 연속 버젓이 어긴 정부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실패, 모두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우리 경제는 4분기 연속 역성장이라는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소비, 투자 등 내수는 작년 내내 쪼그얼어붙었습니다. 이러한 내수 침체의 직격탄은 국민경제의 허리인 서민경제를 휘어지게 했습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작년도에 자영업자 폐업자 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작년에 처음으로 100만을 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안도걸 위원 아주 디테일한 숫자까지 알고 계시군요. 맞습니다.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1%가 3년 전에 비해 늘었습니다. 연체율도 0.55에서 1.88%로 3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재정운용 실패 이제는 그만두어야 되겠습니다.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총리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해 나라살림을 결산해 본 결과 우리는 한마디로 재정정책 실패의 교과서였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는 전 정부의 시행착오를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결산은 잘못을 묻는 자리를 넘어서 새 정부가 실천해야 할 교훈을 길러 내는 자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 여쭙습니다.

새로운 재정운용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소신을 밝혀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결국 한마디로 어떻게 성장을 회복할 것인가에 모든 집중점이 있다고 봅니다.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AI를 비롯해서 성장이 가능한 선도 역량에 집중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구조조정을 하는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 정부의 방향입니다.

○안도걸 위원 제가 생각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재정운용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은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전략적 기능을 다해야 됩니다. 저성장의 늪에서 신속히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이 경기부양의 마중물이 되어야 하고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AI와 에너지 전환, 미래산업 투자에 정부가 기업가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범국가적인 성장투자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국민의 세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고도 재원을 동원할 길은 있습니다. 그 왕도가 성장률 제고를 통한 자연 세수 확충입니다. 탈루소득과 체납세 징수 강화 그리고 3000조 원이 넘는 국민 순금융자산을 혁신투자 재원으로 이끌어 내야 합니다. 100조 원 국민혁신펀드 조성, 민간자본과 창의를 결합한 민자사업 확대 등도 서둘러야 합니다.

재정건전성 관리도 현실적이고 스마트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수치 관리를 매년

단기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경기 사이클에 맞춰 중기적으로 동태적으로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세수결손 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 추경을 편성하고 예비비도 당해 연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 결산은 과거를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재정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새 정부는 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재정운용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상의 존경하는 국민의힘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사상구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먼저 우리 총리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관계, 국익을 앞세운 지속가능한…… 이번에 23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17년 만에 공동선언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아주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자칭 일본 전문가로서 이 두 정상이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은 무척 환영하고 또 응원을 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닌 한미일 안보 협력,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국제질서의 과도기에 한국의 진로를 결정한 중대한 분기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과거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처럼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이제 과거를 잊으라는 게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되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들 국민들은 안심하고 믿어도 되겠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다 진심을 담아서 말씀하셨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속가능한 한미일 안보 협력과,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부문에서도 양국 간의 협력을 이재명 정부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변화한 국제 경제질서하에서 한일 양국 간 협력의 폭과 필요성이

넓어지고 있다고 양국 다 판단하고 계십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그동안 야당 대표 하실 때 정말 친일몰이 이런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굉장히, 그동안 하셨던 발언들을 내가 일일이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정권을 잡고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앞마당처럼 서로가 교류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것을 사과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필요한 지적을 과거에 했었고 지금은 현재의 시점에서 현재의 기초 위에서 앞으로 한일 간에 긍정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김대식 위원**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일본을 움직이는 7명이 있습니다. 제가 22대 국회 들어와서 1년 동안에 7명을 다 만났습니다. 우리 윤호중 행안부장관님하고 같이 가셔도 제가 만났고 이랬는데 앞으로 한일 관계는 정말 역사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야지요.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한미일 관계는 우리가 지정학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우측 감박이를 켜셨으니까 좌측으로 가지 마시고 우측으로 계속 가시면서 협치하고 또 우리 야당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좀 도와드리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협치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앞으로 가는 감박이를 잘 켜 놓고 가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총리님, 내년 첫 본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700조가 좀 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지요? 언론에 따르면 예산안 편성이 지금 막바지 작업 중인데 사상 처음 700조를 넘어서 730조에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임 정부가 2%대 증가율을 유지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9% 증가라는 확장재정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재정 씨앗론’이라 부르며 R&D, 인공지능(AI) 같은 미래먹거리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내년도 R&D 예산만 35조 3000억 원, 올해보다 19%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총리님, 씨앗을 뿌리려면 공간에 곡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곡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대식 위원** 현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두 차례 추경에도 불구하고 0.9%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수는 3년 연속 핑크가 났고, 아까 안도걸 위원님께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2023년에 56조, 2024년에 30조, 올해에도 이 결손이 예상이 됩니다.

세수를 책임지는 기업들이 실적은 부진하고 또 세입경정에 세금이 덜 걷히는 것을 반영해서 세입예산을 다시 정정하는 것만 10조 원을 넘게 반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국채 발행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습니다. 올해 국채 이자만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빚내서 예산을 늘리는 방식이 과연 투자입니까, 아니면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빚잔치입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아까 말씀 주신 종합적인 그러한 상황이 다 포함돼 있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지출구조조정 할 부분을 하면서도 성장의 씨앗을 살려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장에 집중하지도 못할 정도 수준의 재정정책을 과거와 똑같이 하기는 어렵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 위원님께서도 과거와 똑같이 하자는 제안을 주시는 것은 아닐 것으로 이해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확장재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분별한 현금 살포나 단기적 포퓰리즘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리님, 지금 같은 저성장·저세수 구조에서 730조 원의 예산 확대가 정말로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국무총리 김민석 반드시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로 이 정부와 경제팀이 예산과 재정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한 ‘재정 씨앗론’이 ‘빚잔치 씨앗론’이 될 것 같아 보여서 제가 하는 말씀이고. 씨는 뿌리지만 소득은 없고 수확은커녕 공간만 텅 비는 상황으로 전락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가 걱정이 돼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위기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대만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4.45%로 상향했고 반면 IMF는 한국 성장률을 0.8%로 하향했습니다. 같은 글로벌 환경 속에서 대만은 AI·반도체 수출로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를 열었는데 한국은 10년째 3만 달러에 갇혀 있습니다.

대통령은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민생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물가는 고공행진 중이고 외식 물가 품목 39개 중에서 38개 품목이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보기가 어렵고 외식하기가 두렵다는 것이 지금 제 지역구에 돌아보면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 물론 윤석열 정부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반성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전환시킬 수 있는, 이재명 정부를 국민들이 지지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주안점을 두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청년 고용률 마찬가지로입니다. 냉각기입니다. 전년도 대비해 0.7% 하락했고, 취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가정을 지키고 젊은이들이 한탄합니다.

제가 35년 동안 교수, 총장을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하고 끝없이 노력하고 했습니다. 저는 어렵고 힘들면 우리 정부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 복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구윤철 부총리님 계시지만 기재부에서도 정말로 대통령과 우리 정치권에서 이러한 정책으로 나간다고 할 때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이것만큼은 아니다’ 하는 것으로써 정말 충실하게 충언을 해 주는 것이 공직자의 입장이고 우리

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세수 펄크 맞추기 위해서 정부가 올해 지난달 말까지 한은에서 자금을 얼마 빌렸습니까? 114조 원,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다시 오릅니다. 진보 정권이 잡으면 아파트값이 오르고 보수 정권이 잡으면 아파트값이 내리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날 정부가 내놓은 대출 규제, 실수요자 주택 구입 이것은 어려워지고 전체 수요는 과잉 공급 현상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시장 곡소리 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지가 않고 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 정부에서 그것의 대책을 정확하게 내놓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은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 현장에 답 있다. 답은 정석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늘려 국가의 부를 늘리는 것.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하시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을 찾아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호체계 누가 제일 압니까? 국토부에서 제일 압니까? 아닙니다. 택시기사들이 정확하게 압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실천하는 그런 국무위원들이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법인세 인상, 좋습니다.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다음에 규제 강화,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으로 온통 지금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일자리를 기업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9988, 99%의 중소기업이 88%의 고용을 창출하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겠느냐 이거예요.

총리님,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아주 중요한…… 제가 부산 사상구에서 출마를 할 때 ‘저는 절대 싸우지 않겠다. 나는 여와 야와 협치하겠다. 통합하고 화합하고 협치하겠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아주 좋으신 말씀 하셨어요, ‘나를 반대했던 우리 국민, 나를 찬성했던 우리 국민, 다 우리 국민이다. 함께 가겠다’. 나는 박수를 쳤습니다. 대통령께서 통합과 협치,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금 제대로 듣고 계시는지, 기업과 시장 현장의 목소리는 국민 통합의 대상이 아닌지, 현장에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당에서 노란봉투법이고 뭐고 더 센 상법 해 놓고 이렇게 다 통과시키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여당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모두가, 보수도 우리 국민이요 진보도 우리 국민이고 한국노총도 우리 국민이고 민노총도 우리 국민입니다. 한쪽에만 치우쳐서 저는 이런 목소리를 반영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께서, 저는 이재명 정권이 국가를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통합 화합 협치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국무총리 김민석 답변을 해야 되나요?

○**김대식 위원** 제 말에 뭐 한번……

○**국무총리 김민석** 대통령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저도 김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에 야당 대표들을 찾는다든가 또는 초대한다든가 대화한다든가, 심지어 새로운 정부를 운영하면서 과거 정부에서 함께했던 분들도 함께했다든가 하는 노력을 한 것을 직접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업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관세협상에 대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허심탄회하게 기업들과 함께 여러 가지 국가경제와 관련된 전략도 논의하고 지금 현재도 미국에 함께 가 계시고 그 외에 어떠한 과제든지 필요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노동뿐만 아니라 산업계와도 열어 놓고 대화를 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을 아실 겁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총리님하고 개인적으로는 참 친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대화도 나눠 보고 이렇게 했는데 총리님 생각도 굉장히, 지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아주 바르게 가야 되고 협치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저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좋아요. 대기업들이 대통령을 수행해서, 지금 한미 관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같이 동행해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하겠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그게 맞는데 뒤쪽에서는 악법 같은 이런 것이 이렇게 나오고 1년만 유예를 좀 해 달라 이런 애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좀 속도 조절을 해 가면서 해야 된다.

아니, 대통령 정책실장이 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해 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바꾸면 되지 않느냐. 이런 정책이 어디에 있어요? 우상호 정무수석님 오셨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발언이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기업에게도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언행이 야당 할 때하고 여당 할 때하고 달라요. 지금 민주당은 거대 집권당이고 또 정권을 잡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에게 좀 따뜻하게 하고 설득하고 타협하고 이래야 되는데,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데 참모진들이 그렇게 찬물을 끼얹으면 어떻게 국민들이 믿겠어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서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정부는 1차 추경 13조 8000억, 2차 추경 31조 8000억, 45조를 넘게 풀었지만 성장률은 0%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추경의 핵심인 13조 2000억 규모의 민생소비쿠폰 효과는 경제성장률 0.1%에 불과하다는 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 KDI 평가입니다.

총리님, 45조 원을 써서 경제성장률 0.1%를 올렸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2017년도부터 강조해 온 호텔경제학의 실력입니까, 쿠폰주도성장의 성과입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이번 민생소비쿠폰의 결과를, 그 성과를 0.9%에 포함되어 있는 0.1% 성장의 추가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좁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뽐뽐 얼어붙어 있는 소비심리를 풀어내고 절망적인 어떤 민생의 기대심리를 살려 내는 것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새로운 선순환의 시작으로서의 의미가 더 큰 것이 아닌가 싶고, 1차·2차 소비쿠폰을 지나고 실질적으로 성장과 관련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 말씀 주신 것과 같은 성장률에 과연 기여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인건비·자재비 상승, 중대재해처벌법 충격, 지방 악성 미분양,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만 반복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추경만 반복하는 일을 앞으로는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국민은 힘들게 미래세대에 빌린 빚씨를 뿌리기 전에 논의 물질은 제대로 뚫었는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재명 정부가 탄생을 했고 이제 내각이 전체가 구성되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정책……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아니다 이러면 아닌 것이지요.

총리님,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좋은 것이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많이 팔리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총리님도 정말 암행어사 역할을 하시면서 민생을 한번 돌아보시고 전국을 한 바퀴 도시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업 또 서민, 시장 이런 데 가서 경청을 하면서…… 아니, 민주당의 캐치프레이즈가 경청이지 않습니까? 경청을 하시면서 한번 국정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말씀 주신 경제적 어려움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지난 정부 시기로 부터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 주신 것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경청하면서 책임감을 갖고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 나중에 추가……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 위원** 김민석 총리님, 지난 21대에 보건복지위원장 하셨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김윤 위원**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으시고 또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애정도 있으셔서 보건복지 정책을 주로 전공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몹시 든든합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한순간에 멈춰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집과 불통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결과 지역·필수의료가 무너졌습니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의대 증원을 추진했는데 지역·필수의료 체계가 역설적으로 무너지고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대란 초기 6개월 동안 약 3000명의 초과 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3000명이 의료대란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한 응급환자들, 치료 공백 속에서 방치된 요양병원의 환자들,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의대 증원의 결과 생긴 필수 의료 붕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지난 정부는 약 3조 원가량의 건강보험재정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돈,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의료대란이 보건의료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불통 국정 운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변화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문제를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에서 문제를 푸는 방식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을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결국 복잡한 전문성이나 기술도 있겠지만 국민과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인데 지난 정부의 의료대란 문제는 그 가장 기본의 기본이 되는 것을 놓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윤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총리님, 지난 8월 14일에 환자·시민단체들이 의대생·전공의 복귀에 대해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는 복귀는 특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과 환자 입장에서는, 제가 보여 드렸듯이 지난 1년 반 동안 의료 공백 속에서 가장 많은 고통을 받은 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대생·전공의의 복귀를 두 팔 벌려 환영하셔야 될 분들이 오히려 의대생·전공의 복귀가 특혜다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저는 이 배경에 사회적 화해와 치유의 과정이 생략된 채로 의대생·전공의가 복귀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공의·의대생들이 복귀하면서 국민과 환자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다시는 지난 정부에서처럼 정부의 의료 정책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병원을 비우고 학교를 비우고 떠나는 일은 없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으면 저런 성명서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 김민석**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이고요. 저 과정의 시작점에 제가 일정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전공의와 대학생들이 방향을 바꿔서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을 내는 시작의 대화를 할 때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연히 저도 이런 과정은 결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마음을 얻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분들이 다 그러한 마음을 또 표시했었습니다. 실제로 아시다시피 전공의들은 그런 표시가 있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의대생들의 경우에 그러한 논의를 하던 중에 내부 사정으로 비대위 자체가 해체되어 버려서 사과의 주체가 해체되는 묘한 상황이 돼서 굉장히 저도 아쉽게 생각을 했고, 이후에 확인을 해 보니 대학 중에 일정한 학교에서는 또 각 대학 학생회 이름으로 그런 어떤 죄송한 마음의 표명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정권의 잘못으로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풀 수밖에 없었고 푸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 주신 아쉬움이 남아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그런 것이 보완되도록 함께 노력을 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윤 위원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의대생·전공의들이 복귀하고 또 이후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국민과 환자들과 의대생·전공의들이 화해하고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갈등을 사회적으로 반드시 치유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5극 3특에 기반한 국가균형성장장이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국가성장전략이고 이 전략을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 중의 하나가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살기 좋고 매력적인 곳이 돼야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야 지역의 인구가 늘고 지역이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의료의 현실은 매우 참담하고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방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자기 지역의 국립대병원을 이용했을 때에 비해서 1년에 1인당 1400만 원의 비용을 더 부담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도권 병원과 지역 국립대병원 간의 진료비의 차이 그다음에 교통비, 기회비용 등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지방에 사는 국민들 전체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4조 6000억 원 정도의 비용을 지방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글쎄요, 그런데 우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가장 근본적으로 지역 격차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의료·문화·교육 세 가지의 격차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재 지역의 의사들을 오히려 수도권보다 상당한 더 좋은 처우의 조건을 제공할 때도 현재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사제 등등의 대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김윤 위원 그러니까 국민들이 수도권 병원으로 가는 이유는 지역에 믿고 갈 만한 병원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게 인력의 부족과 지방 대학의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투자 등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사제 등을 포함해서 굉장히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의료를 살리는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이런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저희가 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필수의료 특별법은 응급환자·중증환자 진료, 분만환자·소아환자 진료 같은 것들을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서로 협력체계를 맺어

서 그런 필수의료 분야의 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나라의 진료체계를 무한 경쟁, 각자도생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상생과 협력의 체계로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법에 대해서 총리님 들어 보셨는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말씀 들었습니다.

○김윤 위원 이 법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법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통과되어야 앞에 말씀드린 지역·필수의료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5극 3특 균형성장 발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총리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지역·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와 해결은 새 정부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논의를 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김윤 위원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지역·필수의료 특별법이 성공하고 지역·필수의료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역·필수의료 의료기관의 협력체계의 구심점 역할을 국립대병원이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립대병원이 그런 역할을 하려면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현재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 정부에 걸쳐서 그 문제가 지적이 됐고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옮기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이 꼭 성공되기를 바라는데 총리님께서 좀 책임지고 이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국립대병원의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오래 있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윤 위원 예.

○국무총리 김민석 이 문제가 정부 부처 내에서 이견을 갖거나 하는 것 때문에 어떤 하나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더 이상 차질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효율적인 논의를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위원 교육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아마 국회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고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제 역할을 해야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저희가 살펴봤더니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24년에 인구감소지역인 89개 시군구의 기금 실행행률을 확인해 봤더니 32.9%, 3분의 1을 채 쓰지 못했습니다. 금액으로는 7100억 원 중에 한 2300억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당연히 의료취약지입니다. 골든타임 내 응급의료센터 도달이 어려운 응급의료취약지가 79개 시군구이고요. 분만시설이 하나도 없는 분만취약지가 54개 지역입니다.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의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주 좋은 질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에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인구 감소를 줄이고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제안을 하고 그것을 평가해서 인구 감소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사업인데요, 지역의료시설 확충을 안 해 온 것은 아닙니다. 대략 매해 보면 한 6~7% 정도의 기금이 의료시설 확충에 쓰여지고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에 유독 한 3%대로 반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기의식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필수의료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지역의 정주여건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역소멸대응기금의 집행에 있어서 심사기준을 좀 더 정교하게 짜서 지금 김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들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윤 위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은 중앙정부가 어디에 쓰라고 돈을 내려보내 주는 게 아니고 지방정부가 계획을 짜서 ‘우리 이 사업에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니 중앙정부에서 배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낮고, 특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 이 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가 의지가 없거나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이 돈이 쓰여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이 기금의 사용 범위와 사용 방식이 지나치게 경직적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해군과 청송군의 사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개선해 줬으면 좋은지에 관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남해군과 청송군 모두 지역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건비나 또는 필수의료시설을 운영하는 데 운영비로 이 돈을 쓰고 싶는데 현재 이 기금을 그런 데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못 쓴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적은 예산에서 돈을 가져다가 의료인력의 인건비, 보건의료원의 운영비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적어도 다른 분야는 몰라도 필수의료 분야는 인력이 핵심이고 시설의 운영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한해서는 적어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운영방침을, 운영규정을 좀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장관으로 부임하고 나서 지방소멸기금의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주인구를 늘리거나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사업 평가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 평가 기준을 전면적으로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발견한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에서 이것이 인건비나 이런 것들로 지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경직되게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수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인건비의 지출이 가능해지려면 법 개정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또 국회에서 그런 부분도 함께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 위원** 저희도 노력할 테니 장관님께서도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 위원** 끝으로 자살 관련해서 짧게 총리님께 한 말씀드리고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배를 넘는 수준이고 지난 20년 동안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최고 국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최근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나섰던 소방관 두 분이 참사 트라우마를 겪다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께 헌신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안타까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회적 참사·재난에 대응한 대응인력, 생존자들에 대해서 단기간에 단편적인 지원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9·11테러 이후 거의 90년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치료와 지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서 꼭 챙겨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김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를 존경하는 송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현 위원** 강원 원주를 송기현 위원입니다.

검찰개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이후로 검찰권 남용이 우리가 알다시피 역대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에 이르렀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그야말로 국민이 참아 줄 수 없는 정도가 돼서 검찰개혁은 당연한 일이고 검찰청 폐지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되어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관봉 사건이라고 이름 지어지는 것을 보면 존재 이유 자체가 있는가, 제대로 일을 하는가 자체도 굉장히 의심스럽지요. 그 이전에 사실은 유우성 서울시청 공무원의 간첩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정상적인 범법행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우리 이재명 정부의 가장 시급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동안 국회에서는 검찰개혁에 관해서 추석 전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있

있던 반면에 정부 쪽에서는 신중한 개혁을 이야기해서 혹시 이 점에 관해서 당정이 이견이 있는가 우려가 있었어요. 다행히 지난주에 당정협의로 정리가 좀 잘된 것 같습니다.

총리님, 정리된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검찰개혁에 대한 큰 대의는 이미 대선 이전부터 국민 사이에 있었고 또 그 대의에 기초해서 출발한 국민주권정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기초가 한 번도 변화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열개를 추석 전까지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하셨고 민주당의 대표인 정청래 대표께서는 그것을 완결하겠다, 입법 완료하겠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또한 이러저러한 논의 과정에서 대원칙을 정리하는 입법이다라는 취지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논의도 있었고 정부 내에서도 관련한 부처, 법무부나 행안부 등등의 논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검찰개혁 그 자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흔들림이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수사·기소 분리를 명백히 확인하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가 9월 안으로 입법이 완료되고 그 자세한 내용은 추후 상세한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간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민감한 핵심 쟁점은 반드시 국민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총리께서도 국민이 졸속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신중히 검찰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총리님께서 졸속이라고 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

○**국무총리 김민석** 결국은 검찰개혁 또는 사법개혁은 국민들이 본인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 처리에 있어서 지연된다든가 하는 또는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불이익 같은 것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검찰개혁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정하더라도 그 이후에 실제로 관련한 수사 부서를 어디에 두는가 또 수사가 혹시 조금 미진하다고 했을 때 최종적인 판단과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과 관련한 법리적인 또는 기술적인 논점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동안 국회의 토론 과정에서도 많이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대원칙을 정하고 나서도 구체적인 입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하겠다, 그러한 논점들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드러내고 토론의 과정을 거치겠다 하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동안 검찰이 남용해 왔던 수사·기소와 관련된 권한을 공정하고 국민의 뜻에 맞게 행사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 하나가 있고 한편으로는 또 형사사법절차 자체가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데 적절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검찰 권한이 수사에서만 남용된 것이 아니라 사실 기소에서도 남용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장 되면서 조국 전 대표의 부인 되시는 정

경심 교수를 처음 기소한 사건 보면, 기소한 내용이 하나도 사실과 맞지 않은 그런 사항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나중에 공소장 변경을 하는 쪽으로 바뀌기는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형적으로 기소권도 남용된 것이지요. 유우성 씨 같은 경우도 기소권도 남용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수사권만 생각하고 있는데 기소에 있어서도 그동안 남용되어 왔던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동안 보면 검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수사를 개시하고 또 인지하고 또 진행시키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다음에 종결하는 문제, 종결한 이후에 기소를 할 건지 불기소할 건지. 존경하는 송기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에 있어서도 권한 남용이 있었고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기소하지 않으려고 하는, 불기소하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권한 남용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권한들을 적절히 재배분해 가지고 검찰의 권한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적게 하는 게 개혁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송기현 위원** 그래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 기능은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검찰은 절대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가지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분리시켜 낸다는 게 일차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래서 ‘검찰’이라고 쓸 때 ‘찰’이라는 것이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서 명칭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공소청이라는 명칭이 확정된 건 아직 아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일단은 그렇게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기소청, 공소청 얘기돼 있는데 어쨌든 검찰은 일단 헌법상의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이 있고 또 검사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위헌적인 문제를 또 제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송기현 위원** 지금 현행법상 보면 수사·기소 말고도 검사가 담당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굉장히 많습니다.

○**송기현 위원** 국가송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민사나 상법상 소송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그런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한 100여 가지 법률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특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변사사건에서 검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공소청이라고 이름 지었을 때 공소라는 이름 자체랑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의 역할도 같이 포함된다고 하면, 검사 역할에 포함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같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명칭도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아니면 이런 부분은 누가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또 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의 역할

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도 또 어떻게 새로 만들어진 공소청에 배분할 것인지, 새로운 기관에 맡길 것인지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송기현 위원** 수사권이 없어진다고 하면 이게 어느 범위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상대로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도 안 하는 건지, 그것까지 가는 건지 그것도 좀…… 그렇지요? 명확하지는 않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사 종결한 이후에…… 일단은 검찰이 독자적으로 인지를 못 하고요 수사의 개시도 못 합니다. 그러나 1차 수사기관이 한 사건을 넘겨받았을 때 불기소 사건, 불송치한 사건까지 같이 넘겨받을 것인지 아니면 기소 의견으로 결정된 사건만 넘겨받을 것인지 이 문제 결정이 돼야 될 것이고요. 기소 의견으로 넘겨받은 사건만 처리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기계적인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만 할 것인지 아니면, 구속 사건과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시간이 촉박한데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주장을 변경한다든지 또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했을 때 이걸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점들이 또 추가적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송기현 위원**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불기소 관련한 것까지 전부 송치를 하게 할 것인지 문제는 사실 지난번 수사권 조정 부분에서 예민한 쟁점 사항이었던 거기 때문에……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 점에는 좀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은 보통 전건 송치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금 사실 필요성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폭증돼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많이 있고 국민께서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자세히 더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만일에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사 자체를 전혀 안 하게 된다고 하면 형사소송법에 검사에 관한 규정이 모두 폐지가 돼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특검과 같은 경우는 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의 권한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특검이 필요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법무부장관 정성호**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물론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공수처 검사의 권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수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고려가 돼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형소법 체계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바꾸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럴 때 이런 다른, 지금 특검이나 공수처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정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장관께서도 아마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문제가 형사사법절차가 정말 기능적으로 잘 작동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

까? 방금 전건 송치도 그런 부분 비슷한 건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가 되고 나면 이 두 작용이 가장 기능적으로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예민한 문제기도 하지요.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기본적으로 수사 작용이라고 하는 게 권력 작용의 하나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갖다가 침해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될 것이고, 특히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를 공소청이든지 또 과거에 검사가 하던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관련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아니면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보완수사는 어느 정도 권한을 줄 것인지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송기현 위원** 보완수사는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제한하는 정도로 논의하면 되는데 수사지휘와 또 전건 송치 부분은 지난번 수사권 조정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조정을 거쳐서 확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의할 때는 지난번 논의했던 것을 연장해서 그 부분도 잘 논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서도 공론화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에서 분리된 수사 기능을 지금은 일용 중수청을 설립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행안부에 두느냐 법무부에 두느냐 이런 문제,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송기현 위원** 행안부에 두면 이게 사법 작용 중의 하나인데 행안부가 사법 작용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도 하고, 법무부에 둔다고 하면 지금의 검찰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이 부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뿐 아니라, 또 하나는 행안부에 둔다고 하면 국가수사본부와 기능이 중복되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현재는 이 부분이, 중대수사라고 하는 부분은 검찰이 담당했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하고 충돌이 잘 안 일어나는 부분인데 중수청이 생겨 가지고 그리로 넘어가게 되면 국가수사본부하고 완전히 그 부분은 중복되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1차 수사기관이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중수청뿐만 아니라 수사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찰도 있고요 또 국가수사본부도 있고 그다음에 특정한 사건들, 고위공직자에 관련된 공수처가 있습니다. 4개의 수사기관이 되는데 일단 중수청·경찰·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들이 집중돼 갖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런 점도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 점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자세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수사권 충돌을 해결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수사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수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론되는 것처럼 그대로 실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요? 공수처는 사실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된 기관인데 이것이 행정부 산하에 있는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같이 들어가서 거기의 기속을 받는다고 하면 공수처를 독립시킨 그런 취지와 맞지 않기도 하고 실제로 전체적인 수사기관을, 수사에 관한 권한을 하나의 위원회가 독점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통제가 또는 간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습니다. 독립된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전체 국정기획·조정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뒀 갖고 4개 수사기관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관할의 조정을 갖다가 맡는다고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특히 현재도 경찰청장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통제가 사실상 없습니다.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행안부장관도,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국가수사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어떤 행정 또 치안·안전의 책임자인 행안부장관이 민주적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 민주적 통제의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요.

○**송기현 위원** 그 점도 사실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수사권 충돌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라면 사실은 독립된 위원회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수사에 관한 어떤 정책 관련된 부분이라 하면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관장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국수위,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최근 통계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현재 4만 건 이상이 됩니다.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이의 사건 4만 건 이상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고려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송기현 위원** 하여튼 이번 기회에 수사와 공소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 실제로 잘못된 수사와 거의 증거 조작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일이 별로 없었고.

또 특수수사 같은 경우는 무죄율이 10%가 넘는 통계가 많이 나오고요. 예전에 중수부 같은 경우는 어떤 통계 보면 27%까지 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소 자체도 굉장히 남용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문제의 하나가 누가 수사의 최종 책임자냐, 이 문제가 명확지 않아서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보완수사 요구라든가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평풍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최종 누가 책임질 것인지,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또 그 과정에서 현재 형사사법시스템에 의하게 되면 과거보다

거의 2배 이상 사건 처리 기간이 늘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점들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송기현 위원** 그러니까 수사권이 최종적으로 분리가 되고 난 다음에 가장 걱정되는 거는 검사는 기소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사건인데 증거 수집이 제대로 안 돼서 경찰한테 요청을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범인이 처벌이 안 되는 그런 것도 하나가 있고, 한편으로는 경찰은 이거를 꼭 처벌하고 싶은데 처벌해야 된다고 확신하는데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응하지 않는, 그런 두 가지가 양쪽에 다 있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런 부분이 잘 해결돼야지만 형사사법제도가 정확히 국민을 위해서 기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공론화는 대략 어떤 정도로 진행,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무부가 중심이 돼 가지고 공론화를 한다고 하면 검찰개혁에 좀 소극적이다라는 평을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과…… 역시 국민의 대표는 국회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지금 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과도 소통을 하고 있고 또 학계와도 다양한 형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공론화의 가장 첫 번째 주체는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 점에서 항상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총리님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위반해서 계약이 체결되고 또 불법으로 건축공사가 진행된 공공 공사에 관해서 한 공사에 따른 어떤 공사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얻는 이득 같은 것을 그대로 되서는 안 되지 않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 과정에서 불법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냥 두기는 어려운 것 같아 보입니다.

○**송기현 위원** 그런데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환수하는, 공사대금 지급한 걸 환수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불법 의료를 한 경우에 실제 진료를 하고 인건비 같은 걸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불법이면 나중에 다 환수한단 말이지요. 불법 공사인 경우도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및 관저를 이전하면서 특히 관저에 관해서 국가계약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건축법이나 이렇게 위반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법 하도급 했다는 그런,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그런 정황이 있는 것도 있고요. 계약서도 없이 아예 공사를 해 가지고 진행돼서 공사대금 지급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명백히 국가계약법 위반이고 불법으로 공사를 진행해서 계약대금을 받은 건데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살펴서요 국가계

약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법령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현재 국가계약법에 그런 경우에 관한 환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 우리 기재부에서도 제도적으로 불법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불법으로 공사가 된 경우에 그것이 공사가 되어서 된 공사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불법에 대한 이득인 만큼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저도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직 인사를 못 하신 위원님이 있어서 인사를 먼저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님, 짧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승 위원** 반갑습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저도 예결위원으로서 처음 자리한 것 같은데 저희도 지금 상임위가 열리고 있어서 잠깐 들었습니다.

어쨌든 새 정부 시작되고 중요한 예산결산위원회에 총리님을 비롯한 많은 장관님들도 오시고 각 부처에서 오셨는데 어쨌든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또 국민의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예산이 세워져서 나라가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예산 심사와 결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서울 서초갑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대통령실의 병역공개법 위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님.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우상호** 예.

○**조은희 위원** 이재명 정부 출범 3개월도 안 됐는데 비공개 정부라는 비판을 들을까 걱정이 되네요. 대통령비서실은 직원 235명의 명단만 공개했을 뿐 담당 업무나 발령 일자 그리고 병역 사항까지 모두 비공개입니다.

정무수석님, 수석님은 6월 8일 임명되셨는데 본인의 병역 서류 총무비서관실에 제출하셨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우상호** 예, 다 했습니다.

○**조은희 위원** 병역공개법에 따르면 제출하셨으면 그게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야 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우상호** 예.

○**조은희 위원**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화면 보시다시피 정무수석님은 물론 비서실장·안보실장·비서관·행정관 모두 비공개 처리돼 있습니다. 병무청이 잘못된 겁니까, 총무비서관실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정부의 방침입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우상호** 일반적으로 대통령비서실 직원의 소속 및 업무를 계속해서 비공개해 왔던 관례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조은희 위원** 저는 병역 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우상호** 이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요.

○**조은희 위원** 병역공개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지요. 병역공개법 8조에 의하면 병무청장이 병역 사항을 통보받으면 1개월 내에 관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가 모두 지켜 온 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 정부만 예외입니까?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우상호** 이 사항을 한번 제가 따져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지금 왔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비대위원으로 모두발언도 했습니다. 얼마나 관심이 없으시면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일간에는요, 항간에는 혹시 공개하면…… 코인 의혹의 김남국 비서관,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지요. 버닝썬 변호인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선거법 변호인인 이태형 민정비서관, 대북송금 변호인인 이장형 법무비서관 등이 임명되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혹시 병역 공개를 하면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서 일부러 공개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우상호** 그렇지 않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은데 왜 안 하시냐고요. 왜 모르고 계시냐고요. 누구 잘못이에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우상호** 한번 가서 파악……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오해를 살 일은 아예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비대위 모두발언에서도 얘기했는데 비서실장도 정무수석도 정무비서관도 병무청도 다 왜 병역 공개를 안 합니까? 이제 와서 처음 안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다 제가 지적드리는 거고요.

다른 문제 또 있습니다.

2000쪽에 달하는 국정기획위 세부계획, 저는 은폐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직전에 130쪽 책자까지 파쇄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 4년 동안 210조 원이 투입된다는데,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데 세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이나…… 계획을 왜 국민 앞에 내놓지 못합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왜 내놓지 못하고 파쇄하셨어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우상호** 아니, 위원님, 국정기획위원회의 보고서라는 것은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이재명 정부의 제안서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획 차원의 문건이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세부……

○**조은희 위원** 그러면 발표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210조 원이나 든다고 해 놓고 210조 원이 어떻게 든다는 것은 130쪽 파쇄했다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이상호** 파쇄한 게 아니고 수정본을 만들어서 책자를 배포했습니다.

○**조은희 위원** 수석님, 병역 공개와 국정기획 공개는 정부 투명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 불신에 이르지 않도록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이상호** 예, 참고로 국정기획위원회의……

○**조은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이상호** 예.

○**조은희 위원** 구윤철 부총리께 주식시장의 정책 혼선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부총리님은 7월 31일 날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4% 안팎으로 급락하고 하루 만에 116조 원이 증발하고, 그래서 ‘검은 금요일이다’ 이러한 정책적 파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주식시장이라는 게, 저희들이 그때 세제 개편안 측면이 없다고는 보지 않는데 아마 좀 복합적으로 작용……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미안하지 않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조은희 위원** 최소한 1400만 개미 투자자들에게 사과해야 되는데 지금 복합적이라고 발뺌하시는 겁니까? 사과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 부분이, 세제 개편안이 그런 데 영향을 미쳤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때 아마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겹쳐……

○**조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깨끗하게 사과해야지 왜 ‘그때’ 이렇게 줄줄 줄 기타 등등을 붙이십니까?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코스피 주가 순자산 비율 질문에 엉뚱한 수치를 답변하셔서 많은 질타를 받으셨는데, 21일 기재위에서 ‘잠시 순간적으로 주가 이익비율과 착각했다. 불찰이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조은희 위원** 저는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것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또 어린이가 우물에 돌을 던지면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죽거든요. 그런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부총리님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착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서운합니다.

PPT 화면 좀 보시지요.

이것은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아니고요 민주당 당원 그룹이나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서포터스의 SNS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이유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구윤철 부총리의 헛발질 때문이다.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자 시장이 급락했고 신뢰가 무너졌다’. 이게 제 비판이 아니고 여권 지지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이런 평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우리 투자자들께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분노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조은희 위원** 송구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조은희 위원 그런데요 송구하신 것을 행동으로 보여 주세요. 송구하니까, 죄송하니까 다시는 죄송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은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3주째 심사숙고 중이십니까? 왜 심사숙고 중이십니까, 부총리님?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지요. 양당 간 10억이든 50억이든 기준을 결정해야지. 항상 부총리는 ‘심사숙고 중……’,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언제 발표하실 거예요? 언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하여튼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언제요? 언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늦지 않은 시기에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독입니다. 10억이든 50억이든 지금 3주째 심사숙고 중이면…… 부총리님은 심사숙고하는 게 취미십니까?

이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님께 여쭙보겠습니다.

부총리의 이런 심사숙고 입장에 대해서 총리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바람직, 안 바람직 차원을 뛰어넘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로서는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총리님도 심사숙고하시는 중이예요?

○국무총리 김민석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애초에 그러면 발표를 하지 말고 심사숙고 오래 하셨다가 심사숙고 끝날 때 발표하시지 왜 50억을 10억으로 내렸다가 하루아침에 116조 날아가게 하고 심사숙고하십니까? 심사숙고는 발표하기 전에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사숙고 타임이 틀렸어요. 발표하기 전에 심사숙고하고 발표하면 밀고 가야지 왜,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뭘니까? 개미투자자들만 지금 부총리님 입만 보고 있잖아요. 총리님도 쳐다보고 있습니다. 심사숙고라는 건 가장 무책임한 말입니다. 심사숙고 좀 그만하시고 빠른 결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세대란 관련해서 김윤덕 국토부장관께 여쭙보겠습니다.

장관님, 전세대란 우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PPT 화면 보시면 서울 전체 전세수급지수가 152.0, 3년 10개월 만에 최악입니다. 매물은 없고 수요는 넘칩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52%나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전세시장이 씨가 마른 것은 시장 탓이 아니고 정부 탓입니다. 6·27 대책,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으로 매매 수요가 대기 수요로 남으면서 전세 공급량은 늘지 않은 상태이고 전세금 대출 규제가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동합니다.

또 계약갱신청구권 있지요. 그래서 7월 한 달만 42.4%가 계약갱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더 없어지지요. 게다가 전세퇴거대출 제한, 반환용 대출도 막히고 전세보증 축소, 신규 전세대출도 어려워졌습니다. 전세보증금을 구하지 못하는 세입자들, 그러니까 집 없고 저소득층이지요, 서민들이지요. 향후 보증금 상승분만큼 월세로 전환하고 또 보증부 월세 이렇게 늘어나는 거지요.

대법원의 등기정보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월세를 낀 계약이 벌써 105만 건이 넘었습니다. 4년 새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월세 105만 건, 이게 서민들의 절규입니다. 월세가

늘어나면요 가게소득에서 지불해야 되는 월세만큼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요. 전세는 좀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장관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시고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현재 6·27 대책 이후에 전세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은희 위원 저는 대책을 물었지 제 말에 공감하느냐고 안 물었습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저희들이 시장을 계속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좀 다행인 것은 전세가격의 상승률이 많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조은희 위원 장관님, 그 답변 틀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시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심사숙고하고 있다, 부총리 심사숙고, 총리 심사숙고, 국토부장관이 시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맨날 보기만 하고 계세요?

전세는 왜 안 오르냐 하면 제가 계약갱신이 42.5%라 그랬잖아요. 전세대금이 오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왜냐하면 다시 재계약이 42.5%니까. 제가 묻는 질문은 전세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52%가 지금. 그래서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전세 부족 현상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책은 있는지 여쭙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전세가 안 오른다? 전세 안 오르는 건 당연히 안 오릅니다. 대책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조은희 위원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하여튼 계속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요 단기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단기간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 아닙니까?

뭐냐 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맞보기에 불과하다. 그다음에 국정기획위는 8월 1일 날 부동산 대책 하면서 전세보증비율 단계적으로 더 축소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것 안 하시면 됩니다. 6·27 대책 그것 하시면 되는데요 전세 관련해서 마른 수건 더 짜듯이 안 하시면 됩니다. 가계대출·부채 그것 줄인다고 지금 전세대출 줄여 가지고 그냥 초가삼간 다 태우는 거잖아요, 빈대 잡겠다고. 그것을 여쭙는 건데요. 왜 단기 대책은……

대통령한테 ‘더 이상 전세 관련해서 규제 더 하지 말라’, 금융위원회에 ‘더 하지 말라’ 이렇게 건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일단 그런 전세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부동산 아파트,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굉장히 과열될 위험성이 끊임없이 상존하고 있는 조건에서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기존과 같이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자칫 부동산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다고 하는 지난 과거에 대한 평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중히 검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은희 위원 그래서 제가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운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미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냥 공무원 써 주는 말 보지 마시고요. 국회의원이지 않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십시오. 부동산 잡는다고 전세를 월세로 만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삶의 질을 완전히 떨어뜨리게 하는데 서민들 괴롭히지 마시고요 제대

로 핀셋 대책을 좀 세우시라는 겁니다. 써 주는 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공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조은희 위원 보니까 9월 초에 공급 대책 발표하겠다고 했던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여쭙보고요.

먼저 제가 좀 놀랐던 것은요 지난 12일 날 기재부 부총리께서 국토부장관 패싱하고 주택 공급을 밝힌 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해방 이후에 부총리가 국토부장관 빼고 그냥 발표하는 것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힘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조세정책 때문에 기재부한테 눌러 계십니까? 왜 패싱당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주택 공급에 대한 전체적인 건 국토부장관이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일부 기재부에서……

○조은희 위원 그것은 말씀하셨고요. 이미 상임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재부에서 캠프와 연동해서 기금 운용 관련 일부 주택에 대한 공급을 하는 그런 걸 기존에도 해 왔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해 온 것을, 실효성도 없는 걸 그냥 보여 주기 식으로…… 더군다나 제가 보니까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에 400가구, 어디 세무소 226가구, 완전 조막 조막 내서 300가구 정도 그런 걸 몇 개 막 해서 3만 5000 숫자만 만들었더라고요.

부총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국토부장관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하면서요 그 지역에 저희들이 작업을 미리 해 놓은 게 되어 가지고 먼저 하고 나머지 종합대책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조은희 위원 그런데 미리…… 이게 언제 적 얘기인지 아세요? 노무현 이후로 계속 역대 정부가 해 오는 것, 제가 기초단체장 출신이어서 이것 너무 잘 압니다. 그것을 재탕 삼탕, 숫자도 요만하고, 요만한 것도 전부 임대주택이고. 그것을 대책이라고 발표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을 뭘로 보시고요. 더군다나 국토부장관 패싱하고요.

총리님, 총리님께서 이런 것 정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잘 정리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래 주십시오.

또 공급 대책에 대해서 장관님께 좀 여쭙보겠는데 제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나중에 보충질의 때 또 할 텐데 9월 초에 발표하실 공급 대책이요 제 느낌에, 제 우려가 ‘3기 신도시 조기 공급하겠다’ 이게 들어갈까 봐 걱정이에요. 신도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 아직까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3기 신도시는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상당 부분……

○조은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게 10년인데 지금은요 공급 대책을…… 지금 대출 억제해 났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반복 안 하시려면 억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내 봐야 되는데, 일본은 신도시 20년 전부터

안 합니다. 그런데 하려면 좀 빨리하든지. 그것을 천천히 하면서 공급 대책의 핵심이라고 내놓으시면 시장이 엄청 실망할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도 있는데요, 시간이 다 돼 가니까……

9월 초에 하실 때는 전세의 월세화 문제도 있고, 지금 잠시 눌러 났던 시장이 공급 대책이 안 나오면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듣고 제대로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직 인사를 못 하신 위원님들……

○조은희 위원 저도 시간이 남았거든요. 27초 남았는데 시간 더 안 쓰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예.

아직 인사를 못 하신 위원님들 인사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짧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김승원 위원 수원갑의 김승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결산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다음은 서왕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 비례의원 서왕진입니다.

정부 재정 기초 새롭게 잘 만들 수 있도록 24회계연도 결산 작업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다음은 진보당의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진보당 비례대표 전종덕입니다.

총리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문이 있었지요. 거기에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미일 공조, 대북 공조만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을사늑약 120주년 그리고 광복 80년, 한일 수교 60년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윤석열의 제삼자 변제안에 대해, 이런 망국적인 안에 대해서 국가 일관성이라는 이름으로 이 안을 고수하면서 일본에 먼저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불과 2년 전에 윤석열 정부의 제삼자 변제안에 대해서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굴욕 외교다. 그리고 우리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대통령의 역사관이 바뀐 것입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대통령의 역사관이 바뀌었다기보다는 2년 전에 대통령은 그것이 최선의 비판이다라는 입장에서 비판을 했고 지금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새롭게 국익을 위한 여러 가지 협상과 외교를 펼쳐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이번에 한일의 대화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거론하지 않는 입장에서 다른 논의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저는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면서 미래 지향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기만

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국익이라는 것에 과거를 빼고 그것을 국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일관성이라는 것이 국제관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국익을 위한,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한 국익 거기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역사 정의를 세우는 것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위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저는 국가가 있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국민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표방했던 국민주권정부라면 그게 어떤 모습인지를 정치뿐만 아니라 외교에서도 분명히 보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서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지방교부세가 감소하고 또 복지예산이 축소되면서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24년도 세수결손이 얼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30.8조.

○전종덕 위원 반올림해서 약 31조 되지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무려 59조, 22년 대비 15%가 줄었습니다. 알고 계시고요.

세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경우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이렇게 줄어드지요. 보니까 20년 코로나 때 2.7%가 줄었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있을 때 1.7%가 줄었고 IMF 때도 3% 줄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15%가 줄었어요. 다른 동료 위원의 질의에 총리님께서도 세수 감소의 원인이 경기 위축도 있지만 감세 정책이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전종덕 위원 일반적으로 가게에서도 돈이 없으면 빌려 오거나 아니면 나가는 돈을 줄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예산에서도 국채를 발행하거나 그리고 세출을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세수가 안 걷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전종덕 위원 그러려면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두 가지 경우 다 국회의 동의 받아야 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 세출을 줄이는 경우는 국회에서 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행정부한테 위임된 범위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전종덕 위원 추경을 해야 되니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겠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전종덕 위원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세수결손에 꿈수를 부려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지방교부세 9조 2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4조 2000억 원, 소방안전교부세까지 삭감을, 불용을 시키는 방식으로 꿈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지방재정은 폭탄을 맞았지요. 이미 올해 추경 할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니까 이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놀라운 꿈수가 있었습니다. 최악의 꿈수라고 보는데요. 국유재산을 무차별하게 매각해서 국가재산을 판 겁니다. 24년도 국유재산 매각으로 77조를 처분했습니다. 23년 대비해 보니까 24조 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나라 팔아먹은 윤석열 정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기타사유가 있는데 기타사유에 118조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 결산서에도 안 나왔더라고요. 도대체 이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리고 당초 매각계획이 33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처분은 79조를 했어요. 136.3% 이상 매각을 한 거지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사전에 국회 동의를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니까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산 운용 과정에서. 그래서 그게 75조 정도 되고요. 그걸 빼니까 한 4조 정도가 아마 순수하게 매각이 된 것 같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이것은 정부 재산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큰 재산을 차이가 나게 매각을 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도 정비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앞으로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금액의 국유재산 매각은 국회에 보고드리는 게, 그러니까 큰 금액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서 일각에서는 31조 세수결손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국회 보고나 동의도 없이 꿈수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준비를 해 주시고요.

실제로 매각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실제 계획했던 매각 내역과 실제로 매각한 내역 그리고 그것을 물건별·금액별 사유 등을 명시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다음 질문도 기재부장관님께 하겠습니다.

올 초에 경북 지역을 포함해서 전 지역에 산불이 크게 있었던 것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재난 현장에서 불길을 함께 잡았던 그리고 잡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급된 위험수당이 있습니다. 그 위험수당이 정규직은 8만 원 그리고 공무원인 산불진화대원은 0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다행히도 4만 원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위험에 노출되어서 산불을 끄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데 정규직과 공무원의 차별이 있어서 저는 최소한 위험수당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8만 원으로 같이 지급해 줄 걸 요구했으나 결국 4만 원만 지급됐습니다. 생명의 가치에 있어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는 총액으로 배분을 하는데 그중에서 어떻게 지자체에서 배분하냐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종덕 위원 이후에 제가 또 공무원 질문을 드릴 거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전종덕 위원 표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행정기관에서 일하는 5년 차 공무원노동자의 6월 급여명세서입니다. 기본급이 197만 2210원, 여기에 식대 14만 원을 더하니깐 211만 2210원입니다. 2025년도 최저임금이 월급으로 209만 6270원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딱 1만 5940원이 많습시다. 그런데 이 5년 차의 실수령액은 세금하고 4대 보험 33만 원 정도 공제를 하면 177만 1880원입니다. 최저임금보다 32만 4390원이 적습시다. 이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노동자의 5년 차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질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가 절대다수입니다. 국가행정기관 75개 부처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에 기본급이 최저임금 209만 원에 못 미치는 부처가 35곳입니다. 전체 47.3%입니다. 최저임금 209만 원으로 맞춰져 있는 기관이 8곳입니다. 그래서 결국 42개 부처가 최저임금 미만이거나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기본급이 그렇습시다. 여기 전체 56.8%나 됩니다.

그리고 수당이라고, 아까 명세서 보여 줬지만 식대 있었지 않습니까? 식대 말고 명절 때는 명절상여금 있고요 복지포인트하고 가족수당, 딱 이 세 가지 있습시다. 그래서 복지 3종 세트 해서 이것도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 이것도 일하는 부처마다 수당도 내용, 금액도 다 다릅시다. 세상에 75개 부처 중에서 밥값도 안 주는 곳이 3곳이나 됩니다.

그리고 명절상여금 같은 경우는 기관마다 액수가 다 다릅시다. 복지포인트는 정부 지침으로 50만 원 주라고 했는데 그것도 다 달라요. 4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공무원 규정에 맞추는 데도 있고 그렇습시다. 가족수당의 경우에는 12곳을 제외하고는 수당 자체가 아예 없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후생복지도 기관마다 다르고 액수도 다르고 지급 기준도 다릅시다. 공무원노동자들이, 국가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처우가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처우에 대해서 혹시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알고 있습시다.

○전종덕 위원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기관마다 조금씩 하는 업무가 다 다르고 위험도가 다르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걸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시다.

○전종덕 위원 그런 얘기는 해마다 됐던 것 같습시다. 공무원 처우 개선 관련해서는 예결위에서도 최근 3년 동안 부대의견으로 3년 연속 제출했습시다. 그리고 장관님 인사청문회 할 때도 이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인사보고서에 들어가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전종덕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동안은 계속 공무원 처우가 열악하니 개선해야 된다는 말은 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세우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제출되지 않았습시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더 열악해지고만 있는 거지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최저임금에 식대 등 이런 것들이 산입되면서 실질임금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177만 원 선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임금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복지제도 몇 가지 도입해서 좀 처우를 개선한다 이 정도의 문제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이런 차별이. 그래서 저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저희들이 공무직 제도·임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요, 특히 낮은 공무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구체적으로 실질임금을 상승하기 위한, 이것은 기본급을 상승해야 합니다. 기본급을 상승하고 그리고 수당도 차별을 해소하는 것 이것을 해결한다면 일정 부분 지금보다는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지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의 최저임금 채용 관행을 고쳐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번 국정기획위원회 과제에서도 공무직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공무직위원회 설치법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이 공무직이 다양하게 이렇게 부처별로 있으면서 이게 또 급여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또 그다음 수당에서 차이가 나고 이렇게 좀 다양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 공무직 급여를 한번 보면서 부처 간의 차이도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 그다음에 수당의 차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서 또 현실화할 부분은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장관님이 계속 두루뭉술하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 해마다 제기하고 해마다 그렇게 답변하시고 해마다 처우는 더 열악해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곧 대책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꼭 공무직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실질적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전종덕 위원 국무총리님, 어제 노조법 개정안이 20년 만에 통과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사용자는 누구인지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전종덕 위원 바로 대통령입니다.

공무직은 공공기관에서 공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해서 국가가 채용한 노동자임이 분명합니다. 맞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전종덕 위원 그래서 공무직노동자들의 차별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제가 계속 주문을 했지만 이것은 총리님을 포함한 정부의 입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제도 마련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공무직들의 정규직 전환과 공무직위원회 설치법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이게 자칫 그냥 계획 단계로 넘어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실질적 계획으로 공무직위원회법을 제정하고 저는 총리님 산하에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해서 공무직노동자들과 실질적인 협의, 노정교섭 저는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공무직위원회가 3년 동안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일몰이 되었어요. 그래서 22년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이 운영되지 않은 동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의 처우는 점점 더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은 법 제정대로 하더라도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전 부처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리님 산하에 공무직위원회를 신설해서 공무직위원회에서 사용자와 또 우리 노동자가 함께 만나서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 전환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 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그것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총리 산하에 공무직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까 기재부장관께서는 처우와 관련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하였고 과거의 경험이 있고 또 이것이 전 부처에 걸쳐 있는 일이기 때문에 행안부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논의하는 것이 좋은지 1차 논의를 한번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IMF는 우리가 3년 만에 극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IMF 산물인 비정규직은 지금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는 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국가기관부터, 공공기관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나서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려면 적극적으로 정부가 책임 있게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꼭 오늘 답변하신 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께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의 예산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애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의 슬로건이 약자복지였습니다. 약자복지의 핵심이 긴급복지 사업인데 이 사업이 오히려 축소가 됐어요. 민생위기 시대에 긴급위기 가정이나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복지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2023년도 불용을 이유로 2025년도 예산을 84억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따져 보니까 2023년도에 집행률이 102%였지만 이렇게 102% 초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나면 전용 증액을 한 거예요. 239억을 증액을 해서 그것을 쓰고 지자체에서 수요 불일치가 발생하니까 148억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는 시점에서는 이게 빠진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에는 84억이 감액돼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이 부족하게 되니까 이 문제에 당장 차질이 생기고 긴급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발굴을 해야 되는데 소극적이 되고 그다음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 특히 긴급복지에서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수만 혜택을 보고 있는데 더 확대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충분하게 복지 전달체계를 더 강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긴급복지 예산을 세웠는데요 27년까지 해마다 3585억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용을 이유로 삭감을 하고 나서……

시간이 이렇게 됐네. 1분만 주시면 안 될까요? 꼭 이 질문 끝내고……

○위원장 한병도 이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면 추가질의 때 마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추가질의에 이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종덕 위원 예.

.....

○위원장 한병도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의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이상호 위원장님, 이상호 정무수석인데요.

아까 질문하신 내용을 좀 바로잡을 게 있어서 한 30초 정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한병도 예, 말씀해 주시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이상호 아까 조은희 위원님께서 병무청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병역 관련된 검색이 안 되신다고 그래서 좀 당황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다 검색이 가능하다고 나와서요. 제 것도 봤는데 제 게 무적의 30사단 병장 제대한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병역사항을 감추기 위해서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우선 경제부총리께 올해 성장 전망에 관해서 먼저 질문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주거정책, 아동 주거빈곤에 관하여 총리께 질의할 계획입니다.

관련하여 국토부장관께도 여쭙볼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장께는 올해 5년 만에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구체적인 문항에 주거와 소득에 관한 얘기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PPT가 준비가 됐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올해 0.9% 성장 전망에 대해서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소비쿠폰을 뿌리고도 0%대 성장.

작년 말에 우리 경제가 무엇 때문에 멈췄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작년 말에 계엄이라는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에 성장률이 1/4분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2/4분기까지 다 합쳐도 0.2% 성장에 불과했었습니다.

○**최기상 위원** 제가 올 초에 저희 서울 금천구 소상공인분들을 두루 만나 뵈었을 때 이 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계엄이 터지고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말씀들을 쫓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인분들을 뵈니까 숨통이 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이 ‘현장을 모르는 정치인들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 소비쿠폰 덕분에 매출이 올라서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최근에 소비자심리지수를 보니까 명확하게 알 수 있던데요. 소비자심리지수 회복에 대해서 부총리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최근에 소비자심리지수가 110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4년 1개월 만에 최고의 심리 회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어려운 민생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진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불씨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즉 올해 0.9% 저성장은 계엄에 따른 상반기 부진에 기인한 것이고 그나마 지금 2분기 때 0.6%로 올라왔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추경 등의 정책 효과로 하반기 때는 1%대 반등 그리고 내년에는 잠재 수준인 1.8% 정도의 회복 기대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에 상반기가 0.2가 아니라면요 하반기는 1% 중반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측면에서는 작년에 그런 계엄이라는 상황이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상 위원** 지난주에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시면서 부총리께서 ‘국운 융성을 일궈 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저성장의 벽을 넘어 다시 한번 도약할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경제의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것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잠재성장률이 1% 후반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잠재성장률은 1% 후반대인데 금년에는 그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까지 한다는 것은 이게 경제 상황으로 굉장히 우리가 기초체력만큼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기 때문이에요 잠재성장률 1%대 후반을 반드시 끌어올려야지만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이룩한 어떤 성장의 패스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초핵심 경제로 가서 대한민국의 어떤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그래서 선순환 구조, 그래서 세입이 다시 증가되고, 그래서 재정건전성이 또다시 확보가 되는 이런 경제 패러다임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나라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늘 함께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PPT를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 보시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답은 ‘무엇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결정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국민들께서 각 영역에서 원하시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국회와 공직에 있는 분들이 먼저 듣고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면서요.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에 관한 수많은 기사와 사진들입니다. 쪽 그냥 사진을 넘겨서 보겠습니다.

국민소득이 3만 불, 3만 5000불이 되는 대한민국에—이 PPT는 잠깐 멈춰 보지요—이런 주거환경에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주노동자분들의 주거 부분인데요. 이분들은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일을 하려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런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일한다, 이것을 용인한다는 게, 과거 일제시대 때나 이럴 때 우리나라 수많은 분들이 해외에 가서 고생하셨던 기억을 되살린다면 이렇게 대우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쪽 사진을 계속 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동들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주거빈곤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계속 끝까지 보겠습니다.

기사가 계속 났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이전 정부의 예산·결산 이 부분을 쪽 보다 보니 이전 정부도 지·옥·고 그다음에 주거빈곤을 해소하려고 목표는 세웠는데 이루어지지 못했더라고요.

그 이유를 봤더니 주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삭감됐고 집행률이 저조하고 또 매입임대주택의 재고가 증가하는 부분들이 급감했다는 부분, 마지막에는 또 목표로 했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사업도 부진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에 대한 분석과 총리님을 비롯한 부처의 결심과 다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쪽 이런 통계는 꼭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주거의 빈곤 부분이 단순히 주거에 머무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재 그다음에 수해 때 입는 피해 그리고 건강, 수많은 부분과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을 입고 생명과 신체를 훼손당하는 분들인데, 그래서 ‘무전유재(無錢誘災)’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전’ 돈이 없는 경우에 ‘유재’ 재난에, ‘유’ 자라는 게 끌고 간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재난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목표를 세우셨어요.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그다음 볼까요? 중점 전략과제에서도 주거안전망 구축, 기본서비스 보장들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또 세밀하게 공급도 확대하고 취약계층 보호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과거 정부에서도 다 준비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됐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국정원칙이 있습니다, 실용과 성과. 실용, 실사구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실상을 살피고 실제에 따라 행해야 된다. 아래에 보면 또 성과, 국민의 요구에 응답을 해야 되고요, 증명의 정치.

그 어떤 영역보다도 이 주거빈곤의 문제,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원칙에 맞추어서 매 분기, 매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새로운 대안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전부터 실사구시, 저희가 알고 있는 말입니다만 구시가 먼저 나오고 실사로 가면 이게 소위 이념에 경도됐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실사, 실제로 들여다 보기에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주거빈곤의 현황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이 91.5만 가구가 있고요. 또 우리 법률에 최저주거기준이 있는데 이것도 97만 가구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기준은 법에 있고요. 또 지하·옥탑·고시원, 지·옥·고라는 표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거보다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중에서 저는 오늘 아동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동들이 이런 데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 아동들에게 미래는 다가와야 되는 미래일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볼까요.

주거권이라는 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단순히 집에 머무르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건강권 또 복지권, 환경권 그리고 수많은 다른 권리들과 연결이 되는 중요한 권리다.

다음이요.

질문의 대답은 따로 여쭙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미국 최고의 아동살인범은 땡땡이다. 가난이라고 평가합니다, 가난. 예전에는 우리가 모두 대부분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우리 가족이 가난하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일지, 미국에서도 이런 반성의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적으로 돈을 쓰고 정책을 해야 될 일이 저는 이 부분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남의 불평등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났는지? 그런데 이 부분을 소위 거둑남의 평등으로 바꿔 나가는 정도로 선진국 여부가 판가름된다. 위에서 보면 개인의 불운을 어쩔 수 없는 불행으로 놔두는 것, 즉 사적으로 해결해라라고 하는 게 전형적인 후진국의 모습일 거고요 개인의 불운을 법으로 교정하고 구제해야 되는 정의가 아닌 부정의의 문제로 더 많이 바라보려고 하고 공적으로 함께 해결하겠다고 하는 게 선진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태어남의 불평등은 부득이하다, 그렇지만 거둑남의 평등을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데 그중에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동 주거의 문제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메르켈 전 총리의 말씀을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고민할 때 결말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바람직한 결과를 생각하고 역방향으로 일을 진행한다. 중요한 것은 내일 신문에서 읽을 내용이 아니라 2년 후에 달성할 결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5년 마친 후에 주거빈곤 아동의 숫자가 얼마나 줄었는지, 그 가구가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새로운 꿈을 얼마나 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없애 나가는 노력들을 관계부처 장관들께서 꼭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총리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소설인데요.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소설인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오멜라스라는 곳이 유토피아 같은 곳인데 그 유토피아가 유지되는 조건이 지하에 아이가 간혀 있어서 불행하게 지내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아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도 모른 채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고요. 그에 관련해서 알게 된 젊은 청소년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들이 있고…… 그래서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불행한 상황에 놔두지 않겠다는 공동체의 각오에 관한 얘기를 벌써, 73년이면 50년 전에 말씀을 한 분이 계시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통계청장님, 올해 인구주택총조사 하지 않습니까?

○통계청장 안형준 예,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거기 뒤쪽에 보니까 주거에 관한 문항들이 쪽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통계청장 안형준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주거에 관한 내용들을 거기서 조사를 하고 그러면 주거 상황이 소득 상황과 자산 상황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통계청장 안형준 저희가 인구총조사에서 자산과 바로 연결하지는 않고요. 가구별로 고용 관련해서 경제활동 상태하고 종사상 지위 그리고 생활비의 원천 이런 것들이 같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지하라든가 옥탑과 같은 거주 여부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구의 상황, 가구 형태가 조사됩니다. 그래서 아동이 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되기 때문에 소득까지 바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5년 만에 하는 조사지 않습니까?

○**통계청장 안형준** 예.

○**최기상 위원** 이재명 정부의 돌봄이라든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행복, 이 조사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목표나 지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 낼 것인지에 관해서 이전 5년 전 조사에 비하여 문항이나 지향이 어떻게, 변한 게 좀 있습니까?

○**통계청장 안형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활동 상태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해왔었는데요, 반지하나 옥탑 같은 경우가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가구주택기초조사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고 이번에 표본으로 해서 반지하라든가 옥탑을 처음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아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자세한 사항을 한번 저희 의원실에 와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계청장 안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존경하는 국무총리님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주거빈곤 아동을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문제 이 부분이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려울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주거빈곤 아동을 포함한 주거빈곤 문제의 극복 문제가 말씀처럼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오늘 굉장히 무겁게 특별하게 말씀 주신 것으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장관들이 지켜봤을 겁니다. 단순한 질의가 아니라 이 문제를 공감과 또 연민에 기초해서 풀어야 한다라는 문제 제기를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저희들이 국정과제에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감사합니다.

국토부장관님께는, 국토부에서도 주거실태 관련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사가 정확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5년 만에 실시하는 이 조사 외에 국토부에서 지·옥·고 관련한 주거 관련해서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바가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기보다는 복지부하고 의논해서 그 자료에 기초해서 아동·청소년들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는 좀 방법을 바꾸어서 뭔가 행정적인 조사를 통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직접,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에게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직접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거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단순히 행정적이고 예산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토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 의견

에 대해서 너무 인상 깊게 들었고 제대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감사합니다.

저희가 AI 시대, 수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사람을 돌보고 생명을 돌보는 일에도 마찬가지로 혁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늦게 개최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는 휴식 정회 없이 계속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질의 답변 등 회의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잠시 이석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조정훈 위원님 아직 인사를 못 나눴는데 먼저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정훈 위원 늦게 왔다고 혼내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조정훈입니다.

중요한 예결위의 위원으로 활동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교육위 예산과 법안을 마치고 왔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 충실하게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다음은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총리님, 대통령 방일·방미 가시는 데 배웅 나가셨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저는 안 나갔습니다.

○배준영 위원 안 나가셨어요?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모든 국민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국가의 운명이 거기에 달리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참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계셔서 잘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원해 마지않습니다.

총리님, 지금 16명의 기업인들이 대통령과 같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대통령께서는 ‘사실 기업인을 미국 투자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기업 납치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지금은 그 입장이 달라지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일본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도 과거사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국익을 위해서라면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힘을 모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지금은 기업과 정부의 관계가 매우 투명한 협력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총리님, 지난번에 기업인들한테 미국 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 달라며 대규모 대미 투자를 강조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얼마

만큼 투자에 성의를 보이고 또 성과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관세협상에 관해서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우리가 투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24일 날 통과된 노란봉투법을 보면 말이지요 해외에 투자해서, 여러 가지 경영상의 필요로 인해서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게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뜻에 맞지 않으면 여러 가지 노동삼권, 특히 파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미국에 투자하라고 정부에서 독려를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 여당이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서 정작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파업을 해도 용인하는 법을 그냥 통과시켜 버렸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 정말 어떡하느냐, 오도 가도 못한다.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에 가 있는 기업인들의 마음이 무겁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 정책실장이신가요, 일단 시행해 보고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전에 임대차 입법이라든지 비정규직법이라든지 시행한 다음에 정말 엄청난 부작용이 있었지요. 그래서 경제를 힘들게 했는데……

저희 당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법이 나올 때까지 충실히 더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리버스터도 하면서 밤늦게까지 했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게, 내용을 들으면 저희가 정말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배준영 위원 시행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개정하면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시는지, 첫 번째. 아니면 좀 더 제대로 된 법안이 되도록…… 물론 6개월간의 그런 것은 있지만 시행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런 염려가…… 우리가 다 같이, 총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인과 정부가 손에 손을 맞잡고 하는 이 시점에서 그것을 꼭 이 시점에 급하게 밤새워서 통과시키는 게 맞는지,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정부로서는 지금 현재는 이 법안을 최대한 경영계의 우려도 좀 불식하면서 불확정 개념이라든지 불확실성을 줄여 주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어떤 방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을 같이 당정 협의하셨을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해외에 공장을 증설하는 자체만으로는 우려할 사항이 아닌 걸로 보는데……

그래서 경영상의 의사결정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기업에서도 좀 우려가 덜하고 또 노동계에서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양쪽이 서로 좁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제가 지난번에 국회 특사단으로 가서 상원이라든지 국무부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 특히 충격을 받은 게 미국의 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비롯한 여러 분들을 만났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다, 결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연관되어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길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암참(AMCHAM)에서는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될 거다 그리고 유럽상공회의소에서는 한국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인천이지 않습니까? 인천 얘기를 좀 해 보면 부평의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GM에서 일하고 있는데 철수하지 않을까 지금 난리입니다, 여러 가지 누적돼 온 것도 있지만 자동차 관세가 이렇게 높아지고 그리고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이런 것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울 때는 좀 피해 갈 수도 있잖아요, 시간도 두고. 그런 것을 정부에서는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마 암참이나 유로참(EuroCham)에서도 이게 좀 불확실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정확성을 높이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배준영 위원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배준영 위원 약칭으로 하면 고용부장관님이십니까, 노동부장관님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지금 현재 약칭은 고용부입니다.

○배준영 위원 그런데 혹시 다른 언론에 노동부장관이라고 쓰라고 요청하신 적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약칭을 노동부로 바꿀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배준영 위원 온통 노동부장관이라고 저렇게 돼 있길래…… 그런데 저는 단순히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청년고용률이 올해 7월 달에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48%, 50%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리고 15개월 동안 연속으로 계속 떨어지고 청년고용률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헌법 32조에는 고용을 증진할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33조에는 노동삼법을 포함해 가지고 고용된 사람들이 어떻게 직장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걸 다루고 있어요. 조항의 앞뒤 차이가 중요성을 꼭 판가름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고용이 돼야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그 안에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의 노력으로 노동부라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리고 국민의 바람은, 청년들의 바람은 그렇게 이미 고용이 돼 가지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권익보다는 고용이 안 돼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도 힘들잖아요. 그분들한테 먼저 희망을 주는 고용노동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청년 고용 문제 심각하게 바라보고 좋은 대책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수부장관님, 부산으로 왜 가시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부산으로요?

○**배준영 위원** 예.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일단 첫 번째는 공약사항이었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서울·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 세계가 다 달라붙어서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이 붙어 있는 북극항로 시대를 잘 준비하고 선점하기 위해서 부산 이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종시에서는 안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북극항로 시대가 열리게 되면……

○**배준영 위원** 꼭 부산에 있어야만 북극항로가 열립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극지연구소 가서 보니까요 그것은 부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온 우리나라가 챙겨야 될, 인천도 챙겨야 되고 부산도 챙겨야 되고 광양에서도 챙겨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정해졌다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간다는 메시지가 다른 항만도시,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이지 않습니까? 장관님도 부산이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정부가 부산만을 위해서 하는 그런 특별한 계획을 갖고 노력한다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위원님, 제가 짧게 잠시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좁게는 부산을 위한 것이지만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는 북극항로 시대가 열리게 되면 여수·광양 거쳐서 부산·울산·포항으로 이어지는 북극항로 경제권역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하나의 경제권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좁은 의미에서 부산을 위한 공약이다, 부산을 위한 해수부 부산 이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의식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

○**배준영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국민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차단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제가 경인권 종합비상훈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모든 선원은 5년에 한 번씩 선원법에 대해서 재교육받아야 되고 해기사 등 전문직도 갱신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북부권, 그러니까 서울·경기·인천·충청·강원 교육대상 한 1만 명 정도가 매년 부산에 갑니다. 그래서 경인권 종합비상훈련장을 수도권에 만들려고 하는데 해수부가 부

산 간다니까 지금 우물쭈물하고 못 만들고 있답니다. 이것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위원님,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기회 되실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이것과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선원실습교육이 사실은 서울·인천에 계신 분들이 부산까지 와서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자체하고 예산 당국하고 실습교육장 문제를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가까운 데 세워서 1만 명이나 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차관님 나오셨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국토부차관입니다.

○**배준영 위원** ICAO에서 고도 제한을 새로 만들었다는 것 아시지요, 그 기안을?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배준영 위원** 그래서 보니까 국내에서도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합치시키기 위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PPT는 준비를 못 했는데 이게 보니까 굉장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한 5km까지 제한이 있는데 10.75km까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인천공항 우선 얘기해 보면 영종도가 한 90%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계양구 역시 김포공항으로 인해서 더 하게 되고요. 서구·부평·서울·경기도, 그리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공항들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전부 다 공항이 아마 교통 복지가 아니고 재앙이 될 가능성이, 지금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는 규제를 하나의 면적을 정해서 하나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CAO에서는 평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물론 범위는 넓지만, 전문용어인데 항공학적 검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10km, 15km 이렇게 넓어졌다고 해서 그게 다 현재처럼 고도 제한이 걸리는 게 아니고요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어느 데는 규제가 완화되는, 지금보다 낮춰지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염려를 하는 게 낮춰지는 부분이 이 조그마한 한 1km도 안 되는 부분만 이렇게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그러면 국내 여러 지자체들, 여기 공항 인근에 계신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지자체장들도 계시는 텐데 이것을 그냥 ICAO에서 했다고 임의적으로 다 하지 말고 충분히 협의를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한병도 위원장, 박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배준영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배준영 위원** 그리고 행안부장관님,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문제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할 텐데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여기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죄송합니다.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사실 중앙·지방 간의 협력도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발전에 따르는 공해 문제를 좀 완화시킨다든지 그것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는 지자체나 주민들이 좀 나누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배준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게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라고 그러지요. 세율이라고 그러는데 수력은 kWh당인가요, 2원이고 원자력은 1원인데 화력발전은 발전량 kWh당 0.6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탄소중립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력이나 이런 것에는 2원 그리고 원자력도 전 세계적으로 청정 발전에너지라고 인정되고 1원인데 화력은 0.6원으로 함으로써 오히려 화력발전은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그것을 조장하거나 증진하거나 이런 사인을 줄 수가 있어서 제가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화력발전에 따르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좀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어떤 생각 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배준영 위원님 말씀 듣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오히려 화력발전은 환경오염이나 이런 문제에서 더 문제가 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훨씬 더 조정되어야 될 대상인데 과세 체계는 역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배준영 위원 공보의가 있습니다. 공보의가 2020년에는 충원율이 89, 다음 해는 87, 78, 74, 올해는 53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387명이 필요한데 738명에 불과합니다. 그것 문제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배준영 위원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의대생들이 다 군대를 가는데 1년 8개월만 갔다 오고 그러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미리 갑니다.

○배준영 위원 미리 가고 그래서.

저같이 강화나 옹진 같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은 의사가 부족하고 의료서비스가 점점 그 양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방의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발표도 하시고 했지만 글썽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공중보건 의사가 줄고 있어서 공중보건 의사 복무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방부랑 협의해서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 사실 일반적인 지역보다는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도와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 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나 인력에 대한 지원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강화가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동의하고 있고요. 국비도 현재는 100%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액 자체를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형수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하남시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 우상호 정무수석님, 지금 이 자리에 아마 해외출장 중이셔서 대통령비서실이 못 나오셨는데 대리 출석해 주신 게 맞으시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우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석님, 장차관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이념과 목적에 부합하는 역사관을 가져야 하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우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헌법 전문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독립기념관법 제1조 그리고 그 독립기념관의 정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기념관의 수장인 김형석 관장은 관장후보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상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우리 헌법과 앞서서 소개해 드렸던 법률, 정관에 위배되고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은 아니겠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우상호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대통령실의 의견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우상호 그렇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은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실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문제의식과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김용만 위원 제가 지난 8월 2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형석 관장에게 재차 질문했습니다. ‘여전히 일제강점기 때 우리 국민을 일본 국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하니까 즉답을 회피하더라고요. 즉답을 회피하고, 관장이 된 이후에는 정부의 입장이라는 말로 얼버무리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김형석 관장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모호하게 대답한

것 자체도 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3월에 게시한 글입니다. ‘1910년 강제 병합으로 조선은 국가로서 소멸했고 조선인은 강제적으로 일본인이 됐다’ 이렇게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마도 여전히 지금까지도, 독립기념관장으로서도 이 주장을 견지하고 있는 거겠지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이상호** 예.

○**김용만 위원** 보면 지난 정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의 외교부장관, 보훈부장관 그리고 국무조정실장의 의견과도 배치되고 아마도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님들, 대부분의 국무위원님들과의 의견에도 배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광복 80주년 기념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념사에서 역사인식 왜곡, 독립운동가 발언 취지 왜곡 등을 제가 조목조목 캐물었는데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얘기했던 이 광복 80주년의 기념사 일부분을 그냥 확대 왜곡을 한 것이고 나의 원래 이 기념사의 목적은 대통령의 국민통합 메시지와 같이 본인 또한 통합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김형석 관장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님의 통합 메시지에 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기념사 전문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어서—요새 국회에서도 챗GPT라는 것을 많이 쓰지요—챗GPT에다가 전문을 넣고 혹시 이 메시지가 통합을 의도로 한 메시지로 읽힐 수 있겠느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챗GPT는 또 답변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김형석 관장의 광복 80주년 기념사가 국민통합의 메시지로 읽힐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광복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인정하고 역사 논쟁을 멈추자는 표면적인 통합 지향 의도가 있었지만 실제 국민통합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 광복을 의미하지요.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은 항일독립운동의 주체성과 공로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뉘앙스가 있고, 두 번째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프레이밍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세대와 그 후손에게 역사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이기도 하고, 세 번째 연합국 선물론은 특정 역사관—뉴라이트 계열이라고 나옵니다—계열과 연결되어 해석될 수 있어 의도와 무관하게 정치적 편가르기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큼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의도,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논쟁을 끝내자라고 표면적으로 말하지만 실제 효과는 발언의 어휘, 순서, 맥락 선택으로 인해 분열과 반발을 유발, 따라서 김형석 관장의 기념사는 메시지 설계 차원에서 통합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고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킨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한다’.

정무수석님께서는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분석과 다를 수 있겠습니까만 실제 수석님 혹은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이상호** 글썽요, 이분이 학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독립기념관장의 직책을 맡은 이후로 유관 시민단체라든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단체들과 갈등을 빚었고 그래서 제대로 된 기념식을 할 수 없었던 점들 그리고 올해 80주년 기념사 이후에 다시 또 시민사회단체

소속원들이 현재 독립기념관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면 오히려 이분의 의도와 달리 계속해서 분열과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분이 발언에 특히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만 위원 실제로 그러면 독립기념관은 어땠나를 바라보면 독립기념관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내용과도 배치됩니다.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독립투쟁과 외교 활동에 의해 광복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를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간 이런 내용으로 연구사업만 6회, 전시회만 5회 등 총 열한 번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정작 독립기념관장, 세계사기념관장이 아니고요 독립기념관장이 세계사적 역사 풀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독립기념관의 노조부터가 들고일어나서 사과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김형석 관장은 지금 역사관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작년 국정감사부터 이번 보훈부장관님 인사청문회까지 김형석 관장의 인사절차의 하자를 계속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아마 보훈부장관님께서도 이 내용을 아실 거고요.

의혹투성이인 인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그리고 오영섭 이사의 위증 고발, 독립기념관의 국회 의견 요구 자료 미제출로 인한 고발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광복회 또한 김형석 관장에 대해서 임명결정 무효확인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고 1차 변론기일이 지난 4일 전 21일에 열렸습니다.

피고가 원래는 윤석열 씨였는데요. 정부가 바뀌어 버렸지요. 바뀌고 이제 현재는 피고가 이재명 대통령이 된 겁니다. 변론에서 정부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임원추천위원회, 임추위에 배제된 과정이 정당한 절차였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의결한 사실이 담긴 구체적인 회의록과 표결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잘못 임명된 인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가 옹호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다시금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부 변론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이상호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 출석하기 전에 법률비서관실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률비서관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아직 제출받지 못해서 법적 대응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를 조금, 결정을 제대로 내릴 수 없다,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받아야만 이 법적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김용만 위원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신 지금 이재명 정부의 역사관 그리고 그 건강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한 국가관이 이 시점에 발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유심히 들여다봐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변론에서 정부는 ‘대통령은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추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임추위의 존재 자체를 형해화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임명에 대한 대통령 재량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임명 과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정부 주장의 취지는, 우리가 지금 우리 정권을 국민주권정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주권정부의 입장으로서는 부적절한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이상호** 글썽, 아마 전임 정부에서 이어져 온 정부의 입장을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참조해서 그 관련된 자료들이 입수되는 대로 법률적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작년 정무위에서 김형석 관장 임명 당시에 그 임명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국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임추위 관련 자료를 저희가 김형석 관장에게 독립기념관으로 요청을 했는데 지금 목살을 한 상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정감사를 위해서 정무위원회 의결 자료로 요구했던 임원추천위원회 목록 하나와 그리고 141차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건데요. 독립기념관 측에서 자체적으로도 이거를 내가 꼭 국회에다가 줘야 되냐라고 법무 검토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해당 법무 검토를 통해서도 해당 자료들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결론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재판에도 제출이 꼭 돼야 할 핵심 자료입니다.

그래서 정무위 차원에서 감사, 고발 등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윤한홍 위원장님이셔서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살이 된 채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훈부장관님 인사청문회 때도 참 웃긴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들을 김형석 관장이 대놓고 제출하지 않는데 보훈부장관님과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게 참 무색하게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국회가 정당히 자료 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도 반드시 제출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도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자료가 제출이 되도록 들여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형석 관장에 대한 국민감사청구가 광복회와 보훈부로부터 감사원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당시 임명 절차에 대한 하자부터 일제시기 한인 국적을 일본이라고 관장후보가 발언을 한 것 그리고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것, 김형석 임명의 헌법, 독립기념관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관 위배 등 아홉 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원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주무부처인 보훈부와 공법단체인 광복회가 정식으로 감사원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조치를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형석 관장이 광복 80주년 기념사로 또 논란을 야기한 거겠지요.

저는 정부의 헌법에 기반한 역사관과 국민 상식에 도전하는 김형석 관장이 더 이상은 독립기념관장으로 업무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급히 업무를 막고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지만 우리 사회의 역사관과 국가관이 다시 안정을 찾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광복회에서 이번 임명결정 무효확인 청구 소송 그리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25일, 오늘 아마 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가 면밀하게 검토를 이번에는 해 봐 주십시오. 해서, 진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재명 정부의 역사관 그리고 국가관이 잘못된 우리 사회의 지점들을 바로잡는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면밀히 검

토 좀 부탁드립니다.

보훈부장관님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형식 관장이 광복절을 두고 ‘연합군의 선물이다’ 이렇게 기념사에서 발언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연합국은 애시당초에 대한민국을 독립시킬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지요. 오히려 최소한 50년 정도를 신탁통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다가 1943년 카이로선언을 통해서 한국의 독립 보장 문구를 삽입하게 됐지요. 그러니까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의도되지 않았었고 이게 연합국의 일방적인 은혜, 시혜 같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하고 광복군을 중심으로 항일투쟁 역량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 바로 카이로선언이지요.

그리고 그 카이로선언은 이 세 가지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임시 정부는 충칭에서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항일전선을 구축했다는 것, 두 번째 중국의 장제스 정부는 임시정부를 적극 지원하며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연합국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한국광복군의 대일 선전포고와 군사활동은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실질적으로 입증했다.

카이로선언에서 인 듀 코스(in due course),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롭게 독립된 나라로 만들겠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윈스턴 처칠은 반대를 했었지요. 영국도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한국을 독립을 시켜 주겠다고 하게 되면 영국 또한 식민지를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았습시다. 하지만 계속해서 관철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쟁취했던 노력의 결실이겠지요.

그래서 독립기념관이 자꾸 이렇게 연합국의 선물이라고 하다 보니까 보훈부장관님께서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더더욱 좀 선전·홍보를 해서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 되는 반대급부에서의 행동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그렇지 않아도 카이로선언에 대해서는 일반 우리 국민들이 정확한 내용과 그 배경을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시정부를 비롯한 중국·미국에서의 우리 항일투쟁과 외교활동의 결과로써 카이로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 적극 홍보에 한 가지 더 추가 요청을 드립니다.

연합국의 선물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연합국이 승리를 했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다른 식민지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방되거나 독립을 얻지 못한 곳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식민지였던 캄보디아는 8년—그러니까 일본 패망을 기점으로 8년이 지나서—베트남 9년, 라오스 4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말레이시아는 무려 12년,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는 4년 그리고 우리랑 같이 일본 식민지였던 대만은 중국으로 편입이 됐고요. 만주는 소련으로 다시 점령을 당했다가 중국으로 귀속이 됐고요. 괌·팔라우·사이판 등 태평양제도라고 하지요, 그곳은 미국 신탁통치령으로 편입이 됐지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다수의 국가 지역이 연합국의 승리 이후에 바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한 겁니다. 그 승리 이후에도 재식민, 아니면 신탁통치를 겪어서 독립을 달성했거나 아직까지도 달성을 못 한 나라들이 많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보훈부가 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잘 알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훈부 특정감사를 할 수가 있지요, 보훈부장관님께서 동의하신다면? 지금 김형석 관장에 대한 2억 원의 학술연구비가 작년 4월에 지급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하고 난 다음에 진행했던 정책연구용역이 한 40개가 되는데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이 2억 원 상당의 금액을 그것도 단독입찰로, 수의계약으로 받아 간 건데요. 지금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원래는 연구자를 선정한 이유 등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또한 누락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훈부장관님이 좀 들여다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감사원장님도 이 자리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이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안 그래도 국민감사청구가 들어와 있고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형수 김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동구남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 AI 선도 도시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상식인의 관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 3년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제와 산업의 붕괴, 민주주의 파괴 그리고 헌법 파괴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3년을 잘 정리하고 글자 그대로 결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내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윤석열 정권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계엄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결위 결산에서 윤석열 정권의 결산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가 운영을 했는지, 예산 운용을 했는지 그 일각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정 최고 책임자는 형식상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나 실제 대통령은 김건희 씨였다는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료들 사이에서 윤석열은 V1, 김건희는 V2가 아니라 V1보다 높은 V0로 불렸습니다. 이건 가십거리가 아니라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 인사, 예산 운용과 관련된 심각한 사태입니다. 대통령실의 실세들은 대통령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 때 김건희용을 1부 더 인쇄하고 부처에 김건희의 인사 지시 등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그때 대체 뭐 하고 있었는가?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먹었는가? 대통령 관저에 1t 화물탑차로 소주 맥주를 가득 담아서 매주 배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퍼마시고 제시간에 출근했을 리가 없습니다. 한 언론이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6일까지 순방기간을 제외한 18일 동안 오전 9시 출근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그랬더니 출근 시간 9시를 지킨 날짜가 딱 이틀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소 세 차례는 가짜 출근 차량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었고 12월 3일 계엄을 준비하던 시기에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다른 시기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윤 어게인

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술을 먹고 있을 때 김건희는 무엇을 했는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불법 국정 개입자의 사고는 또 누가 장악하고 있었는가? 2023년 7월에서 9월 통화내역이 밝혀졌습니다. 김건희 씨가 관상가이자 풍수지리사인 백 모 씨와 열세 차례, 총 4시간 26분 동안 통화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시점은 해외 순방 직전이거나 그 기간입니다. 국가 의사결정이 역술과 풍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었던 것입니다. 그 같은 3년 동안 나라가 이만큼이라도 버틴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씨의 정부 인사와 예산에 대한 개입은 권한 없는 자의 범법행위입니다. 하루 종일 밝혀도 부족한 사례들 가운데 간략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여쭙보겠습니다.

KTV가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국악 공연을 녹화하면서 김건희 씨가 행정관들을 데리고 황제 관람을 했다는 것은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일이 만약 민주당 정권에서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김건희 쪽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거짓말로 일관했고 당시에 잘 또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나중에 KTV 사장은 국힘당에서 총선 때 수도권 전략공천을 받았고 KTV 방송기획관은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 됐습니다. 김건희 씨를 도운 대통령실의 행정관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이사장이 됐습니다. 당시 행사비는 쪼개기 발주를 했습니다.

쪼개기 발주는 김건희 씨 소록도 방문에 맞춰 KTV가 급조한 음악회에서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 있다는 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4년부터 28년까지 7000억~8000억 원 규모로 잡혀 있어서 예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타 면제를 받는 데 며칠이 걸린지 아십니까? 보통 빨라야 1년인데 4일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정권 예산편성에서 가장 부실한 사례입니다.

시간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협력기금 차관 지원 한도액이 기존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대폭 증액된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개발사업비 증액의 배경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통일교의 청탁이 있었고 건진법사 전성배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 선물 전달이 있었습니다. 국민 혈세가 쌔짓돈처럼 쓰였습니다. 이런 정권인데 내란 세력은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칩니다.

김건희 씨는 최근에 또 하나의 더 중대한 범죄 혐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때 일어났던 정치테러 사건, 이재명 대표 암살미수 사건의 배후 의혹입니다. 최근 한 방송은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과 밀접한 관계로 알려져 있는 김충식 씨의 동거녀 K씨가 한 증언을 폭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건희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사람을 모집했다’.

김건희 씨는 국정원장 법률특보인 김상민 특보를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발 벗고 나선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김상민 특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 암살미수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3일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커터칼 암살미수 사건입니다. 저기 ‘야당 대표 커터칼 살인미수 사건 테러 해당 여부’ 바로 저 자료입니다. 박선원 의원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커터칼을 볼까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다시피 18cm의 잘 간 양날 칼입니다. 원래 저 개조 전 테러 흉기였는데 저것을 양날을 갈아서 전혀 다른 칼로 만들었습니다. 저 칼이 커터칼 아닌 것 아이들도 다 알겠습니다.

김상민 특보는 보고서에서 ‘테러가 아니다. 테러라 해도 법적인 수단, 결과가 달라질 것이 없어서 테러를 적용할 실익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문건을 근거로 국정원은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에 테러 미지정으로 보고하고 대테러합동조사팀 가동이 불필요하다는 취지를 구두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4월 3일이면 어떤 날입니까? 윤석열 파면 하루 전입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서 테러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을까요? 윤석열이 파면되고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가 시작될 것에 대비해 테러가 아닌 사건으로 규정해 두려는 속셈 아니었겠습니까?

김상민이 이토록 무리해서, 무리한 보고서로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김건희는 또 왜 그렇게 김상민을 챙겼겠습니까? 국정원은 김상민 특보는 전 원장의 자문역에 불과해서 국정원 공식 법적 판단이나 입장을 대변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인사가 작성한 문건을 근거로 테러 미지정으로 보고됐는지 그 과정의 적법성, 책임, 지시선·승인선 전반을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린 것은 아직도 대한민국에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을 어게인하자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인의 눈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상식을 거부하는 세력이 여전히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님, 국정이 이런 식으로 운영됐다는 것이 정말 해괴하고 참으로 황당합니다.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이 더 뚜렷해진다고 보는데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정치 테러 사건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충실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구윤철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정진욱 위원 나랏돈이 이런 식으로 쓰였다는 것 믿겨지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신뢰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국가가 그야말로 멸절한 분들이 모여서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멸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부총리님의 명확한 말씀을 한 번 더 들어 보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국가의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진짜 한 톨이라도 투명하고 또 국익에 맞게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욱 위원 상식인의 말씀인데 그 상식이 지난 3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과 다시 한번 공유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당시 박홍근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특정 정부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입니다. 또 그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당시에 구체적 적용 대상을 놓고 이견이 있어서 실행은 안 됐었는데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을 넘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다시 추진해야 할 시점인데요. 이 임기 일치하는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야의 정쟁 사안이 아니고 국가 경영과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 자리가 정치적 전리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관과 관련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사가 임명되어야 공공기관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님,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저도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법안들이 제출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예.

우상호 정무수석님께 여쭙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우상호 예.

○정진욱 위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차기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유불리가 갈릴 수 있는데 사실 이 법안의 통과는 윤석열 정부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에, 이재명 정부에 오히려 손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우상호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은 야당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 1년 차에 제가 야당 대표로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 임기를 해촉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였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게 당을 불문하고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일인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번 국회에서 의논해 주시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불일치돼서 생기는 갈등 혹은 비효율을 정리해야 됩니다.

○정진욱 위원 재판에서 ‘모호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런 법언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국가적 이슈에서 여야의 논란이 있을 때에는 ‘국민의 이익으로’라는 기준이 저는 관철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한수원의 황주호 사장이 임기가 8월 19일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황주호 사장이 지난 체코 원전 계약을 앞두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협의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계약 내용을 이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의 치적 홍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말려서 무려 50년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국익을 해치는 매국 계약, 거의 식민지 계약 같은 계약을 했는데요.

(박형수 간사, 한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이미 8월 19일로 임기가 만료됐습니다마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임무를 계속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무수석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우상호 그런데 지금 한미 간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조금

더 같이 논의해야 될 내용들이 아직 남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분의 거취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습시다만 체크에 이어서 그 이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아직은 이분이 좀 더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저는 직무정지라는 형식으로 물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쭙보겠습니다.

과기부장관님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여기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있었지요? 이때 윤석열 대통령은 위원회가 구성된 첫 회의만 참석하고 한 번도 참석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번 참석해서 딱 두 번 위원회가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사실 AI의 발전은 오직 민간의 창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AI위원회 구성을 새롭게 하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9월 초에 국가AI전략위원회로 개편돼서 시작을 합니다.

○정진욱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대통령님이 위원장님으로 그리고 부위원장으로, 정부위원 그리고 민간위원이 부위원장을 맡아서 전체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정진욱 위원 국가가 위원회를 만드는데, 여기 계신 우리 국무위원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회가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는데 국가AI전략위원회만큼은 실제로 일하는 그런 위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무총리님께 여쭙야 될 것 같은데요. 광주의 경우에 AI 선도도시를 일찌감치 표명하고 AI 중심의 산업 국가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 이미 거의 끝났고요. 내년부터 AX 실증밸리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AI컴퓨팅센터 유치를 위해서 지금 뛰고 있는데 실제로 AI 모빌리티 국가 시범도시가 되려면 국가컴퓨팅센터가 한곳에 같이 있음으로써 집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총리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욱 위원 국가컴퓨팅센터와 함께 AX 실증밸리 조성 사업을 광주가 AI 선도도시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컴퓨팅센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엔비디아가지고 있는 GPU, 아마 한 1조 2000억 정도 투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 곳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욱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광주가 AI 선도지역으로 시작되는 과정부터 제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정진욱 위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그리고 지금 AI 발전을 위해서 GPU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광주시장님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일이 충분히 진행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잘하셨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아까 조은희 위원님께서 확인을 요청하신 것 중에 하나 정정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잠시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병도 예,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 김민석 죄송합니다. 서류를 막 받는 과정에서 정진욱 위원님 마지막 질문을 들어서 그 질문을 놓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조은희 위원님께서 25년 8월 12일 발표된 26년 국유재산종합계획 관련한 데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핵심적 요지는 기재부가 국토부를 패싱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발표했고 그것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주셨는데 실제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기재부에서 국유재산의 중장기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매년 발표해 온 것이고 그렇게 발표해 온 사례가 다수 있고, 해당 안건을 다루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자체에 국토부차관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택 공급 관련 사항은 양 부처가 사전 협의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다음은 국민의힘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읍의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국방위원회에 있는 한기호 위원입니다.

먼저 총리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의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동결-축소-비핵화 이렇게 3단계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총리님?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동결이 우선 돼야 그다음에 축소가 되고 비핵화가 될 텐데 동결이라는 뜻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동결이냐?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하는 것을 중단하는 거냐,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거냐, 핵실험을 중단하는 거냐.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동결 상황으로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바로 그러한 사안들 하나하나의 개념 규정과 관련해서도 그 여러 가지 해석과 개념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동결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가, 얼려 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어느 차원의 것인지가 없으면……

○국무총리 김민석 저 문제는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틀의 원칙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그냥 단순하게 말로써 끝낼 것이 아니라 구체화시킨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그러면 김여정은 뭐라고 했는가?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도 없다. 한국에는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 외교 무대에서 잡역조차 차례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우리는 북한의 상대가 아니다,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비핵화 단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상대의 반응이 이렇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북한이 평소에 굉장히 다양한 어조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기호 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 또 하나 보시지요.

지금 대통령께서 일본에서 한일 정상 공동성명서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공동성명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 그다음에 북한의 반응 그리고 일본에서 우리 대통령이 다시 일본과 이야기한 내용, 이게 전부 다 하나도 연결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또 한번 보시지요.

북한은 헌법에 핵무기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놔습니다. 저게 2023년도 9월 달에 헌법에 명시한 겁니다.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하여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로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로 변경·양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 놔습니다. 부연해서 김정은이 설명한 내용이 ‘핵무력의 건설을 정착을 시키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다칠 수 없게 하고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하는 것이다. 즉 핵무력 강화와 여기에 대한 정책 기준을 명명백백히 구체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동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북한의 반응을, 김여정의 반응 그다음에 헌법을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대화나 협상으로 해서 돌파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대화와 협상 외에 어떤 방식으로 돌파를 하시자는 뜻인가요?

○한기호 위원 아니, 저런 상대하고 우리가 지금 동결을 이야기해야 되고 감축을 얘기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잖아요? 동결이 얘기가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저런 상대와 상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를 향하는 과정에 한편으로는 안보를 튼튼하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동맹들과 함께 비핵화를 향해 가는 과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취해 온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게 제삼자가 봤을 때는 하나의 립서비스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지요. 앞으로 가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보겠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보는 눈은 ‘야, 계란으로 바위 치기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우리를 계란으로 보고 북한을 바위로 보신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기호 위원 국방부차관님, 지난번에 국방부에서 지금 명령과 관련해서 지켜야 될 것

을 얘기했는데 여기 한 언론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경계근무 중 술을 마시지 말라는 상관의 명령 등을 따르지 않아도 항명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지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 부분은 조금 취지가 곡해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인 처분을 받도록 돼 있는데 항명죄라는 부분을 간부들을 대상으로 법무장교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자료에 포함돼 있던 것을 마치 그러한 행위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 양 그렇게 곡해해서 해석한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호 위원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지요? 잘못된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 부분들은 법무장교, 전문성이 있는 법무장교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교육할 겁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차관님이 그렇게 남 핑계 대면 안 되고, 차관님도 군 생활 얼마 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중대장이 가혹행위 하지 말라 했는데 가혹행위 했다, 이게 정당한 명령에 해당돼요, 안 돼요? 가혹행위 하지 말라는 것은 정당한 명령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런 부분들은 그것을 규제하는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처벌받도록 돼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가혹행위 하지 말라고 한 명령이 잘못됐냐고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런 부분과 교육과 지시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지금 과도하게 지금까지 해 오던 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법의 잣대로 전부 다 갖다 들이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군 생활 해 오시면서 실제로 매번 말할 때마다 또 지시할 때마다 법을 찾아보고 하신 것 아니잖아요. 이것이 언론에 나와서 군을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특검에서 오산기지에 압수수색하러 갔었지요, 차관님?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한기호 위원 이게 절차가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미 오산기지는 한미 공동작전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MCRC가 한국군만 쓰는 겁니까, 미군과 함께 쓰는 겁니까? 연합작전을 하는 곳이지요? 그러면 미군의 협조를 얻었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때 당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부분들은 한미 연합작전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순수히 한국 측 관련된 부분들은……

○한기호 위원 아니지만 그 장소에 들어가려면 바로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정상적인 출입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기호 위원 SOFA의 규정을 한번 보십시오.

오산기지 들어갈 때 경계근무는 누가 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한국군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입구부터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연합으로 근무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을 완전히 무시하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

금,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지금 군의 문제가 심각한 게 군에서 간부들이 얼마나 떠나는가 한번 도표를 보십시오.

다른 국무위원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간부들이 희망전역 하는 인원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은 보통 있었던 숫자가 아니에요. 2021년도에 1351명에서 2869명으로 늘었어요. 이제 군은 가운데 허리가 없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 부사관 중사·상사, 위관장교, 소령 영관장교 이렇게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이 철원·화천·양구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군인들을 수없이 자주 봅니다. 군대생활 못 하겠다고 다 해요. 다 떠난 다음에 군은 누가 이제 지킵니까? 군은 누가 지켜요?

다음.

제가 왜 이거를 내놨느냐? 이걸 총리님부터 기재부장관님까지 다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왜 있어요? 단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든 거예요. 육아휴직을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는데, 올해 육아휴직 군인이 5160명입니다. 작년에 최대 5554명까지 올라갔었어요. 이 육아휴직을 가는 인원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공무원들은 주지요. 학교 선생님, 대체인력이 다 들어가지요. 공무원도 다 주지요. 군인은 대체인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차관님?

○국방부차관 이두희 ……

○한기호 위원 안 주잖아요. 군대 말로는 부수병력이라고 하는데 교육부수병력과 행정부수가 있는데 행정부수에 육아휴직자가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행정부수에 육아휴직자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원·투·쓰리·포 참모 중에 투가 육아휴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가면 원이 하든 쓰리가 하든 어느 참모가 임무를 대행합니다. 대행하면 그 대행 비용을 월 20만 원 줍니다. 둘이 나눠 하면 10만 원, 10만 원입니다. 누가 하려고 합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두 배를 하라고 하는데 누가 합니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군인보고 열정페이만 가지고서 군대 생활하라. 됩니까? 왜 군인들은 대체인력을 안 주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새 정부가 들어와서, 지난번 정부에도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 앞의 정부에도. 문재인 정부에도 얘기했고 윤석열 정부에도 얘기했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도 또 얘기하는 겁니다.

대체인력이 없습니다. 이러니 군대에 남아 있습니까? 1년에 5000명 이상이 대체인력 없이 지금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왜 안 채워 줍니까?

다음 한번 보십시오.

계급별로 보십시오. 소령·대위·상사·중사, 바로 중간 허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육아휴직을 가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그 일을. 가장 힘든 일을 합니다. 소령 때 군대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때입니다. 이때 육아휴직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아휴직을 가면 내가 감으로써 동료들에게 불편을 주니까 가는 사람도 항상 뒤가 켜기는 거예요. 대신할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대신해 줘야 돼요. 그런데 전부 손 놓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군의 인력이, 지금 허리가 완전히 끊어져 나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한 가지 예만 든 겁니다, 저거 하나만. 다른 것까지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만 예를 든 겁니다.

총리님, 저거 조치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오랫동안 말씀해 오신 문제인데 대체인력제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도가 잘 안 나간 거 아닙니까?

○**한기호 위원** 대체인력이 없지요, 군은.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우리 문민 출신의 안규백 장관 새로 함께하면서 같이 의논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부수인력을 잡아야 됩니다. 왜 부수인력을 잡아야 되는가? 군인은 밖에서 놓고 있는 군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놓고 있는 군인이 있으면 ‘와서 이 자리에 대신 근무를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군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은 대신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수인력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고로 하면 얘기가 다른 거예요. 군인은 다른 시스템으로 해 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해 준다는 거예요. 누가 반대하느냐? 행안부가 반대하고 인사혁신처가 반대하고 기재부가 반대해서 안 되는 겁니다. 국방부가 노력 안 했냐? 하지요. 하지만 안 해 주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이라도, 오늘 예결위원회 와서 이것 하나만 해결해도 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을 해요.

1년에 5000명 이상이 지금 자리를 비우고 있는데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개 사단의 간부가 얼마나? 약 2000명 정도가 됩니다. 5000명이 넘잖아요. 5500명 되잖아요. 3개 사단 간부가 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말이 됩니까? 상비 3개 사단의 간부가 다 없는 공석이다. 이렇게 해 놓고 군인들에게 근무 잘 해라, 사기 올린다고 올라잡니까?

다음은 주거 문제입니다.

주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병사들 위주로 주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생활관에 통상 8~10명 쓰던 것을 4명 생활관으로 바꿉니다.

간부는 어떻게 가느냐? 간부는 지금 방 하나에 2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독신 숙소에. 2명씩 들어가 있는데 간부들도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거든요. 탈의해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고 잠잘 때 복장부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1인 1실로 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어요. 1인 1실로 언제 가느냐? 지금 기존에 2인 1실도 부족해요. 이것을 속도를 내라. 이것을 속도를 안 내면 군인들에게 봉급만 가지고 근무하라고 할 수가 없다, 수당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줘라. 지금 우리 아이들도, 집에서 애들 키우면서 아들이 둘이야, 그런데 둘을 한 방에다 키워 보십시오. 성장하면서 좋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성인입니다. 한 방에 둘씩 들어가라? 방을 하나씩 달라는 거지요. 이것은 시대적인 요구예요. 이러니 간부들이 군에 남느냐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육아휴직,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간부들이 떠나는데 군이 어떻게 전투력이 유지가 돼요?

지금 연도별로도……

다음, 준공 연도를 한번 보십시오. 2024년도 통계인데 20~30년, 30년 이상된 주거 환경입니다.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을 했냐? 군에 리모델링 비용이 없어요. 그냥 보수를 하지. 보수 비용은 있지만 리모델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낙후됐겠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군의 간부들이 왜 이렇게 자꾸 떠나느냐 아무리 진단해도 답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게 이렇게 불편한데.

차관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이런 부분들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고 정부 내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최대한 단시간 내에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예산결산하고 똑같이 연결돼 있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 안 해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번에 육아휴직 문제하고 간부 숙소에 대한 것은 파격적으로 좀 예산을 태워 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재부장관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국방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해 주실 겁니까, 안 해 주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국방, 이게 일시에 할 때 소요라든지 또 다른……

○한기호 위원 아니,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세요? 군대 말로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그 대답 하시라니까. 해 줄 겁니까, 안 해 줄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국방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한기호 위원 국방부, 달라고 할 겁니까, 안 달라고 할 겁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잘 협의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렇게 뜬금없이 얘기하니 군이 망하지요. 군 선배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군에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기재부에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 말 못 해요? 그 말도 못 해요? 차관님도 장군 출신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게 요구……

○한기호 위원 그 말도 못 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게 눈치 보면서 장군 됐어요? 똑바로 하세요, 좀.

지금 야전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데도 이렇게 뜬금없이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총리님, 잘 감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한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갑,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위원** 김민석 국무총리님과 그리고 국무위원님들 모시고 2024년도 결산심사를 하게 돼서 개인으로서도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2024년도 결산 들여다볼 때 참으로 가슴 아프고 의혹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ODA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ODA 예산이 2023년도와 2024년도에 급작스럽게 증액된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김승원 위원** 2022년도에 약 4조였던 예산이 2023년도에 4조 7700억, 7700억이 늘었고요. 2024년도에 6조 2629억, 약 1조 4000억 정도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은 5조인가요, 전액 삭감을 해서 연구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ODA 예산 중에 2024년도에 특이한 것이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그때 껴 있었습니다. 신규사업이 원래 11% 정도였다가 16% 가까이로 비중이 커졌고요. 그다음에 규모 액수도 4700억 정도였다가 9358억, 한 2배 가까이 다 신규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 예결위 초선이었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 기재부라든가 전 부처에 ODA 예산을 좀 신규로 빨리 집어넣어라, 이런 걸 좀 집어넣어라 이렇게 독촉이 심하게 와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DA 예산이 원래 사업 선정서부터 발굴해서 그다음에 수혜국과 협상하고 그러는 과정의 기간이 평균 한 2년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 집어넣으니까 몇 개월 만에, 정말 1년 안에 신규사업이 그냥 막 반영이 되고 있어서 그때 정말 걱정스러운 눈길로, 기재부 공무원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것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걱정스러운 탄식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더군다나 신규 ODA 사업 중에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 저는 캄보디아라고 보는데요.

PPT 한번 봐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수차례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캄보디아 OAD 예산이 2022년도에 1789억이었다가 2025년도에는 4353억 원으로 2.4배가 증가되었고, 특히나 2025년 예산안에는 민간협력 전대차관이라 그래서 사업의 특정 없이 언제든 수혜국의 선택에 의해서 빼먹을 수 있는 예산이 30년 만에 648억 원이 배정됐고,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도 의심스러운 동일한 액수의 민간협력 전대차관이 포함되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것은 국가에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했던, 그래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실까요?

윤석열 정부하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요. 그 직전까지만 해도 ‘외교부장관은 기재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지원방침을 해당 개도국 정부에 알리고 이를 해당 개도국 정부가 수락할 때에는 정부 간에 협정을 체결한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 중에 7호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2024년 7월 달에 ‘외교부장관은 기재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지원방침을 해당 개도국 정부에 알리고 그다음에 정부 간에 협정을 체

결한다'라고 해서 절차를 단순화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즉 수혜국이 대한민국에 이러이러한 것을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정보들과 사람들, 실무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변동된 것을 그전에는 개도국 정부, 수혜국에 알려져서 이렇게라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할 것인가라고 물어보고 수락을 할 때 체결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때 개정된 건 던져 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알리고 그냥 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오전에 안도걸 위원님께서도 ODA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게 말씀을 하시면서 2024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라든가 또 재점검 또 ODA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ODA와 관련해서 예년에 비해서 과도하게 특정 국가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 발견됐고 그와 관련한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불필요하다라고 판단된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지금 해당 관련 ODA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볼 수 있는 대목에서는 가령 특정 종교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한 바가 있으나 저희 조사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특검에서 관련된 부분이 수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저도 특검을 통해서 이것은 강제수사의 방식으로라도 살살이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의 경우는 특히 왜 그러냐 하면 초고속으로 집행된 예산이 2281억,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해 동안 캄보디아에 주겠다고 하고 사실 실제 집행액은 그것보다 더 적거든요. 그런데 초고속으로 집행된 것이 2281억이고 저희가 기재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11월, 12월 그다음에 2024년 7월 그다음에 10월, 2025년 3월 이렇게 승인한 후에 바로 2025년도에 예컨대 한·캄 우정의 다리 건설 사업은 588억, 다른 지역은 251억, 231억, 337억과 같이 기존에 비해서 몇 배에 대한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수사라든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PPT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갑자기 캄보디아에 대한 ODA액이 증액된 것이 통일교와 관련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통일교에서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태평양유니온본부 건립 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2022년 3월 22일 통일교 해외사업본부장인 윤영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2022년 4월 달부터 김건희 씨에게 뇌물 공세가 시작이 됩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샤넬백 2점 그리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6000만 원 상당의 그런 목걸이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고가의 물품들이 김건희 씨에게 넘어갔고 그것이 캄보디아에서 ODA가 증액된 그런 이유라고 저희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는 담당 검사였는데 그때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중의 하나가 캄코시티 사건입니다. 월드시티의 시행사 대표인 이 모

씨가 캄코시티에서 그 시행 개발을 하면서 2400억 원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자금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것을 다 횡령했거나 혹은 파산에 이르러서 부산 시민들에게,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건데요.

더하여 부산저축은행이 시애틀 신공항 부지 사업도 했었고 그것이 지금 캄보디아의, 예보에 아마 묶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김건희 두 분이 캄보디아 투자라든가 또 예보가 갖고 있던 권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캄보디아 ODA 사업을 통한 국고 손실, 국고 횡령, 빼먹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었고.

또 뉴스타파 모 기자에 의하면 캄보디아에서 들려오는 전언은 캄보디아 정부 총리라고 이미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데 총리와 김건희 측 사람과 사이에 뒷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 제기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츰 수사라든가 또 취재를 통해서 더 사실이 나오면 그때 다시 서면질의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ODA 관련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통일교 관련 의혹을 말씀하셨는데 표면상으로는, 규정상으로는 특정 종교 관련, 종교를 표명하는 형태의 사업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통일교와의 관련성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그 과정에서 정부의 특정 직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들은 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면 총리님이 어쨌건 이 ODA 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해당 기관에다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내라고 그렇게 말씀 주실 수 있는 거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캄보디아 녹색금융 프로그램 한번 보실까요?

PPT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아마 급작스럽게 어디 들어간 것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캄보디아의 녹색금융 프로그램, 결국 금융기관을 통해서 우리 ODA 자금이 지출될 예정이었는데 결국에는 무산됐습니다. 아마 이게 신중하게 계획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 말이 다릅니다.

예컨대 이 ODA 자금을 집행하거나 검토하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산업은행이 선제안을 해서 그 제안을 기초로 해서 캄보디아 녹색금융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렇게 의원실에 답변을 썼고요. 한국산업은행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제안한 적 없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거짓말했다는 거지요. 자기네는 제안한 게 없고 제안 없었다는 것에 대한 공문을 작성해서 의원실로 보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재부에 반영된 예산 총규모를 보면 665억 정도의 규모로 잡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말이 서로 다르니까 결국에는 이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수출입은행에서 못 해 먹겠다라고 아마 철회를 했다는데, 이것은 기재부 부총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 사업이 2023년도 예산심의가 되어서 202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다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수출입은행에서 이 사업의 지출구조가 맞지 않고 그래 가지고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출입은행이 이렇게 포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민간하고 전

대협약을 체결해서 하려고 한 사업이었는데요 저희들이 2차 추경 하면서 감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EDCF는 그 나라 정부가 해야 되는데 종교단체가 이렇게 요구하는 건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정부가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따져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면 이 665억 원은 아까 말씀드린 민간협력 전대차관 648억 이 예산으로 하려고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350억이 반영돼 있는데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감액이 됐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이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김승원 위원** 그게 아니라 그 전에 포기한 것으로 저희 의원실에서는 파악을 했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지만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시켜 버리면 사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김승원 위원** 감액을 시켜서 포기한 게 아니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수출입은행이 그 전에 사업 못 하겠다라고 포기를 했다고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감액하기 전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 부분은 제가 실무자들에게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사업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2023년 예산을 세울 때지요, 타당성 검토가 있기 전에 이 예산이 이미 반영된 것으로 내정이 되어서 이것이 시작이 됐고 그 후에 산업은행이 이걸 지출을 하려고 보니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민간협력 전대차관에 대한 문제점도 국회에서 제기를 해서 그냥 사업 무산, 포기를 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수출입은행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저희들은 또 이게 새로운 사업의 형태니까 한번……

○**김승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 누가 분명히 외압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사업 짚어서 캄보디아에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라라고 해서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665억 원이 예산에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하려다 보니까 이미 윤석열 정부는 무너졌고 그러니 이 책임은 지기 싫으니까 그냥 무산시키고 이렇게 한 것으로 저희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지금 특검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김승원 위원**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을 할 테니까요 그 자료를 갖다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줄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주시고, 지금 자료를 굉장히 안 주고 있습니다. 감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요청하는데도…… 지금 의혹 단계에서만 있는데 자료를 주면 저희도 한번 꼼꼼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저는 1개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 기억은 분명히 그때 기재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에서 ODA에 이것 집어넣어야 된다고 실무 국장들이나 과장들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또 이게 나중에 문제 될까 봐 염려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거든요.

아까 캄보디아 이천몇백억, 사천몇백억 그 예산 저희가 증가됐다고 말씀드렸지요. 구성을 보면 전 부처가 해당이 됩니다. 전 부처에 캄보디아 넣을 것 다 뽑아 오라고 했나 봅니다. 그 증액된 예산은, 여기 문체부도 있고 농림부도 있고 또 외교부도 있고 기재부도 있고, 거의 전 부처를 망라한 그런 예산들이 다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테니 아무튼 자료는 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또 ODA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우크라이나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한번 보실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ODA 관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도 역시 특검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이걸 워낙 국회에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2023년 5월 달 1000원대였던 삼부토건 주가가 두 달 만에, 7월 15일, 7월 17일에 5배로 증액이 되었고 그 과정에 대한민국의 국토부장관과 그다음에 추경호 부총리가 여기에 동원됐다고 하는 그런 의혹들이 있었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갑자기 갔다는 것이지요, 갑자기 갔다는 것이고.

그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예산이 총 4억 불입니다, 한화로 5500억인데요. 인도적 지원 2억 불, 그중에 1억 불은 현물이고 1억 불은 현금입니다. KOICA 무상원조 사업이 1억 불, 그것은 저렇게 물품을 구입해서 우크라이나로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자금융기구, 세계은행 월드뱅크를 통해서 수출입은행이 1억 불을 넣었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세계은행이 먼저 선집행하고 그 집행 내용을 보면 수출입은행이 그 1억 불을 갖다가 메꿔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

무려 5500억의 혈세가 우크라이나에 2년 만에 직접 지원이 되는 형태로 갔는데 이게 진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확인하느냐? 저 2억 불이 또 현금으로 간 1억 불이 진짜 저렇게 지원이 실제로 됐는지 자료를 갖고 있느냐. 그것을 달라고 해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혹시 이것 확인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EDCF에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기재부에서는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고 ODA……

○**김승원 위원** 그런데 아마 결산보고서만 보시고, 서류로만 확인하시고 실제로 어떻게 나갔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 하실 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MDB를 통해서 간 부분은 세계은행에서 집행했다고 하면 그것을 가서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김승원 위원** WB는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은 조금 믿을 수 있

다고 치더라도 이쪽의 인도적 지원 2억 불이라든가 이것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 부분은 외교부에서 KOICA로 인도적 지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좀 확인……

○김승원 위원 현물 지원이 KOICA도 있지만 인도적 지원 1억 불에도 현물 지원이 있거든요. 물품들 보면 대개 중복된 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그렇게 간 건지 아니면 서류로만 이렇게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법을 한번 제도개선이라든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승원 위원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ODA가 단계적으로 확장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여기 총리님도 계시고 기재부 부총리님도 계시고…… ODA 기본계획이라든가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2023년도와 2024년도, 2025년도에 이루어진 ODA의 갑작스러운 증액과 사업성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사업 무산 그다음에 이런 결산은 저희가 끝까지 추적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자료 제공은 충분히 요청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검에서도 이 부분은 정말로 나라의 명운을 걸고 국고 손실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김한규 위원님, 황정아 위원님까지 질의하신 후에 만찬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시를 출신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경제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2024년 결산 결과를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대규모의 세수결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손 자체도 문제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요.

2024년의 경우에는 30조 8000억, 23년의 경우에는 56조 4000억, 2년 연속 초유의 세수결손이 발생을 했는데 오늘 논의를 들어 보면 세수 자체가 감소되는 문제와 세수결손 애기가 섞여 있는데 좀 별개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인세율이 낮아져서 예년보다 세수가 줄어든 것은 조세 체계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 됐던 건데 문제는 세율이 낮아지는 것을 고려해서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틀린 게 세수결손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세수결손 부분은 세율 자체보다는 경기 예측이라든

지……

○**김한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경기 예측 얘기하셨는데 세수결손은 매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 20년 자료만 보면 비슷한 정도의 규모도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지난 2년 동안 세수결손 금액이 컸었는데요, 특별히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금액이 큰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56조 4000억하고 30조 8000억 해서 거의 한 90조 정도가 2년에 발생한 건데 그 부분은 결국은 우리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도 세수가 더 적게 들어오는 그런 식의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김한규 위원**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았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지요. 일반인들과 달리 기재부에서는 세수 예측을, 경기변동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세수 예측 모델 자체의 적절성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더 넘어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측 자체를 잘못했으니 그러면 예측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우리가 세수가 줄어들 거라는 것을 알리기 싫어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예측했거나 아니면 정말 정말 정말 예측할 수 없던 아주 이례적인 일이 2024년에 벌어졌거나…… 저는 2024년에 그렇게 우리나라만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가지 요소 중의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이 작년도에 30조 넘게 줄어들었다는 건데 국가부채는 결국 얼마나 늘어나게 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세수가 줄어든 것보다도 국가부채는 적게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줄어든 세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금을, 기금의 유휴 재원을 많이 사용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의 유휴 재원을 쓰는 만큼 국가채무 증가가 줄어들고 그래서 국가채무는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떨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한규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예측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부가 결정을 그렇게 한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세수가 30조가 부족했다라고 하면 방식은 돈을 더 끌어오거나 아니면 덜 쓰거나 두 가지 방식 아닙니까? 아니면 섞어 쓰거나 그래야 되는데. 경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수가 부족했던 거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한규 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려울수록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예상했던 것만큼도 안 쓰는 건 되게 문제다라고 작년부터 계속 비판을 했던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부족하면 부채를 만들어서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정부가 그것보다는 어떻게든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요, 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전용 문제도 얘기했는데 장관님도 기재부 출신이니까 기금 운용을 하는 방

식은 공자기금을 활용하는 건 예전부터 계속해 왔던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한규 위원 그런데 너무 그게 문제의식이 없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그냥 정부가 이 주머니에 있는 것 저 주머니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기재부가 작년에도 대응 방안 발표했고 부총리께서도 지금 그런 톤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국가재정법상…… 아니, 설명하시지 말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한규 위원 국가재정법상 기금은 어떤 목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기금은 기금별로 다 고유한 목적이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렇지요. 특정한 목적이라고 법에는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금을 그때그때 정부가 예탁 방식으로 가져왔다가 돌려놔다가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국민들한테 있는 그대로의 국가 부채 상황을 보여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보다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건 다른 부분인데 계속 말씀을 하셔 가지고 못 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에, 저는 지역구가 지방인데요. 작년의 경우에 11월 말, 12월 초쯤에 지방세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액수가 정해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하고 재작년은 줄어드는 방식이 달랐는데 어떤 방식으로 줄어드는 금액을 산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내국세가 줄어들면요 교부금이 줄어듭니다. 그게 10조 정도 줄어들었고요.

○김한규 위원 그러면 원래 약 20% 정도씩 아닙니까, 내국세의? 그러면 그 비율대로 줄어드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 비율만큼 줄이려면 10조를 줄여야 되는데요 3조 5000억 원은 주고 6조 5000억 원은 계획대로 줄인 겁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딱 산정된 방식에 따라서 내국세의 20% 정도씩을 배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재량을 갖고 그냥 이 정도는 주고 이 정도는 안 준다고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한규 위원 그것을 작년 말에야 해 준 것 아닙니까,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재원 자체가……

○김한규 위원 그렇게 되면 갑자기 줄어드는 지방정부는 또 지방교육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내국세가 줄어들면 당연히 줄여야 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3조 5000억은 주고 6조 5000억만 감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의 사정을 고려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세수 예측을 잘못된 부분은 딱 빼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죄 자체는 세수 예측에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세수 예측을 그렇게 했으면 지방도 그에 맞게 살림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우리가 이만큼 벌 것 같으니까 너네한테도 이만큼 주겠다고 했는데 그 예측이 잘못돼서 그러면 정부가 어떤 방안을 취할지 결정하기 전까지는 지방은 11월 말까지, 12월 초까지 지방채를 새로 발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추경을 해야 되는지 못 정하고 어떤 금액을 줄여야 되는지 정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이렇게 세수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지방이 얼마씩 줄이면 되고…… ‘아니, 10조 다 줄여야 되는데 3조 5000억 안 줄였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런 태도로 기재부가 일을 하기 때문에 지방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은 그해에 이미 내년도 예산을 보통 지방의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정부 예산이 12월 초까지 되지 않고 12월 말까지 결정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또 뒤늦게 지방세 국비 비율 맞추려고 또다시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지방이 실제적으로 이런 정부의 세수 예측으로 인해서 어떻게 도미노 연쇄효과로 피해를 보는지 이런 부분은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한규 위원 감사원장님.

○감사원장 최재해 예.

○김한규 위원 매년 5월에 국가 결산심사에 대해서 감사원도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예.

○김한규 위원 지금 말씀드린 2024년도 결산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세수 예측이 제대로 되지 못한 데서 발생한 문제가 크다고 하는데 감사원에서 바라본 결산보고서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감사원장 최재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보고서에 좀 언급을 했고요, 세수결손이 된 부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원인이나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한규 위원 시정요구를 하셨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예?

○김한규 위원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저희들이 거기까지 못 했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그 관련된 감사를 저희들이 한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2022년에도 조금의 결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감사원이 그때도 결산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는 7000억 정도 결손이 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훨씬 적은 금액인데 그때는 주의 요구를 여러 건 하시고 이 초과 세수 문제에 대해서 수십 페이지나 다루셨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건 한번 제가 비교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저는 편향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왜냐하면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작년 재작년이 훨씬 큰데 올해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원이 아무런 주의 요구를 하지 않고, 물론 2022년에는 초과 세수가 있어서 오히려 추경을 통해서 조정된 경우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산 금액은 1조도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감사원의 문제 제기와 주의 요구가 있었다. 그 부분 한번 보시고 지금이라도 이게 균형이 맞는지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예,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일정 수준의 세수 부족, 예측이 잘못된 건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가게에서도 일어나니까. 거의 700조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50조, 30조 그리 큰 금액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작년 재작년이 이례적으로 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2022년의 경우에는 또 반대로 과다하게 세수를 거뒀는데 그때는 그래도 추경을 했습니다. 국회에 있는 대로 얘기하고 이 부족한 부분, 남는 부분을 어떻게 얘기할지 원래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하고 논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제가 의도적으로 장밋빛 전망으로 세수를 예측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모델 자체가 이제는 안 맞는 건지, 기재부가 내년에도 또 같이 ‘올해도 경기가 예상보다 안 좋았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예.

보건복지부장관님, 장관님만이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님, 정부위원님, 공무원님들 하루 종일 앉아 계셔서 다들 이제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어제 저녁에 가족을 응급실에 모셔다 드리고 밤새 보호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까지 병실 배정을 못 받았는데 좀 전에 오후에 질의하다가 가족이 병실 배정을 받았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담당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의정사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응급실에서 진료과로 입원하는 데 이전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응급실에 내원하신 환자 가족들의 고생이 여전히 심하다. 지금도 각 진료과 병실에는 아직 교수님들이 당직을 서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다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지 않다. 제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응급실은 정말 많이 다녀 본 것 같은데 현장에서 느낀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여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올 9월에는 전공의들이 복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 그렇게 되면 교수들의 업무 부담이나 환자 가족들의 어려움은 해소될 수 있다고 예측하시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주로 수련병원이 대형병원이기 때문이에요. 전공의가 복귀하게 되면 입원환자 진료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개선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현재 8월 말까지 공모 예정인데 한 60~70% 정도가 지원하고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추가 모집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일종의 특혜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환자의 가족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다, 그런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결산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2024년 2월 달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갑작스럽게 발표했고 그래서 이 문제의 의료대란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예산집행 및 결산에도 고스란히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장관님, 2024년도에 이 의료대란 대응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한 3조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1.5조 정도는 수련병원에 미리 진료비를 지원한 거여서 현재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보면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으로 예비비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1.5조 정도.

○**김한규 위원** 2024년 본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았었는데, 아니지요. 처음에 3877억 원이 편성이 됐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김한규 위원** 그리고 1차 예비비, 2차 예비비로 이렇게 금액을 썼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예비비로 쓰기에는 엄청난 규모의 금액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너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도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예비비를 수조 원 수준으로 쓴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코로나19 대응할 때는 예비비를 많이 썼던 것이고요. 작년에는 한 3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중증환자 진료를 위해서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썼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전혀 2024년도 예산에는 반영돼 있지 않았던 부분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김한규 위원** 의정 갈등이 심화되니까 정부가 예비비 쓴 내역 중에 보니까 의료개혁 홍보하고 관련 콘텐츠 제작하겠다고 하면서 홍보비로만 90조를 썼더라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90억 정도.

○**김한규 위원** 아, 90억을 썼더라고요. 아니, 예비비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홍보 사업에 이렇게 90조 정도의 예비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90억.

○**김한규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90억의 예비비를 투입했다. 그래서 다른 예산들 보니까 예를 들어 1차 예비비 같은 경우는 대체인력 민간병원 파견 근무수당 59억 정도 썼어요. 59조가 아니라 59억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비에 이런 정도 예산을 쓰고 전체적으로 3조라는 금액을 썼다는 게 이 전체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국회의 동의나 국민 공론화 논의가 전혀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큰 문제고 결산 과정에서 엄격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3조 얘기하신 것에 혹시 비상진료 건강보험수가 한시 인상도 포함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제가 아까 3조 말씀드린 것은 건강보험에서 지원된 예산을 말씀드렸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예산에서 집행된 것은 한 3900억 정도가……

○김한규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예산 문제가 있고 건보료 재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지금 건보재정 같은 경우에 의사분들이 진료를 안 하니까 비상진료의 경우에 특별히 수가를 인상해 주거나 아니면 2인실 같은 경우에 보험수가를 원래 주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인상하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주로 응급실이나 응급수술 중증환자 진료에 가산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한규 위원 병원에 가 보면 병원이 한산합니다. 왜? 의사분들이 없으니까 환자를 안 받거든요. 그래서 한산해요.

또 한 가지, 병실을 줄입니다. 왜? 예전에는 다인실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를 인정해 줬는데 이제는 2인실 같은 경우도 해 주니까 병원 입장에서 줄여 버리는 게 재정적으로도 낫고 관리도 편해서. 그러면 환자는 입원할 데는 없고 가 보면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고 병실은 비어 있습니다. 의사가 없어서 환자를 안 받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아직도 환자들의 고통이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정부의 정책에 관해서 감사를 하거나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했는데 예상과 달리 실패한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추진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책과 달리 정부가 제대로 걱정했는지, 그에 대해서 예비비 투입과 건보료 투입이 적정한 수준으로 됐는지, 혹시라도 국민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해서 과다하게 예비비를 투입해 갖고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지 보건복지부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작년에는 의정 갈등 때문에 환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와 건보재원 지원이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적절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저는 의료대란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잘못된 정책 실패가 어떠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이것은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김한규 위원 시간이 부족해서 나머지 질의는 3일 차 질의 때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장님, 제가 아까 김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병도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30조 8000억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이 불용을 시킨 게 6조 원입니다. 그래서 6조 원 정도로 했더라면 문제가 없었는데 너무 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가지고 했다는 측면에서는 어쨌거나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왜 30.8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나 봤더니만 지난해에 경기가 너무 둔화가 됐습니다. 2023년도에 경기가 너무 둔화가 되어 가지고 법인세·종소세가 거의 19조 원 정도나 감소되는, 그러니까 경기 대응을 굉장히 잘못된 측면 이게 또 한 큰 요인이고요.

금년 5월 달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세수가 결손이 발생했나 봤더니만 경제지표 오차라 해서 딱 그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경기 대응을 좀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한병도** 알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 존경하는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국무위원님들 하루 종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수십 년간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원동력은 결국 과학기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IMF가 닥쳐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어도 R&D 투자를 삭감한 적은 없었습니다.

R&D는 우리의 미래 그리고 국민의 삶, 강대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격을 결정지을 가장 강력한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오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의 힘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들은 역대 정부들은 과학의 발전 R&D 투자를 중심에 놓고 그것을 늘리는 방향으로, 사실은 줄였던 적은 지난 정부 외에는 그 추세에 의해서는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쪽 온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룬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총리님께서도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폭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과학기술계는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6월 기준으로 전문 및 과학업 분야의 비자발적 실직자는 3만 850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이전인 2023년 대비 30.4%나 급증한 숫자입니다. 청년 연구자들은 예산 삭감으로 원치 않는데도 연구를 이어 가기 위해서 조국을 떠나서 해외로 가야만 했습니다.

과학기술 강국의 주춧돌인 기초연구는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생애기본연구 과제는 폐지되었고 과제 수는 올해 1만 1829건으로 3년 전 대비 23.1%나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집행 건수는 3년 전인 2021년도보다 42.9%나 급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예산 삭감이 고작 윤석열의 ‘카르텔’이라는 말 한마디에 자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엄군이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 쳐들어왔을 당시 충격과 분노, 윤석열의 그 폭거를 과학기술계는 1년이나 먼저 더 빠르게 경험을 한 꼴입니다.

내란을 저지르기 전에 계엄에 대한 예행연습이라도 한 것인가라는 분노가 아직도 과학기술계에 파다하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총리님, 윤석열의 R&D 예산 삭감이 겉으로는 카르텔 타파, 비효율성 개선이라고 내걸었는데 정작 그렇게 말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가 공인했던 국가 우수연구 사례들마저 예산 삭감의 칼질을 피하지 못했고 과학기술계는 말 그대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여기 사진 한번 보시지요.

매우 유명해진 사진입니다. 지난해 2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산실인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카이스트 졸업생이 R&D 예산을 복구하라고 외치자 입이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서 강제로 끌려 나간 현장입니다.

그런데 R&D 예산 폭거, 누구나 다 지금은 잘못이라고 인정합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하는데 과학기술계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그 어떠한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예결위에서 반드시 과학기술계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카이스트 졸업생들이 그날 느꼈던 그 분노와 절망감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 누구도 진정성 있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할 수만 있다면 저라도 사과를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 상황을 지금 다시 사진을 보니까 그때 당시의 일들이 생각나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그때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카이스트 학생들 그리고 과학계 연구자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회복이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정아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R&D 예산만큼 진짜 성장을 위한 강력한 투자가 없습니다. R&D 예산이 기술을 만들고 투자를 이끌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키우고, 나아가 국가의 생존까지 결정짓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강화되고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작금의 시대에 R&D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겠습니까? 생존까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의 지난해 R&D 예산 폭거로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교육부 등 주요 9개 부처에서 3만 172개의 계속과제 중에 무려 2만 2563개의 연구과제, 즉 전체의 75%에 달하는 과제가 예산 삭감을 당했습니다. 이 중 과기부가 담당하고 있는 기초연구 과제만 9633건입니다.

중국이 첨단기술 굴기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이 글로벌 기술의 선두주자를 유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화웨이도 R&D 투자의 3분의 1을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기초과학 연구 분야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특히 린 CEO는 ‘기초연구가 없는 건 뿌리가 없는 것과 같다. 잎이 무성하고 번성해도 바람 한 번에 쓰러질 수 있다’라고 했고 기초과학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거꾸로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래를 망쳐 버린 정말 참담한 결과인데, 이쯤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경훈 장관님도

아마 답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윤석열 정권이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의 역사를 뉴라이트 역사로 바꾸려고 한 것은 물론이고 현재의 삶을 무너뜨린 데 이어서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철저히 망가뜨린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R&D 투자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일 때 굉장히 신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배경훈 장관님, 입장 말씀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과학기술계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지금 단순히 복원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서 복원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맞습니다. 윤석열의 망상 수준의 비합리성에 근거한 폭거에 R&D 예산을 심의하는 공직자들이 끝까지 저항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R&D 예산에 책임 있는 부처들의 책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들은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께 충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1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천금 같은 시간인데 매일매일이 향후 10년, 20년, 30년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함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과학기술계에게 1년의 역행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과는 윤석열 정권과의 완전한 결별 그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와 과기부의 대표자로서 사과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과기계에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 이재명 정부는 R&D 예산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국가 성장동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대 가장 R&D 예산을 늘림으로 인해서 과기계가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서 진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황정아 위원 맞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님, 앞서 총리님께서 말씀드렸다고 R&D 예산은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동의합니다.

○황정아 위원 국민주권정부의 진짜 성장은 전 정권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기초체력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렸는데 0%대의 경제성장률 코로나19 대유행기를 제외하면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 아닙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황정아 위원 그런데도 윤석열이 국정 기초를 전혀 변화시킬 생각이 없이 계엄이라는 경제 핵폭탄을 터뜨려서 대한민국을 수렁에 빠뜨렸습니다. 그렇기에 윤석열 정권에 중지부를 찍으시고 국민주권정부를 국민께서 선택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잘못된 국정으로 완전히 잘못된 길에 접어들 뻔한 대한민국의 경로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여러 방안들이 존재하겠지만 그중에서도 AI 그리고 첨단기술을 뒷받침할 R&D 예산이 경제 회복과 선도 국가 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지킬 초혁신 방법의 알파이자 오메가일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동의합니다.

○**황정아 위원** 위기의 시대에 종자를 뿌리지 말고 가만히 손 놓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이번 국민주권정부의 첫 R&D 예산이 35.3조, 올해 대비 19.3%나 늘어난 그러니까 5.7조 원 늘어난 규모,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그 말장난식으로 만들었던 윤석열식 역대 최고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사활을 건다는 의지로 R&D에 예산 투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실천을 했습니다.

○**황정아 위원** R&D 예산이 가장 강력한 투자라는 국정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국민께 표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배경훈 장관님, 이번 R&D 예산이 AI 첨단기술, 인재 확보, 기초연구까지 윤석열이 무너뜨린 모든 걸 복원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번 R&D 예산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께 주권정부의 첫 R&D 예산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번 R&D 예산은 위축되고 피폐해진 연구 현장의 회복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R&D 투자 시스템을 통해서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감한 R&D 투자를 통해서 미래의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맞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AI 대전환의 시대가 다가왔지만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은 첫째도 인재, 둘째도 인재입니다. 사람 없이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인재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력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이 한정적이라고는 고민을 좀 해 볼 수는 있는데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 출연연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30여 년간 대한민국 연구자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억압해 왔던 PBS 제도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대통령께서 공식화하셨습니다. 정말 그 어떤 정권에서도 하지 못했던 특단의 대책입니다. 하지만 정작 출연연들의 인건비는 공무원 처우 개선율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님, 출연연들의 경우에 민간 대비 보수 수준이 현저히 낮은 점이 인재를 확보하는 데 가장 큰 애로 사항이다라고 듣고 있는데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PBS 제도를 폐지하고 그렇게 해서 수탁사업의 인건비 전환 등으로 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좀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연구 성과가 높은 연구자에 대해서는 사업비에서라도 인건비로 좀

둘러서 쓸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전체적인 재원 상황을 보면서 하여튼 최대한 이분들의 사기 양양을 위한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적인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기술이 기업으로 산업으로 연결되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그 과실을 연구자들이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의 선두 주자였던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까지 모두 벤처·스타트업에서 출발했습니다. AI 스포트니크 모먼트라고 생각하고 있는 딥시크도 벤처·스타트업이지 않습니까? 벤처·스타트업 딥테크 기업의 창업을 독려하고 세제 혜택,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성장을 견인한다면 그리고 인재를 확보하고 경제도 견인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벤처·스타트업들이 제대로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 모태펀드 또는 국민성장펀드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벤처·스타트업에서도 아주 엄청난 글로벌 대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한성숙 중기부장관님, 현장 기업인 출신 장관님으로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부총리님 말씀하신 거에 적극 동의합니다. 와서 중소기업들 R&D 예산이, 중간에 사업이 중단된 걸 보고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기업의 1년이라는 것이 멈추면 바로 다음에 이어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손해가 몇 년 일어날지 모르고 그만둔 직원을 다시 불러 모으는 일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생존이 무너진 상태가 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맞습니다. 단순히 모태펀드뿐만이 아니라 R&D 예산 투자도 기업과 산업의 인재 확보와 성장에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해서 오히려 예산이 뿌려 주기 식이라면서 일괄 삭감을 했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연구자들의 역량과 기술이 벤처·스타트업으로, 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중기부도 깊은 고민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말씀하신 데 적극 동의하고요.

지금 중기부는 민간하고 연계한 투자 방식하고 그다음에 또 출연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 부분들을 어떻게 사업화할 것인가에 대한 R&D 연구 그리고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만든 R&D가 바로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화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가장 시급한 과학기술 현안도 존재하는데 여야 구분 없이 대선 공약으로 공히 약속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바로 R&D 예타 폐지입니다.

8월 18일 개최되었던 국무회의에서 국가정책적 추진사업으로 7개의 R&D 사업의 예타가 면제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개발 경쟁이 격화된 위기 속에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신속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었고 연구개발 투자

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는 국가적 위기감과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님, 국회 과방위에서는 지난달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여야 공통 공약이었던 R&D 예타 폐지법의 초석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가재정법이 통과되지 못해서 예타 폐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R&D 예타 폐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의 부실화 등을 예방할 방안들도 이미 그 법안 안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격적인 속도전을 위해서 정기국회 내에 R&D 예타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동의합니다. 그래서 예타 폐지 전이더라도 정책 목적으로 해서 R&D가 속도감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재정법이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해서 과학기술기본법하고 같은 속도를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으로 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황정아 위원** R&D 예산이 중요한 것이 국가 R&D 예산, 특히 벤처·스타트업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데 2020년부터 24년, 5개년 누적 국가 R&D 연구비 지원 톱 기업들을 보시면 국가 R&D 연구비와 투자액이 분명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덱엑스 국가 R&D 연구비 지원이 402.4억 원·투자 유치액 1361억 원, 오토노머스에이투지 R&D 연구비는 245.3억 원인데 투자 유치액이 521억 그리고 리벨리온 R&D의 경우에 225.4억 원인데 투자 유치액 800억 그리고 메타가 1.2조 원으로 균침을 흘렸었던 퓨리오사에이아이는 R&D 연구비 128.1억 원 받았는데 국가 투자 유치액 3310억 원에 달합니다.

톱3 기업들의 투자 유치액이 국가 R&D 연구비의 최소 2배 그리고 퓨리오사에이아이 같은 경우에는 수십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가 R&D 예산이 단순히 기술발전을 견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산업적인 투자까지 이끌어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연구자들의 역량과 벤처·스타트업들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의 근본이자 산업의 기초체력인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해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인데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80년간 자동차, ICT, 반도체, 휴대전화 등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키울 수 있었던 근간에 과학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승리자는 모든 것의 승리자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1935년 과학데이 포스터입니다, 일제시대의. ‘한 개의 시험관은 전 세계를 뒤집는다’, 그 엄혹한 시절에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과학기술로 민족을 진흥시키고 국민들에게 과학을 보급하기 위해 했던 운동인 과학데이, 현재 과학의 날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데이의 포스터 문구입니다. 일제강점기에서마저 대한민국에게는 과학기술 DNA가 있었습니다. 백척간두 위기의 시대에도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렸다는 것이고요.

R&D 예산 투자부터 현장 연구자 중심 R&D 시스템 개혁까지 국민주권정부의 과학기

술 정책은 진짜라는 점을 국민들께 보여 드리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님께 진짜 성장과 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의지를 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다시 한번 과학기술에 집중하고, 특히 AI 대전환으로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황정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삭감된 과제가 75%고 또 기초연구 과제 9633건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확인하니깐 한 켠 마음도 아프고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까 과기부장관께서 복원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구자들의 사기를 다시 살리고 시급히 복원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는 좀 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원은 석유나 가스 등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후 질의를 마치고 만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오후 8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회의중지)

(2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존경하는 김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 총리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국무위원들께서도 하루 종일 수고 많습니다.

국민의힘 김위상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철도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김민석 총리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해 국내 철도기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지난해 국내 철도기관이요?

○김위상 위원 예.

○국무총리 김민석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위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철도 운영사 8곳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총 255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산재 사망자 현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한국철도공사가 세 사람 유명을 달리했고 서울교통공사가 네 사람, 그래서 총 7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보면 건설업계 대형 건설사의 한 해 사망자 수를 웃도는 그런 사망자 수치입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철도 업무가 낙석과 추락 위험이 도사리는 건설현장보다 더 위험한

일은 아니겠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지금도 그렇다라는 것이 사실은 수치로 보면 놀랍습니다.

○김위상 위원 점검하는 일이 이렇게 매년 사람이 죽어 나가고 크게 다쳐야 하는 일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총리께서 파악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이번 사고도 사실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사고여서 현재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고용부 그리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는 나온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내 철도 안전관리체계에 아주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총리님,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라고 이야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말씀 들었습니다.

○김위상 위원 이것은 공공기관 산업안전보건체계의 평가 시스템이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김위상 위원 코레일을 보면 2020년 B등급에서 2021년부터 C등급으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4년 연속 C등급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청도 열차사고, 선로 인접공사에 대한 부실관리 지적도 사전에 있었습니다. 코레일 자체 위험성 평가에서 상시 운행하는 열차의 선로 인접공사 충돌사고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코레일의 철도 안전관리체계가 실효성 없이 형식적이었다.

총리님,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다고 보입니다.

○김위상 위원 그리고 코레일은 21년도부터 1년에 세 사람씩 사망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한 5년 동안 한 15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올해 청도 사망자까지 합치면 17명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안 되겠지요. 코레일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인 데다가 저희가 최근에 산재를 포함한 전체적으로 불의의 사망을 줄여야 되겠다라는 것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철도계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정말 국민들이 믿기 힘든 그런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위상 위원 총리님의 답변 잘 보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위상 위원 주무관청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들어 보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잘 유념해서 안전체계를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동시에 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2021년 코레일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어찌다 이렇게 망가진 것인지 그리고 좀처럼 왜 회복되지 않는 것인지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서 본 의원실로 좀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가 산업안전과 직결된 대형사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지방 공기업이라고 해서 평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기업, 서울교통공사하고 코레일이 한 해 산재사고에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 노동부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서울교통공사가 평가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국감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재 예방·근절 시스템에서 드러난 맹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재와 처벌만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으로 산재사고가 몇 건이 났는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산재 사망사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위상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올 6월까지 저희들이……

○김위상 위원 700명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721명.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721명 보고했습니다.

○김위상 위원 그리고 이거는 특정 기업들의 일탈이 아니라 전반적인 산재예방시스템에 큰 구멍이 있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가 최종적인 관리감독자로서 과연 역할을 충분히 하였는지 그리고 책임은 없는지 정말 꼼꼼하게 따져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총리님, 산재 예방의 한 축에는 현장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체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안전보건체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위상 위원 예,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김위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현행 우리나라의 안전보건교육체계는 여전히 행정편의주의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국내 건설업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을 보면 실습교육과 그다음에 훈련을 겸해서 하는 부분이 6.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은 5.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또 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습교육하고 훈련 비율이 훨씬 낮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총리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산재사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말씀 주신 대로 산재를 줄이는 것이 사실은 제재와 처벌만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제도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최근 더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 세미나와 체험교육 위주의 안전보건교육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살펴서 우리나라에 좀 접목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그리고 이런 점들을 비추어 볼 때 급한 건 막연한 기업 때리기가 아니고 현장에서 요식행위로 전락한 안전교육의 패러다임을 제대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말씀하셨지요, ‘산업안전관리 비용을 아끼지 마라’. 총리님,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대통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위상 위원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비용을 아끼지 말라고 하신 만큼 지금이야말로 비용의 관점이 아닌 안전교육의 내실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을 총리님과 또 노동부장관께서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예산 좀 아끼지 마시고 산업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좀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그리고 산업안전관리 시스템에서 이 부분만 아니고 또 노동부에서 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특히 작업중지권입니다. 작업중지권은 지금 대형 건설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적용하니깐 산업재해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 대형 건설사는 작년에 산업재해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노동부장관,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모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고도 받았습니다.

○김위상 위원 철저히 접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김위상 위원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작업중지권에 대해서 시스템을 좀 잘 정비해 가지고 영세 사업장 등을 위한 합리적 매뉴얼을 만들 필요성이 좀 있다. 분명히 인정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얼마 전 환노위에서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분명히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좋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산업현장에 좀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총리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님도 분명히 총리님 이야기를 잘 들었고 또 몇 번 짚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충분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토교통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위상 위원 혹시 노란봉투법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기업체에도 적용이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김위상 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좀 대답하يس소, 시간 가는데. 그러면 직접 관계되는 장관님한테 제가 말씀을 물어볼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위상 위원 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김위상 위원 어떻게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현재로는 하청 노조가 결성되었을 때 교섭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위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 가지고 노사 간의 어떠한 자율성을 좀 훼손시키는 그런 행위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번에 노란봉투법도 분명히 그런 현실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한 예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수사업법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 법제화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위상 위원 어디에 어느 산업에 적용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구체적으로는……

○김위상 위원 장관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택시 산업에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택시 산업이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황폐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도 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8만여 명의 택시노동자들이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서 노사가 질곡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택시노동자들은 도로교통법에 적용받고 운수사업법에 적용받고 택발법에 적용받고,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너무나, 노사 간의 자율성을 침해해도 이렇게 침해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 30년 동안 아무런 관리·감독도 하지 않으면서 전부 손 놓고 있으면서 이렇게 택시 산업이 황폐화되도록 눈으로 보고만 있었습니까?

전액관리 법제화가 몇 년도에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이 만들어졌고 3년 유예 끝에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군데도 똑바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택발법 아십니까? 택시발전을 위한 법 그것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위상 위원 2018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과도한 어떠한 규제로 인해 가지고 택시 산업 자체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택시 정책이 지금 있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전부 다 무너지도록 만들어 놓고 노사 간의 자율성을 전부 침해하고,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만 명의 택시노동자들도 보호받아야 되고, 공익성이 강하고 사회에 기여도가 굉장히 강한 것이 택시노동자들입니다. 그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 법제화에 말이 묶여 있고 택발법에 말이 묶여 있고 그래서 택시 산업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고 노사 모두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런 현실에 국토부장관님께서 그걸 모르고 계신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2300만 임금노동자는 존중받아야 되고 노동 존중을 받아야 되고 모두가 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공익성이 강한 택시업계에 정부가 해 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규제만 만들어 놓고 노사 간에 발목만 잡고 있고 택시요금 묶어 놓고 있고. 택시요금이 생산성인데 생산성을 위주로 해서 교섭을 해야 되는데 교섭조차도 못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정부 아닙니까? 정부가 과도한 개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을 폐지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현재 작년부터 택시업계하고……

○김위상 위원 작년부터 이 부분의 TF를 만들어 가지고 해 봤자 전부 다 탁상행정이고. 저는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택시 운전을 30년 넘게 해 봤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쳐 보고 제가 느낀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보편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줘야 되지 모든 것을 규제로 묶어 놓고 노사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입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시고 전액관리 법제화, 아무런 실익도 없는 그런 법들을 국토교통부가 붙잡고 있지 말고…… 그리고 택발법이라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노사가 자율로 단체교섭을 하고 또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부 다 불법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택시노동자들 임금은 150만 원도 안 돼요. 하루에 14시간 근무합니다. 일주일에 78시간, 80시간 근무합니다. 한 평도 안 되는 택시 공간에서 그렇게 앉아 보셨습니까?

이런 문제를 먼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어떻게 300만 조직체계로 묶어진 그런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이렇게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밀고 나가고 정부가 거기에 발맞추어 그렇게 나간단 말입니까? 노란봉투법도 그렇게 되지 싶어서 제가 예를 제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800만 노동자들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1800만 노동자들은 생활고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사회 곳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보살펴야 될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위원님께서 지금 쪽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노란봉투법과의 연관성을 정확하게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택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공부를 하고 대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위상 위원** 아니, 역대 정부에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렇게 해 왔다 하면 이걸 말도 안 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 업계를 전부 말살시키는 행위밖에 더 되느냐. 이 부분에서 실효성도 없는 법을 붙들고 앉아 있고 그렇게 아우성을 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는 정부가 아니다, 지금까지. 그렇다라면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는 어떤 노동조합에 대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특혜를 가져다 주었다라면 이렇게 어렵게 살고 사회 곳곳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는 우리 정부가 뭘 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회가 뭘 해 줘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먼저 해소시켜야 똑바른 노사관계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 사회도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갈 수가 있다. 지금은 정상적인 사회가 될 수가 없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격차가 심한 것을 더 만들어 내는 게 지금 정부의 현실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외치지만 마시고 이런 문제를 해소할 때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해소가 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31일에 되겠다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까?

○**위원장 한병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위원님 말씀.....

○**위원장 한병도** 이게 20분이기 때문이에요 할 얘기가 많으시더라도.....

○**김위상 위원** 보충질의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병도** 안 됩니다.

(「벌써 1분 지났어요」 하는 위원 있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질의시간을 20분을 드린 이유예요.....

○**김위상 위원** 좀 가만있어 봐요. 내가 질의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시간 지났다고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병도** 제가 사회를 진행하면서요 20분을 드린 이유가 다음 추가질의시간이 있으시니까요 부족하신 건 질의해 주시고.....

○**김위상 위원**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노사정이 만나서 또 국회가 만나서 정말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TF를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무리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답변 안 하십니까?

○**위원장 한병도** 아니, 마치시고요. 일단 답변하고 그다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김위상 위원** 그리고 특히 총리님한테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노동자들 너무나 많다. 노란봉투법이 이렇게 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통해서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마무리하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님, 답변 부족한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위원님의 고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씀 올리고요.

다만 현재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해서 24년, 작년부터 해서 열네 번에 걸쳐서 노사와 또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까지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국회에 보고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택시 산업의 발전 방안을 제대로 만들어서 올 9월에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상 위원** 지금 보니까 핵심을 모르고 TF를 운영하니까……

.....

○**위원장 한병도**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 상당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위원** 저는 20분 동안 총리님하고만 상대할 거니까 다른 분들은 좀 편히 경청해 주십시오.

청주시상당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위원입니다.

총리님, 지난달이지요 7월 이재명 정부는 출범한 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극한 호우 상황에서 비교적 잘 대처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현장을 찾아 직접 보시고 그리고 직접 보고받으시면서 적절히 대책을 전개했고요.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이례적으로 매우 신속했습니다.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으로 말씀하신 국가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메시지를 남기셨고요.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비교해서 우리는 윤 정부 당시의 참담한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23년 오송 참사, 국가와 지방정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잠시 당시의 상황을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청주에는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474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참사 전날이 되겠습니다. 14일 17시 20분에는 미호천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당일인 15일 04시 10분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15일 06시 34분에 이르러서는 미호강이 계획홍수위 9.3m에 도달했기 때문에 금강홍수통제소가 교통통제 및 주민대피 필요성을 통보했습니다. 그렇지만 재난안전체계는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당일 07시 56분, 임

시제방이 붕괴됐고요. 30분 만에 미호강 물이 궁평2지하차도에 유입되면서 08시 35분에 통행 불가 상태가 된 겁니다.

자료 보시면, 병천천·수석천이 미호강으로 바로 합류하는 합수부 바로 위에 사고지점이 있습니다. 배수장과 하수처리장, 여러 도로와 철교 및 공사용 가교도 다 줄지어 서 있는 것이 눈으로 확연히 보이실 겁니다. 유사시 얼마나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무능한 컨트롤타워, 안전불감증, 늑장대응 그리고 책임 떠넘기기, 허위보고, 그야말로 없어도 돼야 할 그런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총리님, 오송 참사 진상규명 이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국가적인 참사 유가족 행사를 개최하셨을 때도 유가족 공동대표가 오송에 대한 더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 기초해서 민관 합동 재난조사반을 운영해서 더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제가 지역구가 충북이다 보니까 저희 충북의 지역 살림을 책임져야 될 김영환 도지사의 그 당시의 행적, 정말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참사 하루 전, 충청북도는 비상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김 지사는 부동산개발업체 대표와 서울 출장을 위해서 당시 도청을 비운 상태였었습니다. 참사 당일 09시 44분에 청주 자택에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소식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김 지사는 피산담의 월류가 걱정된다면서 가까운 오송이 아니라 먼 피산으로 향했습니다. 왜 피산이었을까요? 피산은 김영환 지사의 본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일가들의 땅이 있는 곳입니다. 월류되는 지역 급경사지가 바로 그분들 일가의 땅 건너편입니다.

기껏 그리고 청주에 돌아오고도 참사 현장보다 간부들과 점심 식사를 먼저 했습니다. 참사 현장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119 사고접수 4시간 35분이 지나서야 오송 참사 현장에 도착해 놓고 ‘내가 거기에 갔었더라도 상황이 바뀔 것은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지역재난안전 최고책임자의 말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피산은 갔으면 상황이 바뀔까? 피산은 가면 상황이 바뀌고 오송은 가면 상황이 안 바뀐다는 이런 말이 얼마나 해괴망측한 궤변입니까? 김영환 지사가 충청북도 지하차도 교통통제 기준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참사인 겁니다.

이와 관련된 이전 윤석열 정부의 수사나 진상조사, 제가 보기엔 모두 엉망입니다. 국무조정실의 감찰도, 검찰의 수사도 김 지사는 다 비껴가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95명이 감찰을 받았고요 36명이 수사 의뢰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고려가 다분히 의심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려 열네 분이 돌아가셨고요, 열여섯 분이 다쳤습니다. 사상자가 서른 분이냐 나온 겁니다. 이런 참사에 민간인 시공사 현장소장·감리단장—두 분 다 민간인입니다—이 두 사람만 징역형이 확정됐고요. 충청북도는 기껏 행정부지사 수준에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러니 유가족들, 희생자들, 생존자분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상응하는 처벌이 없으니까 김 지사 본인이 선포한 오송참사 2주기, 지지난달입니다, 추모 기간에도 같은 당 지방의원들과 술 먹다가 언론에 노출되는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총리님, 오송참사는 우리에게 정말 엄중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이러한 참사는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무책임한 재난 대응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총리님,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동의합니다.

진상조사에 기초한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일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또 부탁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참사 희생자 유가족, 생존자분들이 여전히 그 당시 2023년 7월 15일에 살고 계십니다. 피해자분들을 위한 치유와 보상이 너무 늦고 또 너무 요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유가족과 생존자분들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진행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수면 문제를 겪고 있다 47%, 불안과 우울 증상을 겪고 있다 50%·57%, 우리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라고 얘기하는 PTSD 63%가 넘습니다.

지원 매뉴얼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애써 병원을 찾아가도 화학적 처방인 약만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치료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과 기소는 기대에 못 미치고 전문적인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과연 이분들이 언제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총리님,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분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상황 파악과 또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오는 27일 드디어 국회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그리고 그 원인을 조사하고 성역 없는 책임자의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유가족 및 생존자분들의 치유와 보상을 위해 저희 국회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지자체와 행안부 그리고 환경부와 국토부, 이러한 다양한 부처와 기관이 다 함께 조금씩 걸려 있는 사안입니다. 총리께서도 국회의 국정조사와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오송참사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 주실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잘 진행해 주시고 그에 기초해서 또 그와 별도로 저희들이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AI 글로벌 3강 도약이라는 국가 비전과 모두의 AI라는 포용 비전이 정말 매우 시의적절하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전개되는 이러한 타이밍을 잘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AI 대전환을 통해서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그러한 시각으로 보입니다. 22일 발표되었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도 기술혁신을 동력으로 하되 국민 삶의 질과 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고 있더군요. 제대로 일을 하려면 원팀 체제 구축해야 하거든요. 총리실이 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이게 총리실에서 검토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AI와 관련된 것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큰 계획을 짜는 것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같이했고요. 이런 AI를 포함한 국가전략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중심으로 진행을 해 갈 것입니다.

○**이강일 위원** 대통령실에서 할 건가요? 더 큰 힘을 받겠군요, 그러면.

세계경제포럼, WEF입니다. 여기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노동자의 정확히는 59%, 60% 정도가 재교육이나 업스킬링(upskilling)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우리가 속칭 IMF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보고서를 냈는데 한국 일자리의 절반이 AI에 노출이 돼 있다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도 재교육과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환을 국가전략으로 천명을 했는데요 국내에서 필요한 재교육 규모의 정량적 목표가 혹시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우선 아까 제가 대통령실에서 주도적으로 해 갈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AI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어떤 범부처 컨트롤타워로서 국가AI전략위원회라는 위원회의 주도성에 기초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원장이 대통령이 된다는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육과 관련한 것은 구체적인 시기와 또는 지표 이런 것까지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들이 AI를 포함해서 평생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을 모든 부처에서 경청해서 대통령실과 잘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현장의 불안감이 좀 큼니다. 전기차 확산으로 내연기관 정비 수요가 확 줄었지요. 무인 자율주행 도입은 버스·택시 고용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정부도 8월 22일 브리핑에서 이러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교육, 재훈련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용 전환의 선순환 구조, 이것을 클로즈드 루프(closed loop)라고 얘기하더군요. 이게 작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감소가 예측이 되면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연결하고 사후 성과 추적을 하고 정책 보완하는 이런 순환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요.

국무총리님, 정비업·운수업 일자리 전환을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클로즈드 루프 모델로 표준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좀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적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부족하지만 저도 갖고 있는 안이 있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재교육 또는 전환을 위한 바우처나 자격 전환 패키지 같은 이런 지원책이 포함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는 AI 성과의 국민 공유도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반도체·AI·신재생에너지 등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국민이 함께 투자하고 그 성과를 투자수익 형태로 국민들과 공유하고 환원하는 이런 제

도입입니다. AI 안전망은 인공지능 확산으로 생기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는 새로운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데이터 배당제는 국민이 생산한 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해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또 국민한테 돌려주는 이런 환원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봅니다.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의 가치를 산정하고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설계를 연내에 꼭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회와 동시에 이런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저희 국회도, 미력하나마 저도 함께 정부를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아까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와 제안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언급하신 성장펀드나 데이터 배당제 등등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다뤄나가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알겠습니다.

약간 정치적인 부분을 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리님, 최근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를 둘러싼 매관매직 의혹 파장이 상당히 큼니다, 사회에서. 역대의 명품을 수수한 직후에 고위직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증언과 보도가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전달하자 대통령실 홍보 업무 자리를 제안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김건희 씨와 대통령실 참모들과의 통화 기록에는 인사와 정책 개입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씨가 그림자 권력으로 국정을 쥐고 흔들었다는 의혹, 더 이상 의혹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보고 받으셨을 테고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저희가 총리실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따로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특검과 관련한 수사가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민감한 답변이라 좀 예들려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서희건설 사위인 공안검사를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고위공직자 경력을 만들어 주고 국회의원 자리까지 주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회의원에 도전을 했다가 실패한 것이지요.

총리비서실장은 총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최측근인데 당시 한덕수 전 총리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총리님 판단은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본 바만 말씀을 드리면 총리비서실장을 임용할 때 자기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선택하기도 어렵고 어떠한 사람을 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일 위원** 그 표현은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커넥션상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리님 입으로 말씀하시기 곤란해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 입으로 결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도덕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헌정질서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번이 첫 탄핵을 가결시키고 완성시킨 사건이 아닙니다. 그전에 왜, 그전 대통령은 왜 탄핵이 되었지요? 김현철 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보듯이 사적 인사 개입은 국가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독약과 같습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민생을 외면한 채 권력을 이용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사적인 이익의 추구에만 몰두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21세기판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말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대선 캠프 초기에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인사권과 공천권을 5 대 5로 나누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드러난 의혹은 병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 보다 더 집중해서 더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님,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동의합니다.

○이강일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사실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상당히 빠른 시점에 잠깐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십수 년 된 것 같고요. 당시에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부분을 저는 너무나 혁신적인 아이템으로 봐서 스스로 독학을 해서 공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금융 네트워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이강일 위원 미국은 지니어스법을 논의 중에 있고요,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시장에 진출을 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가 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당연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 수밖에 없는 길이 된 것이 아니냐.

총리님, 갈 수밖에 없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개인적인 입장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런 측면이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가야 할 길이라면 주저 없이 주체적으로 가자, 먼저 가서 선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K-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글로벌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독자적인 메인넷 도입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른,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메인넷에서 스테이블코인이나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결제 인프라,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해서 핵심 국가기반시설로 코리아 블록체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명 ‘코블로’를 제안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생소한 단어이지만 코블로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경하시겠지만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제가 잘은 모르지만 외부넷, 자체넷 이런 두 가지 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중에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자체넷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이강일 위원 제대로 이해하셨고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가 돼서 그 차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종합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알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제가 또 생각하고 그동안 연구했던 부분들을 같이 숙의하고 상의해서 국가의 이익이 되는 데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북 경산의 존경하는 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연 위원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결산 질의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 그 전에, 제가 좀 망설였는데 총리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께서는 언제 국회에 입성하셨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처음 국회의원……

○조지연 위원 예.

○국무총리 김민석 1996년입니다.

○조지연 위원 15대 때 아마 서른두 살의 나이로 국회에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서 한 20대 때는 낙선을 한 번 하시고 그리고 15대 때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서른세 살에 낙선을 하고 서른일곱 살에 작년에 국회에 들어왔는데, 더 나은 세상 만들겠다고 어릴 적부터 꿈을 꿔 와서 이렇게 있습니다만 막상 제가 처음에 정치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말리셨어요. 특히 저희 부모님은 정말 더 극성으로 말리셨고. 당연하지요. 너무나 평범한 집안에서 커 가지고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는 죄송하지만 ‘그 젊은 나이에 왜 도둑놈 소굴에 들어가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도 사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정치가 가장 유효한데 ‘제가 들어가서 바꾸면 되지요’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만 참 여야의 극한 대처로 인해서 사실 부끄럽기 그지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면목 없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가 끊임없이 개혁하고 바뀌어야 된 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정치 불신의 근원은 저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우리 정치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질문을 주셨으니깐 말씀드리자면 조금 정치를 일찍 시작하면서 생각하는, 바꾸는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데 있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비교적 쉬운 일들을 해 나가면서도 조금조금씩 바뀌 갈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저도 공감합니다.

총리께서 15대 때 초선으로 나오셨을 때 혹시 총선 때 1호 공약, 총리님의 1호 공약 기억나십니까? 혹시 공약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죄송한데요, 1996년 당시는 정권 교체가 가장 중요한 때였기 때문에 지역 발전 공약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정권 교체, 이것이 유일한 공약이었던 때였습니다.

○**조지연 위원** 제가 사실 총리께서 15대 때 출마하셨을 때 포스터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포스터를 들어 보이며)

‘미스터 싱싱 김민석’, 저는 사실 이 미스터 싱싱보다 더 눈에 와닿았던 것은 ‘국회의원 바로 세우기’ 그리고 ‘국회의원이 바로 서야 역사가 바로 선다’, 저는 이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아마 총리께서 그때 당시에 정치개혁을 부르짖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 포스터의 어떤 메시지는?

○**국무총리 김민석** 큰 틀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저도 총선 때 1호 공약한 게 있습니다. 총리님, 제가 1호 공약을 뭘 했냐면요 이 국회의원 바로 세우기와 같은 취지인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제가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회의원도 일 안 하면 돈 받지 말자,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을 이렇게 자신 있게 내세웠는데 제가 막상 국회에 와 보니까 또 그때만 해도 소수당이었고—민주당에 비해서—그때 여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수당인 한계로 매번 피켓 시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일인 건지, 피켓 시위하는 게 정당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인 건지, 세비를 자신 있게 받아도 되는지 이게 참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제가 이게 어디가 무노동이고 어떤 게 노동인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서서, 그렇지만 국민께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일정 부분은 세비를, 아직 공개적 석상에서 처음 말씀드립니다만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나마 그래도 제가 약속드린 것에 대한 어떤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사실 총리님 면전 앞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민망합니다만 편법적 불법정치자금의 통로가 되는 출판기념회도 근절해야 된다고 제가 사실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문제로 총리님을 지금 와서 어설픈 공격하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제도개선은 꼭 해야 된다는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몇 달 전에 이 법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누구나 책을 출간할 수 있고 자신의 비전을 알리기 위해서 출판기념회도 열 수 있지만 정말 출처 모를 돈봉투가 오고 가는 거는 하지 말자라는 취지고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책은 온라인 서점에서 아니

면 오프라인 서점에서 사자는 취지로 제가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정치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자금 조성의 투명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안은 이미 발의가 됐지만 정치개혁에 대다수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선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고 개혁신당도 두 분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 동의해 주신 의원님들 중에서는 총리님과 같이 출판기념회를 이미 열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정말 이렇게 정치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국회에서, 22대 국회에서만은 이 출판기념회 근절하는 거를 제도개선을 이뤄야 된다는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사실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총리께서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정말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통로가 되는 이 출판기념회의 근절을 죄송하지만 약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결위 질의에 맞는 질의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겠습니다.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저는 정치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어렵게 마음을 내서 제게 개인적인 질문을 주셨다고 하고 또 귀한 질의시간을 써서 그렇게 질문을 주셨으니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게 출판기념회 관련한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저는 경험상 또는 제 생각에 비추어서 정치개혁이 가령 자전거만 타고 다니자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가 별로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칙적으로 생각할 때 출판기념회라는 행사 자체가 그렇게 근본적으로 잘못된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그것을 얼마든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개선 방법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접근하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구체적인 법안을 어떻게 내시는가 하는 것은 위원님의 판단의 몫이기 때문에……

○**조지연 위원** 법안은 이미 발의가 됐습니다. 총리님, 출판기념회를 아예 하지 말자는, 원천봉쇄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오고 가는 어떤 이름 모를 봉투를 전달하는 그런 것을 없애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법안을 구체적으로 보고 제가 긍정할 수 있고 좋은 내용이면 긍정적인 의사 표시를 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주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지요? 표방을 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조지연 위원** 국민주권정부는 어떤 정부입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글썄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런 차원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지향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역사성으로 비춰 볼 때 빛의 혁명에 기초해서 출발을 해서 그리고 그 빛의 혁명에 기초해서 대통령까지 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철학이 ‘결국 모든 것은 국민이 한다’라는 관점에 기초해서 최근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처럼 가급적 모든 사안들을 국민에게 열어 놓고 토론 하려는……

○**조지연 위원** 총리님, 제가 시간이 넉넉지는 않아서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러한 방법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정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아까 전에 답변 중에 보니까 대화나 소통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 가는 거다라고도 말씀하신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조지연 위원** 아마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통을 하고 계실 텐데 의견 개진을 충분히 하시는 겁니까, 총리님의 의견 개진을?

○**국무총리 김민석** 예, 서로 여러 주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최근에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들이 오고 갔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국무총리 김민석** 아무래도 최근에 제일 큰 이슈는 관세협상 아니겠습니까? 관세협상을 포함해서 기타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러면 혹시 노조법 관련해서는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노조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진행 상황을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하는 것 외에 그 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의 이미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이야기를 최근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런데 이제 경제계에서는 총리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노조법 관련해서 많은 우려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만 해도 통과 직후에 경제계가 노조법상 사용자가 누군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불분명하다라고 이렇게 또 지적을 했었습니다.

혹시 이게 부처 간에, 물론 고용노동부 소관이긴 합니다만 부처 간에 어떤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김민석** 그것은 부처 간에 이 문제를 놓고 따로 논의를 해야 할 정도를 넘어서서 포괄적인 범정부적 공감대 위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이게 저는 노조법의 어떤 찬반을 떠나 가지고요, 그러니까 원청이 하청 업체 노조와 교섭해야 된다는 점, 경제계가 그렇게 우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라든지 구조조정이든지 사업경영상의 이런 결정마저도 쟁의행위의 대상이 된다는 건지 이 법의 부작용을 우려해서 1년 이상의 시행 유예만이라도 해 달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혹시 이 법이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큰 틀에서 우리 노사문화를 포함한 산업계에 결국은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아마 산업부장관님께서서는 지금 순방 가셨을 것 같고, 산업부차관님 계시

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조지연 위원** 산업계가 일시적으로 붕괴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입될 경우에 국내총생산에서 약 10조 원, 외국인의 한국 투자는 연간 1.5% 손실이 있을 거다, 약 4000억 정도 손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 추정치도 있습니다. 혹시 산업계의 우려는 잘 알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산업계뿐만이 아니라 여러 계의 의견을 같이 수렴하고 알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이 제도가 도입이 돼서 정착을 하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으나 총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정착해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노사 안정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중기부장관님도 계시지요? 아마 하청업체도 사실은, 저도 지역의 업체 다녀 보니까 굉장히 중소기업들도 많은 애로사항들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의견수렴 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도 당장의 걱정과 우려가 있기는 하겠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일하는 분들의 권리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마련돼야 되고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공감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지연 위원** 고용부장관께서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얼마나 소통을 해 왔습니까, 경제계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제가 장관 임명되고 나서 노동단체보다 경제계 단체를 2배 이상 더 다녔습니다.

○**조지연 위원** 맞습니다. 한 일곱 차례 정도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의견이 개진돼서 혹시 조정된 게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원래 거부권 행사했던 원안에서 조금 수정되었고 그것은 재계의 요구를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수정해서 했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행 시기라도 조금 유보해 달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짧은 기간이라도 그 불확실성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어제 법안이 강행 처리되고 난 다음에 노사 의견수렴 소통창구 TF팀을 만든다고 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그렇게 했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지금 현재 전문가들은 이미 킥오프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모의로 노사협의회, 원하청 간의 협의회도 구성해 보고 그런 속에서 제출되는 재계의 요구들 그다음에 노동계의 요구들을 반영해 가지고……

○**조지연 위원** 그런데 재계가, 경제계가 이 법의 시행을 1년이라도 유예해 달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수렴 가능성의 여지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6개월 정도 차이인데 재계에서 말씀은 준비 정도가 너무 낮다고 하시는 건데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오늘 벌써부터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원청을 고소하겠다고 예고를 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벌써 파업을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기업들은 대부분 관세로도 많이 힘든데 이중 삼중고가 될 것 같은데, 물론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파업할 때 예를 들면 주요 시설에 대한 파업은 금지하는 그런 보완, 물론 입법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보완 입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현재로서 보완 입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법이,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결의한 건 이 법 개정하고 무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저는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TF, 그러니까 법안이 개정되기 전에도 경제계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수렴이 되지 않고 사실은 경제계가 굉장히 뭐 하나 정도 수렴된 게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던데 그렇게 봤을 때 사후에 TF팀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소통이 제대로 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경제계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들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법이 찬반의 문제를 떠나서 충분히 숙의를 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주권정부라는 게 아까 전에 어쨌든 국민의 의사가 가장 많이 반영돼서 하는 문제인데 그 국민에 있어서는 노동자도 있지만 경영계도 있는 것이고, 경영계가 없으면 노조도 없고 사실은 노동자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당부를 드리는 바이고 잘 염두에 두시고 TF팀을, TF를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리고 대통령께서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공식 발언 횟수만 해도 한 열 번 정도 넘던데 국무총리께서 주요 국정과제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산재와의 전쟁 선포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또 사회적인 의제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지연 위원** 산재는 저도 없어져야 된다고,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후진적인 산재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국정의 방향을 실현하고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으로서 혹시 총리께서는 산재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챙기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산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가 됐고 지금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9월 초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기 전 단계에서 총리실 산하의 국무조정실에서 함께 그것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것으로……

○**조지연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의 산재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포스코 잣대로라면 오죽하면 코레일도 문 닫고 열차도 모두 멈춰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 얘기에, 논리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공공기관이 우선 출선수범해야 민간도 그에 맞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용부에서는 아마 이런 형사적 처벌이라든지 그리고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사후제재 조치에만 방점이 찍혀 있는데 예방에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말씀 주신 대로 실제 방점은 예방 쪽에 더 많이 찍혀 있고 그리고 제재와 처벌뿐만이 아니라 잘 이렇게 안전교육을 한다든가 방비를 했을 때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까지를 종합대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적인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총리께서 저의 이 질의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갑 존경하는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규 위원 기획재정위에서 일하고 있는 박민규입니다.

먼저 김윤덕 국토부장관님 그리고 김병환 금융위원장님께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서울 관악갑이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에 대해서 먼저 국토부장관님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5년 6월 달부터 아시는 것처럼 개인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 신청 시 주택가격 산정 감정평가를 HUG가 지정한 5개 검증된 감정평가기관만을 통해서 평가를 받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것을 HUG 인정 감정평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 부작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첫째, 감정평가 결과를 받기까지 보통 4주 정도가 소요돼서 보증 가입이 과거에 비해서 지연된 점. 두 번째, 기존 감정평가기관들과 달리 일종의 독과점을 형성한 인정 감정평가기관 5개 기관들 때문에 비용이 조금 많이 올라간 점. 또한 세 번째, 물론 이것 때문에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거 보증 신청 시 받았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감정평가액이 낮아진 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박민규 위원 그런데 감정평가액이 갑자기 낮아지게 되면 시장에 충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임대보증금의 보증한도가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감정액이 1억 원이고 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살던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 나간다고 가정할 때 갑작스럽게 새롭게 된 HUG가 해당 감정주택을 6000만 원으로 평가하게 된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훨씬 낮은 금액으로만 보증이 가능해서 순차적으로 이것들이 하나가 아닌 다수의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자 입장에서 차액을 마련하지 못해서 반환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지점 알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고 있습니다.

○박민규 위원 물론 HUG가 보증금 반환사고로 인해서 대위변제한 금액이 사실 작년에만 6조 원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21년까지 여러 가지 정책 실패를 통해서 전세사기로 인해서 HUG가 공제한 금액이 2020년과 21년에는 6000억대였다가 22년에는 1조, 23년에는 4조 9000억 원 그리고 24년에는 6조 원입니다.

이렇게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HUG 입장에서든 당연히 대책을 마련해야 됐었고 좀 더 엄중한 가격을 평가하고 엄정한 기관들을 통해서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5개 기관으로 제한하다 보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시고, 문제가 좀 저는 심각해 보입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대위변제 금액에 대한 평가액의 낮은 평가는 시장의 혼란과 불필요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아 보이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실로 대책과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그리고 김병환 금융위원장님,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HUG와 같이 전세보증을 하고 있는 금융위 산하의 주택금융공사도 비슷한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을 냈습니다. 기존에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 시에 전세계약서와 그리고 세입자의 소득, 신용도를 기준으로 하다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주택가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이 주택가격이 포함되는 제도가 8월 28일, 바로 이번 주 후반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민규 위원 그래서 다세대나 다가구, 원룸 이런 것들의 주택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공시가격인데 저희 관악구에서 이 관련된 민원이 최근에 이삼 주 너무 많이 접수가 돼서 저희 보좌진이 쪽 파악을 해 보니 놀랍게도, 과거에 가격이 너무 높고 산정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약 12개의 관련된 주택을 봤더니 평균 41%의 주택가격을 인정받았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이번에 8월 28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은 주택 공시가격의 140%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주택 공시가격의 40%에 또 140%라고 해 봤자 약 55%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또한 아까 얘기처럼 5개 인정 감정평가기관으로만 감정평가를 매우 엄하게 하다 보면 보증금 비중이 줄어들어서 또 본의 아닌 피해 사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 그 개별적인 사안들은 저희들이 현황을 조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 취지 자체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대출해 줄 때 주택가격 범위 내에서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거고 감사원 지적도 있고 한 부분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서 그 140%가 실제 가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좀 현황 파악을 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제도 시작이 이번 주 후반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움직여서 시장과 금융위가 인정하는 주택가격 간의 갭이 크다면 반드시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로 정책의 수정·보완이고 금융위원회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세사기는 과거 전세대출이라는 서민 대출을 시작했던 이명박 정부와 그리고 전세반환금 보증을 국가가 보증해 줬던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제인 정부에서도 그 보증의 비중을 70%에서 무려 90%까지 올렸기 때문에 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생을 마감하는 매우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감사원의 지적 때문에 제도를 변경한 건 좋지만 너무나 과도하게 한다면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현재 시장과의 상황과 차이가 커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로서 반드시 피해야 될 책무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좀 더 빠른 실태조사와 만약에 갭이 확인된다면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제도의 어떤 반영 취지를 변경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배경훈 과기정통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최근에—22일이지요—대통령 모시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과학 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으로 35조 3000억 규모의 예산편성했다고 발표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박민규 위원 윤석열 정부가 초토화시킨 R&D 생태계를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첫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실 R&D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자체가 원래 비율이 상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R&D 예산도 사실 양이 늘었다면 이럴 때일수록 효율성과 국가 R&D 예산의 어떤 의미를 잘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 확대 과정에서 아시는 것처럼 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의 10개 분야에 무려 166명의 전문위원들이 참여해서 국가 R&D 예산에 전문성을 투입하는 과정을 진행하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진행했습니다.

○박민규 위원 그런 과정 속에 제가 안타까운 것들은 너무 짧은 기간 안에, 전문위원들이 심층적인 분석과 창의적인 대안 제시에 시간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이 너무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은 AI 전문가로서 현재 중책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AI 시대에 예산심의 방식도 달라질 필요가 있고, 예산심의 권한은 기재부도 있고 R&D 예산은 과기부 혁신본부도 갖고 있지만 AI 주무부처로서 심의 방식에 이러한 AI를 도입하는 게 어떻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최근 기사를 보니 미국 정부는 오픈 AI나 구글 등과 계약을 맺고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고, 물론 이런 전자정부 부분은 행정안전부 업무이기도 하지만 과학기술, R&D 예산이라는 예산부터라도 혁신본부에서 과기부장관님과 협의해서 AI 관련해서 조금 더 손쉽게 체계적으로 항목별·세목별 AI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있는, 검증하는 이런 프로젝트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심의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AI 적용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부터 진행되는 심의 예산에 AI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 대학,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거점국립대 육성 관련된 부분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지방 국립대에 소중 한 예산을 다 줄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고 미래성장동력에 기초가 되는 R&D 예산, 주로 공대 예산 쪽으로 집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편성된 국가 R&D 35조에 지방거점국립대라든지 아니면 디지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같은 그러한 연구중심 대학에 대한 특별예산 항목은 추가되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방대학 배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민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포항공대가 처음 생겼을 때 정확한 명칭은 틀릴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국내 최초로 방사선가속기인가요? 이런 꽤 큰 규모의 연구설비가 들어와서 포항공대가 자리잡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라고 들었고, 최근에 우리나라 암 치료 개발을 위해서 한 3000억짜리 방사선 무슨 중입자가속기인가요 이러한 설비는 송도에 연대만 갖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3000억짜리 큰 R&D 연구장비라고 하던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 오창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도 진행 중에 있고 송도에도 그런 관련된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규 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짤 때 만약에 지방거점국립대에 기본적인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데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연구중심 공대 또는 기초과학을 살리는 예산으로 집중돼야만 하고, 그중의 하나가 좀 더 나뉘 주기도 좋지만 상징적인 3000억 정도 규모의 큰 R&D 예산을 잘 검토해서 권역별로 하나씩 그 예산을 국가가 한 3년이나 5년에 걸쳐서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술개발과 지역의 일자리 창출로 직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예산 투입이 아닐까 생각되므로 앞으로 과학기술부 국가 R&D 예산편성 과정 속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방거점국립대 또는 연구중심대학에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대규모 설비를 만듦으로써 지방에 좀 더 우수한 인재들이 실질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적극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역 안배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지금 대형 연구과제뿐만 아니라 국가연구소 그리고 AI·디지털 기반 대학 연구혁신 선도모델 구축 사업 등 지방의 대학들을 안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R&D 과제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다음은 구윤철 부총리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산자부 업무일 수도 있지만 부총리께 여쭙보겠습니다.

최근 여천엔씨씨 관련된 석유화학산업의 문제가 연일 언론에서 걱정들이 많은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여천엔씨씨의 양대 주주인—비상장기업이지요—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이 50% 갖고 있는데 이 두 기업이 2003년부터 2020년, 약 18년 동안 받은 배당금이 4조 3000억으로 돼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석유화학산업의 어떤 과잉설비로 인한 구조적인 불황은 이미 5년 전부터 예측되어 왔었는데 각자 기업들이 상장기업이 아니다 보니 기업들의 판단에 의해서 여천엔씨씨는 18년도에는 무려 7400억, 19년도에는 5000억, 2000년에는 340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배당받았는데 안타까운 것은 배당성향이라고 불리는 것이 18년도에는 162%로, 즉 버는 돈의 62%를 더 배당받았고 2020년조차도, 정말 업계가 불황이었던 5년 전만 해도 140% 배당성향, 즉 버는 돈보다 40%를 더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자부도 매우 어려운 기업들을 나름대로 논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부도를 막기 위해서 증자 또는 대여금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부총리님, 이게 석유산업으로 끝나지 않고 이차전지나 다양한 우리 산업들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부총리는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선도적으로, 과거 우리 정부가 70년대 말 중화학공업의 과잉설비로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정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한 경험이 있고 또한 97년 외환위기 이후에도 공적자금과 채권단 조성을 해 가지고 기업 간 빅딜도 많이 진행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성공했던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민규 위원 최근에는 해운·조선 산업 같은 경우에도 과거와는 달리 국책은행 중심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주도로 해 왔고 일정한 성과도 이루었고 안타까운 결과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 현재 이재명호가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과학기술에, R&D에 많이 투자하고 좀 더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서 예산도 더 확보하고 다양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되지만 선제적으로 반드시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산자부, 모든 부처가 총괄해서 뭔가 구조조정에 대한 새로운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석유산업 이 분야가 첫 번째 테스트 베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적극적인 마일스톤을 가지고 성과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해운이나 조선 같은 경우는 선제적인 사업 재편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지난번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과잉설비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또 고부가가치로 해 가지고 R&D도 정부가 해 주겠다 이렇게 저희들 정부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율적인 협약에 의해서 과잉설비를 좀 축소하는 부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석유화학이 굉장히 많은 배당을 가져가고 또 수익도 많이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주주의 어떤 자구 노력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업계가 자율적으로 최대한 빨리 계획을 내주면 정부가 같이해서 정부가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해 가지고 석유화학산업도 조만간에 하여튼 사업 재편을 통해 가지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업계하고 소통도 하고 또 정부 지원도 해 주고 또 자율 구조조정도 촉진하고 이렇게 해서 해운이나 조선처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앞으로 기재위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과거에는 됐지만 지금은 사회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법치주의가 완성됨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비단 어느 정부의 문제라기보다도 우리나라가 좀 더 선진국이 되고 민주주의가 되면서 뭔가 모르게 적극행정을 하면 손해가 많았고, 공직자들 중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그냥 중간만 하는 것이 좋았다는 정말 슬픈 현실들이 있는 부분들, 이 자리에 계신 장관님들과 많은 정치인들도 공감하는 바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98년 경제위기 이후 적극행정들이 점점 사라지는 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도개선, 그중에서도 감사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어떤 법적 제도가 되는지는 저도 아직 연구를 완성하지 못했지만 국무총리실과 또는 국회 또는 감사원이 연구를 같이해서 공무원들이 국가 위기에 자신의 모든 경험과 역량과 소신을 발휘해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직자들의 정책 판단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정책적인 책임을 선을 넘어서 과도하게 묻는 것은 마치 경영인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을 사후적으로 과도하게 묻는 것과 같은 그러한 우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 대통령과 정부가 적극행정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얼마 전에 비서실장이 직접 종합적인 적극행정을 제고하는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민규 위원**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망친 3년의 경제를 희망으로 만들어야 될 중차대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를 극복했듯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여 줬던 포용 인사 그리고 ‘이 공무원은 이 정부 때 잘 나갔어. 이 공무원은 저 정부 때 잘 나갔어’ 이러한 편 가르기가 아닌 포용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인사를 두루 살필 수 있도록 총리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다음은 국민의힘 충북 충주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대한민국 중심고를 충북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내우외환이 동시에 몰아쳐서 국민이 하나로 국난을 극복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말로만 국민 통합을 얘기하고 실제로는 국민 분열과 국민 공분을 일으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반쪽짜리 정부 또 실패한 정부로 남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 통합하고 화합하는 정부, 국가의 성장을 이루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리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시고 국무위원님 등 여러분들도 고생하십니다.

총리님,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은 뭐니까? 발표된 것 저는 못 들어 봤어요.

○**국무총리 김민석** 충직과 역량, 국민에 대한 충직 그리고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역량, 굳이 기준을 여쭙신다면 대통령이 사람을 평가하고 인사에 대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큰 방향이겠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저런 사람은 안 되고 국민의 지탄을 받을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안 된다 하는 기준을 정부에서 각각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구체적으로 그런 기준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국무위원 2명이 중간에 낙마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아직도 임명이 안 돼 있는 상태도 있고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과거에 정부에 따라서는 인사 기준을 그러한 방식으로, 어떤 네거티브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특별히 실정법에 저촉되는 것에 기초한 검증을 하는 것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야말로 포지티브한 의미에서 충직과 역량이라는 차원에서 누가 가장 일을 잘해 낼 것인가라는 능력 위주로 인사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와 또 추천하는 정부 사이에 갈등이 많이 생기고 원만하게 인사청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점이 있으니까 잘 한번 다시 또 검토를 해서 이러이러한 기준에 맞으면 국회에서도 좀 빨리 통과시켜 주고 서로 이런 암묵적 합의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도 검증할 때 그런 것 기준이 있어야 검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아까 말씀드린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법적 검증을 하고 나면 국회에서는 또 국회 나름의 청문회를 다양한 측면을 보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을 두고 실패다, 낙제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정되는 점도 있지만 일방적이고 내로남불식 비판 아닌가 생각돼서 잘못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도 낮에 답변을 통해서 ‘전 정권의 감세로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 이런 답변을 하신 바 있지요? 언론에서 좀 봤는데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종배 위원** 어떤 감세가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법인세를 포함해서 그 전에 있었던 여러 세목에 있어서 낮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종배 위원** 몇 가지가 그렇다 이런 말씀이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환원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23년도에 법인세 1% 감세를 했는데요. OECD 평균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미국보다는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이종배 위원** OECD 평균 21%지요. 우리가 24%면 그래도 높은 편에 들어가는 건데……

○**국무총리 김민석**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OECD 평균에 비해서 그다지 높지 않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게 글로벌 경제에서, 지금은 글로벌 경제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나라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어느 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이런 것 따질 때도 각국의 법인세 안 보겠습니까?

그래서 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해서 23년도에 1% 올렸는데요. 감세든지 증세를 하면 세수가 바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번에 1% 증세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 증세하겠다고 발표를 했지요. 그런데 1% 증세를 하면 세수에 어떤 영향을 기대를 하시는지요, 얼마나?

○**국무총리 김민석** 법인세와 관련한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이종배 위원** 그것은 경제부총리님이 좀 더 아시겠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게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언제쯤 증세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나고 또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번에 만약에 저희들이 세제를 올리게 되면 금년도 실적이 내년도 가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이종배 위원 그렇게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기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도에 부총리님이 그때 2차관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랬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때 22%에서 25%로 올렸어요, 법인세를. 3% 인상했는데 세수 보면 좀 오르는 것 같더니 한 2년 차 돼서 쪽 빠졌지요. 23년도 감세하고 나서 더 증세가 안 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오히려 감세하고 나서는 세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종배 위원 원래 감세하면 더 올라가야지요 그리고 증세하면 좀 내려가고.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저렇게 되는 이유가 저때 23년 24년 보니까 글로벌 침체기였고, 특히 반도체가 굉장히 침체됐고 또 고금리로 인해서 투자도 많이 위축됐고 또 기업의 실적도 저조했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법인세가 비교적 높은 편인데 그걸 더 올렸을 때 외투라든지 이런 영향에도 문제가 될 거고 또 우리 기업들 운영하는 데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게 법인세를 깎아 주면 사실은 기업이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기업에 활력이 좀 돼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걷어 가지고 정부가 예산을 더 붙여서 더 많이 지원해 줘 가지고 타깃팅, 진짜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좀 집중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기가 불투명하면 세금을 깎아 줘도 투자를 안 하게 되거든요, 기업들 속성상.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경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그게 법인세의 영향으로 안 하는 건 아니고 또 법인세가 꼭 투자 목적으로만 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목적하는 바가 있으니까 기업체들 의견도 좀 들어 가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종배 위원 기업을 위해서 감세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니, 감세를 해 줘도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증세를 하는 것이 기업을 위하는 것이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은 좀 걷어 가지고 타깃되는 쪽에다가 정부가 더 얹어서 집중적으로 해 주면 이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 증세를 할 때도 내부 보고서를 보니까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어요, 기재부에. 그런 것을 잘 참고로 하시고.

주식양도세도 사과를 하셨던데 부총리님이,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종배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더 살펴보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주식양도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의 목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늦지 않는 시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것 빨리 결정하셔야 되는데 너무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질질 끄는 것 같아서, 너무 시장을 이렇게 모호한 상태로 두는 것은 좋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저희들이 7월 31일 날 발표를 했고요. 지금 한 20일 좀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시장의 목소리도 듣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보니까 세입경정을 안 했다 이런 지적도 하셨던데요, 민주당에서. 세입 경정을 했어야 되지 않냐. 물론 세입경정 하고 세출도 조정하고 뭐 이렇게 하면 깨끗하긴 한데 이왕 세출 만들어 놓은 걸 세출 줄이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 같은 것은 20% 내에서 정부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것은 기본 사업비 조정인데 이번에는 여유자금을 당겨 갖다 쓴 부분이라서 조금은 다른 성격입니다.

○이종배 위원 공자기금에서 갖다 썼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공자기금에서 더 받을 부분은 안 받고 또 다른 기금에서 상환해야 될 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통해 가지고……

○이종배 위원 그러면 기재부에서 잘못했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기재부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0.8조 원의 예산을, 보통은 한 6조 이렇게 작게 나면 자체적으로 불용이 가능한데 규모가 좀 큰 부분을 기금의 여유재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 대해서 국회에서 왜 이런 것을 또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건 지적하고 바로 고치고 해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종배 위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목표 범위 밖으로 나갔다 하는 것도 지적을 했는데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로 하자 하는 것은 얘기만 있었지 그게 재정준칙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기재부 내에서 그렇게 정했던 건가요, 그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것은 아니고 재정준칙을, 법안을 하신 의원님께서 3%, 60%, 이게 마스트리흐트 조약이라고 해 가지고……

○이종배 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각 나라들이 워낙 경기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 3% 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번 추정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더 커졌던데, 4.2%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4%……

○이종배 위원 4.2%.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4%를 넘어가는, 최근에 와서는 그런……

○이종배 위원 4% 넘어갔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종배 위원 그래도 재정준칙 정해야 되지 않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단기적인 재정준칙을 지금 정해 버리면, 예를 들어 3% 이렇게 해 버리면은요 진짜 성장을 해야 될 모멘텀을 잃어버리니까 좀……

○이종배 위원 여유 있게 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재정의 성과를 높일 수 있으면 4%든 이렇게 좀 쓰고 성장해서……

○이종배 위원 4% 정도 하고.

우리 그 전에 또 국채 비율도 50% 하기로 했지 않았나요, 그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때는 60%. 3%, 60%였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 60%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종배 위원 지금 50%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년에 49.1%입니다.

○이종배 위원 49.2 그렇게 됐었지요.

어쨌든 그런 재정준칙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고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목표 범위를 넘어섰다 이런 지적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되고요.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얘기 할 바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채무가 올해 1300조 되고 한 해 이자만도 30조를 넘어서게 되는데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400조 이상 국채 발행해서 1000조 시대 연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코로나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또 같이 겹쳐서 그랬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 이유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D2, 각국 비교할 때는 D2로 비교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국제적인 비율……

○이종배 위원 보니까 D2가 금년도에 54.5%로 비기축 국가, 선진국 11개국 비교한 것보다 우리가 넘어섰더라고요. 우리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국채가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래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좀 빠른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예의 주시하면서 관리를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잘 주시만 할 게 아니고 대비를 해야지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 뒷박을 옆에서 꺾어 가지고 한 가마를 가을에 수확하는 그런 것은 찬성이고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저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것을 국채를 발행해서 또 소비쿠폰 같은 것 하고 이렇게 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것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채가 늘어나면 신용등급 떨어지고 국가신인도도 떨어지고 그러면 외투, 외자 유치하는 데도 어렵고 수출입도 감소하고 여러 가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게 되는 이런 점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성장률을 발표했던데 0.9% 발표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종배 위원 소비쿠폰 포함해서 두 번 추정 한 게 우리가 46.5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46.5인데 세수 부족 10조 원 추정 한 것 빠지면 36.5조고요.

○이종배 위원 그것 빠면 36.5조.

대개 10조 늘리면 0.1%씩은 경제성장률이 올라간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적용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금년에 0.2, 내년에 0.1 해서 0.3% 효과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저는 추경도 하고 그래서 0%대는 넘어설 줄 알았는데 아직도 0%에 머무른다는 것은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만 같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OECD 평균이 3.1%, 이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니냐 생각되는데 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그것은 작년 2/4분기에는 계엄이 있기 전인데 그때 -0.2%였습니다.

○이종배 위원 어쨌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리고 3/4분기 4/4분기에 0.1 0.1, 금년 초에는 또 -0.2 이러다 보니까……

○이종배 위원 그래도 우리가 금융위기나 또는 IMF 바로바로 잘 극복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데도 그런 위기가 없었는데도 경제가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지난 정부를 저는 비난하는 것은 아닌데요 경제 운영을 여하튼 어쨌거나 좀 소극적으로 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제가 질문할 게 좀 많이 있는데.

총리님, 광복절 기념행사, 특히 국민임명식에 참석하셨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참석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광복절이라는 게 광복의 기쁨을 되새기고 순국선열을 기리는 그런 행사인데 광복절 중심이, 국민임명식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80주년 행사가 좀 빛이 바랬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광복절 80주년 기념식은 오전에 또 따로 있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하나로 보는 거지요. 이게 하필 임명식이 광복절에 있으니까 또 같이 겹쳐서 하고 언론에 나오는 것도 국민임명식이 더 많이 나오고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소요 예산, 전야제하고 당일 기념행사의 소요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총리실에서 총괄했더라고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제가 지금 그 기록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 34

억 정도로 제가 들었는데……

○**이종배 위원** 자료를 총리실에서 받아 보니까 55조……

○**국무총리 김민석** 예,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55조지요? 이게 행안……

○**국무총리 김민석** 국민임명식은 34억 원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행안부가 제일 많이 썼던데, 행안부하고 문체부 또 보훈처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6월 달에 이미 취임식을 했고 또 전례도 이런 전례도 없고 임기도 이미 개시가 다 됐는데 이런 임명식이 과연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그때 광복절 전전날에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 호우로 인해서 3명이 사망을 하기도 했는데 또 야당도 거기에 참여를 안 하니까 반쪽짜리고 이래서 이런 것이 올바른, 임명식이 필요했냐 자축파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더군다나 또 이번 광복절에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특별사면 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적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국무총리 김민석** 이렇게 두 번에 나뉘어서 임명식이라는 형식으로 사실상의 취임식을 한 것이 전례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계엄과 내란으로 해서 이렇게 출범을 하는 상황 자체가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에서 아주 형식적인 선서만 한 취임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종배 위원** 아니, 초반에 하시든지, 아예.

○**국무총리 김민석** 초반에 하기에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종배 위원** 그렇다고……

○**국무총리 김민석** 그래서 그때 대략 8월 15일경에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싶어서 가장 추가 비용 소요가 들지 않는 선에서 미리 계획을 했던 것이고, 해서 무슨 호우를 예상했던 것도 아니고……

○**이종배 위원**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리고 국민의힘의 참여도 기대했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고 그래야지요.

시간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근 위원**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저는 서울의 문화도시 성북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MBK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MBK 홈플러스가 최근에 알짜 매장 15개를 폐점한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회생계획안에서는 무려 40개의 점포를 폐점하겠다는 이렇게 지금 법원에 제출을 하고 있어요. 이런 큰 대형마트라고 그래도 40개 정도 점포를 폐점한다면 사실상 청산 절차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정확한 숫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8만에서 10만까지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들어서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 그냥 포기할 수는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홈플러스에 노동자들이 현재 얼마 정도 있다고 알고 있으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조합원 한 2만 명 정도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노동자들만 2만 명이 있고 거기에 있는 입점 상인들이 또 있고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을 다 합치면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청산이 되게 되면 이 10만 명에 생존의 위기들이 오게 되는 것이어서 그렇게 쉽게 그냥 그 사건만의 피해자들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없고 우리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될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전개에 있어서 상당히 위법하고 부도덕한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비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수를 할 때도 문제였었는데 인수를 할 때 7조 5000억에 인수를 했는데 MBK가 운용사가 돼서 모아 온 사모펀드는 한 2조 50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5조는 홈플러스의 부동산하고 주식을 담보로 해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다음에 그 인수한 자금을 뭘로 갚았냐 하면 결국 홈플러스에 있는 매장 부동산을 팔아서 갚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인수할 회사의 돈을 갖고 한 다음에 그 매장 부동산을 파니까 그러면 또 그 홈플러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이 다 팔리니까 거기에 임대차를 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고, 많은 임대료를 내야 되다 보니까 1년에 수천억 원의 임대료를 내는데 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영업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이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경영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렸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인수할 때 벌써 배임 이런 형사적인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피해 나가기 위해서 MBK는 1조를 투자하겠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1조 투자하지 않았습시다. 오히려 매년 한 1000억 이상의 운용수익들을 가져가면서 운용수익으로만 1조 이상 가졌어요. 아마 인수를 할 때도 인수 자금을 받아 가지고 철수를 하는 테스코한테 상당한 성공 수수료 이런 걸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챙길 걸 다 챙긴 거예요, MBK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먹튀의 절차로 회생 신청을 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회적으로도 아주 비난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인수 자체가 위법하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 결과로 10만 명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사건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김남근 위원 보건복지부장관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MBK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모아 온 2조 5000억을 포기하겠다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2조 5000억을 포기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얼마나 손실을 입게 되는지 이런 것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한 2000억 좀 안 되는 돈을 아직 투자 회수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일단 보통주로 투자한 290억 원은 그냥 이미 날아간 상태이고 그다음에 상환전환우선주로 갖고 있는 5826억 중에서도 상당한 부분들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국민연금은 내 돈 다 챙기겠다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진짜 다른 기업에 인수가 되려고 그러면 홈플러스가 모아서 투자한 2조 5000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이라는 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하게 돼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김남근 위원 사회적책임 투자라고 하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적어도 위법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하면 안 되고 특히 사회적으로 비난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하면 안 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김남근 위원 그런데 MBK가 모으는 그 사모펀드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국민연금도 상당히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국민연금입니다. MBK가 모아서 운용한다는 사모펀드가 MBK 돈이 아니잖아요. MBK는 운용사인 거고 실제 그 사모펀드에 있어서 그 MBK가 가지고 있는 돈들은 1%,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5%가 절대 안 넘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1순위로 투자하는 게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이 투자하면 그게 시드머니가 되고 신뢰가 되면서 은행·증권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몇조 원들의 돈이 모여지고 그 돈을 가지고 MBK가 기업 인수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MBK와 같이 이렇게 위법한 행동을 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동을 하는 그런 운용사에 대해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정확히 한다면, 사회적책임 투자 활동을 한다면 국민연금은 투자를 하면 안 되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위탁운용사가 선정되지 않게끔 MBK 사태 이후에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을 일단 개정을 해서……

○김남근 위원 기준은 술하게 개정했고 스튜어드십 코드는 엄청 많이 개정하고 했는데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좀 더 강화를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남근 위원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 일본처럼 하고 있다라는 증거 하나도 없어요. 일본처럼 그러면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회사라든가 배당성향이냐 주주환원정책을 안 하고 있는 회사를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통해

가지고 바뀌 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아주 모범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냈다 그런 예가 없어요. 일본같은 그런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활동이라는 게 실제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행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보건복지부가 금융 전문가가 아니어서 점검이 어렵다면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랑 같이해서 가지고 저는 일본처럼 정확히 금융적 관점에서 한번, 자본시장적 관점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 중에 이런 거지요. 지금쯤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 국민연금은 MBK와 같은 그런 위법하고 부도덕한 운용사한테는 투자 안 하겠다 이 선언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압박이 돼서 MBK가 좀 더 홈플러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기 돈도 투자를 해서 홈플러스를 살리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하게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통해서 견인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에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남근 위원 그런 막연한 기준 암만 만들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요. 사례가, 사건이 생기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그냥 돈만 떼고 그냥 손실 본 걸로 손 씻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들의 돈을 갖고 손실을 봤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10만 명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에서 국민연금이 아무 역할도 안 하고 MBK에 대해서 아무 견제도 하지 않는다. 그 거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될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그냥 팔짱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국민연금이나 보건복지부도 비난받아야 되는,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말씀 주신 대로 대체투자 분야에도 이런 책임투자를 적용할 수 있게끔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국민연금이 MBK가 운용사가 되는 그 사모펀드에 출자를 안 해 주면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니까 은행이나 증권사도 투자하는 거고 그런 거대한 몇조 원의 돈들이 모이는 건데 앞으로 국민연금이 MBK와 같은 그런 부도덕한 운용사한테 투자 안 하겠다고 그러면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MBK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홈플러스에 대해서 좀 더 진심을 갖고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가 팔짱을 끼고 있는 것도 홈플러스 사태의 문제가 적극적으로 풀리지 않는 데 저는 중요한 기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홈플러스 사태에서 지금 가장 위법성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회생절차 들어가기 직전에, 며칠 전까지 800억의 전단채라는 채권을 팔았고 2월 한 달 동안에만 1500억을 팔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김남근 위원 저도 법률가입입니다만 보통은 회생절차 신청하려면 적어도 한 두 달은 걸려요, 준비하는 데. 저는 한 1월 달부터 회생절차를 준비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

도 2월에는 준비를 했을 텐데. 회생절차를 준비해서 만일 채권이 팔리더라도 그 채권자들은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들을 알면서도 판 거예요. 사기적 금융거래지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그런 혐의로 지금 통보를 했습니다.

○**김남근 위원** 금감원이 조사를 해서 통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제재를 안 합니까, 조사를 다 했는데? 제재를 하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고 그러면 국민연금도 부담 없이 위법한 행위를 했으니까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에 따라서 MBK한테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걸 할 텐데 금감원이 미적미적하면서 아무런 제재를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홈플러스 사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니예요?

○**금융위원장 김병환** 검찰에 통보를 하고 검찰 수사가 빨리 진행될 걸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좀 늦어지고 있어 현재 자체적인 제재를 하기 위해서 금감원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렇게 지금 팔짱 끼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이게 10만 명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 당국들이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계속 ‘검찰이 수사 안 해서 지금 못 하고 있어’ 이렇게 핑계를 댈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팔짱을 끼고 있는 건 아닌데 속도를 내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법무부장관님한테도 좀 문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수사가 안 될까요? 사건은 지금 3월 2일쯤에 이미 다 알려졌습니다. 딱 봐도 이게 사기적인 거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걸 고발한 게 그냥 일반인이 고발한 게 아니예요. 증권사들이 고발을 했어요. 4개의 증권사들이 고발을 했고 다 대형로펌의 자문을 받았고 증거들도 다 모아서 했습니다. 이미 시작 단계에서부터 증거가 넘치는 사건이고 거기다 금감원도 조사를 해서 증거를 갖춰 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5개월이 되도록 아무것도 없잖아요.

MBK 김병주를 불렀습니까? 한 번이라도 소환을 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지휘를 할 수도 없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진행되는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4월 2일 날 신영증권 등 증권사에서 고발을 했고요. 그 이후에 4월 말 정도에 MBK파트너스하고 홈플러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그 이후에 5월 초에 신영증권 등에 대해서도, 관계 증권사들이라든가 금감원 또 김병주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서 지금 차입매수 관련한 법적 검토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7월 달에 롯데카드 본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김남근 위원** 다 제가 알겠는데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현대카드에서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이래라저래라 지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법무부에서 법적 검토를 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다중피해 범죄에 대해서도 좀 더 강력하고 신속하게 검찰이 수사해라 이런 정도의 지시는 해 났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래서 저희 국회의원들이 항의하러 대검 방문했고 대검 차장님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법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법리를 보강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설득력이 없어요. 법리라면 법률전문가인 검사들이 밤을 새워서 논의를 해 가지고 법리를 정리하면 되는 거지.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데 증거와의 관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봐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김남근 위원**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고 하는 데 노력을 해야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남근 위원** 여기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어떤 사람들이예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홈플러스에 입주해 있는 여러 가지 소매업 하시는 분들이지요.

○**김남근 위원** 아니,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전단체 피해자들, 그 채권을 산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데 집에 있는 전세보증금 빼 가지고 그것 샀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암 치료받아야 되는데 치료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회수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게 되면 예금처럼 그렇게, 예금보다 더 많은 한 5% 정도의 이자를 받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투자했다가 못 받아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제가 아시는 분은 농어촌연구소, 이런 것 연구하시는 그런 재단인데 재단 운영비 여기다가 다 투자를 했다가 회수를 못 해 가지고 지금 사무실도 내줘야 되는 상황에 있고 굉장히 어려운 서민들이 많습시다.

이것 빨리 정리를 해야 될 문제인데 금감원은 검찰 핑계 대고 또 국민연금도 지금 금감원이 제재 안 했기 때문에 MBK가 위법한지 아닌지 판단이 안 서니까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할 수 없다 그러고, 이렇게 서로 핑퐁하듯이 밀고만 있는 사이에 거대한 홈플러스가 점점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회적인 큰 대란이 일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법무부장관님도 검찰에 빨리 사건을 마무리해서 기소를 하든 이것을 빨리하라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법원행정처장님한테도 좀 묻고 싶습니다.

회생법원이 이런 많은 이해관계가 있고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홈플러스를 살리겠다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운영하겠다는 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안에 40개 점포를 폐점하겠다는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법원이 소극적으로 움직이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잘못하면 사회적인 비난이 법원으로도 갈 수 있는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회생법원에서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법적으로 채권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들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지금 전단체 피해를 받아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도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로 되어 있지 않아요.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는 채권자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법원에 전달이 안 돼요. 입점 상인들의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됩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전달이 안 돼요. 그냥 금융기관들 중심으로 한 그런 채권단들의 목소리만 들어 가면서 이 사건을

처리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고 저는 법원도 큰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회생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얘기를 듣는 절차들을 마련하고 그런 것에 기반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10만 명의 생존권이 달린 이 홈플러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법원도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께서 대표적인 회생·파산 전문가시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이번의 회생절차나 또 각종 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론으로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건과 같이 청산 가치가 회생 가치보다 더 높다고 나왔지만 그 경우에 파산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은 수많은 근로자들 또 입점 혹은 납품 소상공인들 그리고 홈플러스를 이용하는 수많은 소비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배후에 있는 수많은 투자자들 이런 분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가 전 M&A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아주 이례적인 것은 아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에 티몬이라고 하는 회사도 결국은 같은 절차를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회생절차가 마무리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인가 전 M&A를 할 때 여러 조건들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법원이. 여기는 지금 10만 명의 고용이나 영업승계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티몬 사태에서 고용승계나 거기에 관련돼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영업이나 이런 게 승계된다는 게 있었습니까? 관련된 사람 다 망하고서는 그게 어떻게 성공적이었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홈플러스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티몬처럼 해 놓고서는, 노동자들 다 해고되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입점 상인들 다 영업들을 하지 못하게 되고 납품하던 사람들은 다 납품대금 받지 못하게 되고 그런 상태 속에서 그냥 홈플러스라는 회사의 이름만 남았다, 그걸 다른 회사가 인수해 갔다, 그러면 그게 성공한 겁니까? 적어도 고용승계라든가 영업승계라든가 이런 안전장치들이 마련된 상황 속에서 회생절차가 진행이 돼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다 남아야 성공이지 회사의 이름만 그대로 남게 됐다는 게 어떻게 성공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재판부로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고민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남근 위원** 저희가 개별적으로 재판부를 만나 가지고 이런 얘기를 전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법원행정처라면 이런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들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원칙하에 회생절차를 운영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필요하고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하면서 또 그런 게 재판부에도 전달이 돼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찾고 법원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책임 있

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다음에 MBK의 인수 방법, 소위 LBO라고 그러지요. 차입매수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사회적인 비난이 많은 것 아시지요? 금융위원회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책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MBK와 같은 그런 거대한 사모펀드를, 조 단위 사모펀드를 모으는 데들은 기관전용 사모펀드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이 1순위의 투자자가 되고 은행·증권사들이 투자자가 되는데 여기들은 다 소위 말하는 스텔어드십 코드, 사회적책임 투자를 하는 데예요.

그래서 만일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했던 것처럼 과도한 차입을 통해 가지고 회사를 인수했다 그리고 그걸 갚아 나가는 것을 그 인수한 회사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매각해서 회사를 거의 죽여 가면서 했다, 아마 그런 내용들을 보고받았다면 국민연금이나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당연히 손 털어야 될 거예요. MBK한테 ‘그런 방식으로 영업하지 마라. 계속 그런 방식으로 영업한다면 우리 이 사모펀드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 투자하지 않겠다’, 소위 사회적책임 투자를 하는 거지요.

외국의 거대한 기관투자자라고 그러면 노르웨이 연기금, 네덜란드 연기금, 스웨덴 연기금, 미국의 블랙록이나 이런 데들 다 이런 식의 ESG 책임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연금이나 은행과 같은 투자자들이 그런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만들고 그때 금융감독당국도 그런 보고를 받아서 과잉배당이나 과잉대출을 받아 가지고 회사를 망가뜨려 가는 방식으로 하는 식의 사모펀드들의 차입매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 차원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원상복귀 조치를 하거나 저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금융감독당국이 예방책, 약탈적 차입매수, LBO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 그런 장치들을 한번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MBK·홈플러스 문제를 제가 보기에선 각 정부들에 다 흩어져 가지고 ‘나는 책임 없다. 내가 져야 될 책임 범위에서는 멀리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방치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범정부 차원에서 여러 부처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 문제가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총리님이 중심이 돼서 한번 문제를 풀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정부 차원의 TF 같은 것도 만들어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총리님, 각별히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혁신당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개혁신당의 천하람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굉장히 걱정스러운 내용이라서 법무부장관님과 한번 말씀을 나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지요, 트루스소셜인가 거기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한국의 현재 상황이 숙청·혁명 같다. 이 상황에서는 한국과 같이 사업을 할 수 없다. 오늘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이런 글을 올려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언론 보도, 속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방금 뜬 소식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님도 아직 확인을 못 하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본인 SNS에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얘기지만 법무부장관님께서 오늘 여기 계실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여러 가지 통상이나 관세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트럼프 대통령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위헌적인 비상계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사법절차를 밟고 적절한 처벌을 가하는 것을 숙청이나 혁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왜곡된 인식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혹시 미국 측과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특검의 문제, 전직 대통령 내외 수사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을 소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개인적으로 제가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분야에 있는 워싱턴 라인에 손을 댈 수 있는 많은 분들하고 평소에 소통을 계속해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와중에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워싱턴의 지도자들이 민주당 정부나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오래 전부터 받고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해명하려는 노력은 해 왔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요, 사실 몇 시간 있으면 이 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정상회담을 가져야 하는 상대 국가에 대해서 ‘숙청·혁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사실 굉장히 강한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그쪽이랑 같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거의 협상도 지금 제대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어떻게 보면 거의 레드플래그가 올라온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물론 법무부장관님 노력하셨겠지만 그런 어떤 우려나 여러 가지 왜곡된 정보를 아셨으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몇 시간 전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지, 제가 너무 걱정이 돼 가지고 다시 한번 여쭙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그것을 좀 벗어나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제가 만났던 워싱턴 관계자들로부터 들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통령실의 여러 군데 많이 전달했고요. 저는 그와 관련해서는 안보실장이나 비서실장 또 총리님도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천하람 위원** 지금 혹시 법무부에서 관계자가 미국 현지에 가 계신 분이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러면 혹시 미국 대사관에 법무부에서 파견 나가 있는 직원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법무관이 하나 나가 있을 겁니다.

○**천하람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법무부장관님, 오늘 예결위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입니다마는 실시간으로 법무부 또 지금 미국 현지에 가 계신 분들하고 소통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게 법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외교·안보 라인 전체가 다 함께 노력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구윤철 부총리님, 같은 이슈인데 혹시 지난번에 미국하고 관세협상 진행하실 때 전직 대통령 내외 수사와 관련해서 미국 측에서 혹시 어떤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한국 측의 사법 처리가 과도하게 잔인하다거나 너무하다거나 이런 식의 인상을 주거나 언급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 건 없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천하람 위원**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제가 계속 이어서 여쭙보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사실 대한민국의 사법절차나 심지어는 정의의 관념과도 부합하지 않는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체포에 저항했다느니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언론에 노출되고 심지어는 법사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사법절차가 마치 굉장히 보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왜곡돼서 미국 측에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다시 한번 됩니다.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지금 법사위에서 이런 CCTV 영상, 속옷 차림인지 이런 영상을 공개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의 국격, 특히 전직 대통령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다른 우방국이나 동맹국에게 어떻게 비칠지에 대한 우려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법무부장관님, 혹시 이런 속옷 차림 CCTV 공개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법사위원님들에게 존경하는 천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을 여러 분들에게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사실은 공개 관련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바대로, 언론에 나온 것처럼 법사위원들이나 서울구치소 방문했을 때 일련의 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제가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선택을 제가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우리의 사법절차나 수사 과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비칠지도 잘 유념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법무부장관님도 아마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산업부의 문신학 차관님!

차관님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 안창용** 지금 잠깐 자리 비워서 대신 앉아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실장님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 안창용** 정책관입니다.

○**천하람 위원** 정책관님, 지난번에 김정관 장관께서 한전·한수원 그리고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다라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 입장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 안창용** 예, 지금도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러면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이 굴욕 계약입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굴욕 계약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 안창용** 저희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매국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 안창용** 그 정도까지로는 고려하고 있지는,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천하람 위원** 지금 산업부의 김정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상무장관이나 에너지장관 만나 가지고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 협력 방안 이런 부분들도 논의를 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 안창용**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총리님, 지금 보면 조선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원전, 원자력과 관련한 협의 또 협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전에 관해서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산업부장관마저도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고 굴욕 계약이나 매국 계약이나 이런 것은 안 맞다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은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에 관해 가지고 아주 강경한 ‘매국 계약’ ‘굴욕 계약’ 이런 표현들을 써 가면서 굉장히 심각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와 미국 사이의 원자력 협력을 더 어렵게 하거나 대한민국의 원전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 지금 산업부장관은 정상적인 계약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웨스팅하우스 계약과 관련한 입장이 좀 정리가 됐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조사가 다 끝난 후에 어떠한 계약이었다라는 규정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조사가 되거나 정부 차원에서 그 계약의 성격이나 유불리가 규정이 된 그런 상황은 아닌 거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러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미국과 원자력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나서 가지고 한국 기술로 원전을 짓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성격의 계약을 가지고 여당 의원들이 매국 계약이다, 굴욕 계약이다, 이것 특검 해야 된다, 이것 너무 나간 것 아닙니까?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 개별 계약에 대한 판단은 각자가 판단하는 바에 따라서 여러 측면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협상을 할 때 그 협상에 대해서 사전에 이것이 잘못되었다 또는 너무 과하다 또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각각 다른 측면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딱 하나로 얘기하긴 어렵고 더구나 의원들의 판단을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 저도 물론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당의 의원들 또 굉장히 지도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 또 몇 분, 여러 분들이 집단적으로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을 굉장히 매국 계약이다, 굴욕 계약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을 좀 줄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오히려 여당의 의원들에게 이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특히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고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이 굉장히 진행 중인 상황에는 국익을 위해서라도 조금 자제해 달라라는 이야기들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정부는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위원** 글썄요, 그게 정부와 여당을 그렇게 별개로 우리가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과 관련해 가지고도 조금 여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 가지고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실 여야를 초월해서, 저희 개혁신당 의원 3명을 포함해서 84명의 의원이 반대 또는 기권 표결을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것 치고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이탈 표가 나온 것입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부모가 자식 세대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그런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여야 지도부 역시도 이런 우려들을 일정 부분 생각해서 모수 조정은 했지만 최대한 빠르게 구조개혁을 이어 갈 것이라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께서도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공약도 내지 않았거든요. 국정기획위원회의 과제를 봐도 국민연금의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재정 역할 강화, 수익률 제고 이런 식의 얘기들만 하고 있는데 총리님께서 지금 아시기에 정부 차원에서 구조개혁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추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도 드러났지만 구조개혁이라는 작업이 워낙에 지난하고 합의가 어려운 작업이어서 이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의 연금특위라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서는 정부의 의지만으로 일방적으로 천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천하람 위원** 물론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도 열심히 해야지요. 그러나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 기본적인 자료들이 보건복지부, 정부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을 그냥 국회에서 해라라고 놔둘 것이 아닌 상황이라면 정부에서도 나름의 구조개혁안을 내놓으셔야 된다, 그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KDI가 이야기하는 신연금·구연금 분리방안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포함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간단치가 않은 것이 지금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가재정 역할을 강화하겠다, 국민연금에 국가재정을 넣겠다 이런 얘가지요.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천하람 위원 지금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가재정 역할 강화, 좀 구체적인 방안이나 금액 액수나 범위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지금 크레디트를 좀 강화하는 부분하고요, 저소득층 연금에 대한 지원 부분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부 방안이나 재원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 것 말고 지금 보십시오.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요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향후 우리가 더 확보해야 되는 추가자산의 현재 가치가 1820조 원이거든요. 사실상 지금 마이너스 1820조 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야 되는 게 현재 가치로 총 6000조가 넘는, 그렇게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를 미래세대에게 다 떠넘기지 않으려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지금 국가재정을 넣겠다라고 국정기획위원회는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그러면 실질적인 국가재정 투입이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레디트 확대 부분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게……

○천하람 위원 예, 그런 거는 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천하람 위원 그런데 그 정도 해 가지고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연금의 어마어마한 부담 규모라고 하는 것이? 알고 계시지요?

혹시 기금 소진되고 나면 우리 미래세대가 월급의 몇 퍼센트 정도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연도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한 40%까지도 추계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적자가 매년 국민연금에 쌓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천하람 위원 장관님, 장관님 월급의 40% 국민연금으로 내시고 사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위원 불가능하겠지요. 연금 40% 내면, 거기다가 건강보험 내고 소득세 내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미래세대를 위해서 뭔가 해체작업을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모수 조정하면서 더 내고 더 받기 하고 ‘야, 이것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이것 다 폭탄 떠넘기기 하는 것 아니냐’ 해서 구조개혁 금방 하겠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총리님도 그렇고 장관님도 그렇고 구조개혁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 전혀 없잖아요. 그냥 국회에 떠넘겨 놓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도 정부 차원에서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또 국회랑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위원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자동조정장치를 도입을 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좀 높아진 하겠지만 연금이 줄어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저희가 노후소득 보장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고려할 필요는 있겠고요. 구조개혁 할 때 그 부분도 좀 논의를 같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참 엄청난 크기의 폭탄입니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의 더 많이 가져가는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미래세대에게 폭탄을 떠넘기겠다라고 하면 이 논의라는 것은 사실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적정한 선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모수 조정을 하고 구조개혁을 시급하게 논의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 어떤 합의와 실제 통과와 과정, 그 정신을 잘 염두에 두시고 정부에서도 조속하게 구조개혁에 대한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재정을 연금에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믿을 수가 없는 게요, 지금 나라에 돈이 별로 없어요. 쓰고 싶은 데는 너무 많잖아요. 대통령께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라는 데서 씨앗을 옆집에서 빌려서라도 뿌려야 된다, 빌려 가지고 씨앗 뿌리겠다 이러고 있는데 미래의 국민연금에다가 재정 투입하겠다? 그럴 여유 없을 겁니다. 복지부장관이 설령 어떤 의지가 있으셔도 대통령이 그렇게 하실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내년에 정부 예산안 지출 규모가 700조를 돌파해서 730조 원에 육박할 거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총리님, 내년 예산안 규모 730조 원 정도 맞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대략 맞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리고 730조 원 정도 된다 그러면 국채 발행만 사상 최초로 200조 원 정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오는데 국채 발행도 예상 규모가 그게 맞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국채 발행 규모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천하람 위원 부총리님, 어느 정도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200조까지는 안 갑니다.

○천하람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국무회의 거쳐 가지고 이번 주에 발표하게 됩니다.

○천하람 위원 아니, 뭐 여쭙볼 때마다 계속 논의해서 나중에 알려 주시겠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니, 이게 국무회의 거쳐 가지고……

○천하람 위원 대주주 기준 10억 그것도 계속 지금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이미 내부적으로 나온 게 있으실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 저희들 이제 작업 마무리하고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국무회의 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 올해지요, 올해. 올해 국채 이자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총리님?

○국무총리 김민석 ……

○천하람 위원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장학퀴즈 하자는 게 아니니까.

30조 원을 넘기거든요. 거기다가 내년에 200조 규모의 국채까지 이렇게 한다. 이것 진짜 장난 아닙니다. 우리 국채 이자만 어마어마하게 될 겁니다.

더 시간이 없네요.

그리고 이것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는 이것 보면서 참 이상했던 게요 대통령께서 씨앗 빌려 와야 된다,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셨습니다.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잖아요. 제가 만약에 가계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제 와이프한테 남의 집에서 돈 빌려 와 가지고 씨앗 뿌리듯이 쓰겠다 이랬으면 제 와이프가 제 등짝을 때렸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너무 대통령께서, 지금 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의 부채까지 고려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데도 당장 빚 땡겨다가 쓰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너무 없으신 것 아닌가. 국채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발행하는 형태의 재정 운영, 총리께서도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지금 향후 5년간의 재정 계획에 있어서도 최대한 지출구조조정을 중심으로 국채를 최소화하는, 사실상 국채를 전제를 안 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경제부총리가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른 것 같은데 또 추가로 나중에 여쭙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여섯 분 계십니다.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충북 충주의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부총리님, 지난번 7월 달에 관세협상 때문에 미국에 갔다 오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종배 위원 트럼프 대통령이 글을 올린 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한국에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한국에서는 같이 사업하기가 어렵다, 오늘 한국 대통령 만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도 여기 있어 가지고 제가 전혀…… 오늘 아까 천하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처음 인지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3500억 달러에 대한 문서화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었는데 그리고 농산물 개방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근본적인 문제, 이번에 한국과 같이 못 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인데 만약 그렇게 되면 큰일일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 누가 나와 계시나요?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김병욱 정무비서관 김병욱입니다.

○이종배 위원 비서관님 나와 계시는구나.

지금 삼 실장님들 다 나가셨잖아요?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김병욱 예.

○이종배 위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나가신 것 같은데 나가서 가지고 그쪽의 파트너하고 다 협의가, 뭐 만나고 그러셨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런 내용들이 설명도 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전혀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1시 반이면 불과 두 시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좀 당혹스럽기도 하겠어요.

총리님, 어떻게 보세요? 상황이……

○국무총리 김민석 현재로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글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난번 7월 말에 협상을 부총리님이 가서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종배 위원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종배 위원 최선은 다했어도…… 최선을 다했겠지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러면서 최선을 다했겠지요, 이게 나라를 대표해서 협상을 하는 거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일의원연맹에서 일본에 잠깐 다녀왔는데, 지난주인가 다녀왔는데 그쪽에서는 상당히 한국과…… 자동차가 거기는 가장 큰 관심, 우리도 그렇겠지요. 대미 수출의 한 50% 정도가 자동차 아니에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종배 위원 한 49.1%인가 그렇고 반도체는 한 7.5%밖에 안 될 정도로, 자동차·자동차부품이 전체의 한 85%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전체 흑자의 한 70% 정도……

○이종배 위원 아니, 자동차하고 자동차부품까지 하면 한 85%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다인데 자동차·자동차부품 다 우리는 품목관세에 들어가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종배 위원 그러면 15% 일본하고 똑같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종배 위원 그래서 일본은 내심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2.5%를 깎아야지 되는데 그것을 못 깎았으니까 개들은 15%로 한국하고 똑같고, 5500억 불 투자는 GDP로 비교해 보면 일본이 2.5배 정도 되니까 우리는 한 2000억~2500억 불이 적정 이거든요, 그것 맞춰서 보면.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는 좀 과다했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 대신에……

○이종배 위원 이게 앞으로의 추후 협상을 통해서 좀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여지가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3500억 불은 아마 바뀌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은 그 대신에 그중에 1500억 불은 조선 쪽으로……

○이종배 위원 조선으로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렇게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나머지도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하는 반도체라든지 이차전지라든지 또는…… 뭐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원전도 있고요.

○이종배 위원 조선, 원전, 방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까지 잘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기업 투자 같은 게 위축된다든지 제대로 된 일자리가 더 줄어든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것들을 잘 다룰 필요가 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조금 설명드리면요 조선업 같은 경우는 미국에 조선 관련된 기자재라든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다 1500억 불 정도의 조선업 신축을 하거나 MRO를 하거나 기자재 업체를 하면 한국에서 이게 처음에는 다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종배 위원 원전도 비슷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목만 이렇게 미국하고 협상을 잘하면 한국한테 또 다른, 완전히 일본하고는 다르게 저희들은 기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도체라든지, 일본은 반도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종배 위원 잘해서 하여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 위원 총리님,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쭙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중에 응급 환자 체류시간이라고 하는 통계가 있는데요.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서 환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출발하는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그 과정에서 환자를 어느 병원으로 데리고 갈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60분을 초과하는 환자의 비중이 2023년하고 2024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2025년 통계도 받았는데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2월에 둘째 아이를 쌍둥이로 임신한 임산부가 24주, 그러니까 조기분만이지요. 위험 징후가 있어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 지금 이른둥이가 나올 수 있으니 빨리 큰 병원을 가 보라고 해서 119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 주는 병원이 없어서 온갖 군데에 연락을 했는데 무려 90개 병원에 전화를 했고 2시간 42분 동안 연락을 해서 157번째 통화를 해서 받아 주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디였냐 하면 환자는 평택에 있었는데 경상남도 창원에 받아 주는 병원이 있다고 해서 300km를 구급차를 타고 가서 분만을 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응급실 뺑뺑이가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응급환자를 최종 치료하는 병원에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간의 갈등과 권한 다툼이 문제 해결의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려면 응급환자가 왔을 때 응급의료기관이 우선 환자를 받아서 진단하고 살려 놓고 수술이 필요한 환자인데 수술할 수 있으면 그 병원에서 수술하고 수술하기 어려우면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응급의료체계가 일반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보고 응급환자 우선 받아서 살려 놓고 진단하고 하시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병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면 ‘소방의 응급환자 평가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방의 응급환자 평가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방이 응급환자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응급환자를 거부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또 소방은 복지부가 소방이 환자를 잘못 평가한다고 계속 비판하고 비난하니까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복지부에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두 부처 간의 부처이기주의, 부처 간의 갈등의 문제인데 그 갈등의 결과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 응급환자입니다.

응급환자 뺑뺑이 문제를 이재명 정부가 해결하려면 두 부처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거는 저는 총리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실 산하에 복지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범부처 TF를 만드셔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저 문제는 관련 TF를 미니정책 TF라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두 번의 토론을 통해서 큰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 토론을 할 때 김윤 위원님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 위원** 감사합니다. 역대 정부에서 사실 총리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을 했는데 잘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꼭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소방청장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소방청이 올 2월부터 환자의 재이송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공개해야 되는 정보 같습니다. 공개하시겠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할 때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평가하고 이송할 병원에 대해서는 전화로 수용 여부를 확인해서 이송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통 병원에서 수용 거부하는 사례가 전체적으로 보면 병상 부족이라든지 전문의 부재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소방청에서 관리하는 지표는 현재 병원 체류시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하고 최종적으로 현장 도착에서 현장 출발 시간, 그게 체류시간이지요. 현장 도착에서 병원 도착 시간, 30분 이내의 병원 도착률, 그 이후의 도착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이송에 대한 사례는 저희들 소방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윤 위원** 재이송률에 관한 자료를 저희가 소방에서 받아서 보도자료도 내고 분석해서 국감에서 질의도 했습니다.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말은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은경 장관님도 이 문제 관련해서 좀 협조하고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응급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런 이송과 전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증환자를 최종 치료하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저희 복지부도 이런 응급실의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송·전원에 대한 문제는 소방청과 협의해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보당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1차 질의 때 시간 관계상 중단돼서 2차 질의를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방금 전 속보를 보고 또 한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광장에서 함께 싸운 시

민들에 대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그것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합의로 새로운 대통령을 또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도 모르는 무식의 극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정부와 사업할 수 없다? 무슨 협박입니까? 어떻게 이런 협박을 정말 대놓고 할 수 있는지 이것 또한 정말 불쾌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를 모독하고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불평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이라도 협상을 재검토하고 다시 비행기 돌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트럼프의 이런 막말과 협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일단 지금 여기 앉아 있어서 그 사실을, 정확한 전문을 전연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표현이 종래에 여러 번 있었던 다른 나라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는 정상회담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언사 중에 어떠한 취지의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현재로서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이것은 불평등한 한미 관계라는 것을 보여 주는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강행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정부에서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200만 국민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저는 정말 숙고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빠르게 조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트럼프 정부와 계속 이런 불평등한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 국민주권정부로서, 우리 주권자 국민의 자존심을 걸고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제대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국무총리 김민석** 최대한 빨리 전체 상황을 파악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기재부장관님, 제가 1차 질의 때 못 했던 긴급복지 관련 예산 질문인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전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긴급복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2001년도에도 300억을 했고 2023년도에 239억을 전용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파이를 열어 놓고 쓰고 남은 돈을 불용 처리해서 불용됐다고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긴급복지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더 확대돼야 되지요, 특히나 위기 시대니까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계획에 향후 추진 방향과 계획을 관련 기준 고시를 고쳐서라도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긴급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정한 23년부터 27년까지 5개년 중기재정계획에는 긴급복지 예산을 2027년까지 3585억을 잡았는데 24년부터 28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는 또 그 액수를 감해 가지고 3501억 원으로 고정을 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세운 것은 3585억을 잡고 1년 후에 다시 세운 5개년 계획에는 3501억 원으로 감액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27년까지 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안 지키고 1년 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다시 후퇴를 시킨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것도 5년 동안 고정을 해 봤어요. 그러면 예산이 계속 5년 동안 꺾인 상태로 확대도 못 하고, 계획은 확대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꺾인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본예산이 3500억 정도 됐는데 2차 추경에서 3730억 원으로 지금 벌써 늘려 봤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위원님 말씀 주시니까 하여튼 또…… 그리고 긴급복지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28년까지 고정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시정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전종덕 위원 꼭 시정해서 긴급복지 사업이 민생이 위기인 시대에 어쨌든 우리 복지가 제대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복지예산을 정말 잘 집행하고 불용 처리를 안 해야 되는데 산자부 예산, 에너지복지 예산이 997억이 불용 처리됐고요. 여가부의 한 부모가족 예산이 689억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거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제때 쓰여야 되는데, 전체 예산에서 98% 정도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90%대 수준으로 집행률도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집행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갑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위원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외교부장관님 계신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외교부차관입니다.

○김승원 위원 차관님, 아까 ODA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역시 외교부 관련된 ODA도 2024년도에 39.2%가 증액이 됐습니다. 굉장히 급격한 액수인데 KOICA를 통해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KOICA 상임이사로 근무하시는 분이, 윤석열 정권하에서 되신 분이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 씨를 변호한 손경식 변호사의 누나라고 합니다. 누나라고 해서 안 될 법은 없겠지만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류심사에서 20명 중에 2명을 뽑는데 20명 중에 9등, 2차 면접심사에서 남은 10명 중에 6등을 한 분인데 이 양반이 됐다는 거에

요. 다른 분은 2등 안에 다 들어가는 그런 서류와 면접 점수였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채용 과정이랄까요, 임용 과정을 한번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양반이 지금 KOICA에서 이루어지는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상원조 사업의 입찰·조달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금액이 우크라이나든 캄보디아든 갈 때 왜 갔는지, 또 우리가 결산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이 자료를 제대로 주지도 않고 등등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알박기 인사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지금 2024년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이 곳곳으로 스며들지 않는 그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P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JTBC에 단독으로 보도된 건데 56개의 공공기관 상임감사 등 포함해서 120명이 캐나다 토론토로 출장 가서 국민의 혈세로, 여기 보니까 나이가가라 폭포 관광도 하고 또 어디 위스키 만드는 데 가서 아마 시음행사도 하고 그런 데를 다녔나 봅니다. 그게 국민한테는 미안한지 일정표에 비공개로 이렇게 해 놔다가 한국에 도착하니까 그 비공개 일정표는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감찰을 해서 그 알박기 인사들에 대한 엄한 추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실까요?

예금보험공사 사장인데요. 이 양반은 또 개인적으로 아주 최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년 9개월 동안 19회에 걸쳐서 해외 출장을 갔고 약 5억 원의 혈세를 썼다고 합니다.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당시 1년에 여덟 번 간 것에 대해서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았음에도 그 후에도 열세 번인가요 그것을 더 갔다고 합니다. 국회의 지적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예보 사장인데 박근혜정부 때에는 예탁결제원 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스물아홉 번인가요? 박근혜정부 때 2년 반 동안 스물여덟 번 해외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윤석열 정부가 예보 사장으로 앉혀 놔더니 또 저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직 기강을 잡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감사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요새 김건희 여사의, 김건희 씨의 집사라고 하는 김예성 집사 게이트를 파고 있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실까요?

자본잠식인 IMS모빌리티라는 회사에 금융기관, 대기업 그다음에 준공공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이 184억을 투자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알아본 결과 한국증권금융은 2023년 5월 달에 ‘대형 기관이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결정했습니다’라고 의원실에 답변을 했는데 타 기관들은 2023년 2월 혹은 3월에 뭐라고 했냐면 ‘한국증권금융이 이미 그 당시에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라고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합니다. 만약에 타 기관들, 즉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의 말이 맞다면 한국증권금융이 미리 이미 투자를 하기로, 자본잠식 회사에 투자를 하기로 해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의 질의에 대해서는 거짓말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신한은행 같은 큰 금융기업이 200억짜리 펀드를 모으는 오아시스에쿼티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왜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됐는지 그런 자본잠식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됐는지, 신한은행 내부의 세 곳 혹은 네 부처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거절 아니면 위험의사표시를 표현했는데도 투자 30억 원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구주 매입, 즉 김예성 씨와 김건희 씨 측에 돈을 주는 그런 구주 매입에 있어서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오아시스에쿼티가 그것을 사 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대기업과 금융기관 그다음에 한국증권금융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결산에 함께 늦게까지 해 주셔서 감사하고 윤석열 정부가 2024년도에 했던 결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라도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파헤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늦게까지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존경하는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질의했을 때 확인해 보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 결과를 좀 여쭙보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김기웅** 위원 제가 19일 날 북한의 MDL 침범 후 4일 뒤에, 우리가 북한 담화 이후에 공개를 했다 했더니—의사록이 있습니다만—‘이번에도 했다. 즉각 했다’. 19일 날 했느냐 그랬더니 ‘한 것으로 아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발표를 언제 하셨지요? 19일 바로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19일 날 바로 안 했습니다.

○**김기웅** 위원 4일 뒤에 하신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확인했고요. 의사록에는 정확히 남겨야 되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김기웅** 위원 트럼프 대통령 것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것을 보니까,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게 아까처럼 감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분도 있고 혹

은 이게 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무슨 그런 전술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아까처럼 우리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거나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한 것인데 설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직전에, 정 사회담도 물론 있겠지만 관련해서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 세에 대해서—가장 최근에 이 글을 올리기 전에 어떤 보고를 받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 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보고를 받고 바로 이렇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미 국 내 일부 극우적인 인사들이 인풋을 잘못했을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읽기에는 어제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알고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일이 신상에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아마 이런 경위를 파 악하거나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밤늦게 나와서 고생하시는데 통일부장관님께 하나……

PPT 한번 올려 주세요.

인사청문회나 초기에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보이셨는데요. ‘명칭 변경 필요하다’ ‘한반도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근래에 와서는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조금은 미루시는 말씀을 하셔서 이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정리된 입장이라 든가, 제가 볼 때는 서두를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북한 측 태도도 좀 더 지켜볼 필요도 있고 남북기본합의서 체제에 맞는 남북관계를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 개의 한국도 아니고 그래서 좀 더 상황을 보시면서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싶은데 지 금 말씀이 우선순위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 시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 얘기에 앞서서 금방 말씀하신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면 아마도 이것은 최대의 압박 작전이라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았을까 이런 말씀 하셨는데 아마 한국 측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쉽게 물러나지 않고 있다 하는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1만 5000 km 떨어져 있는, 멀리 이역만리지만 이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아마 이 대통령께서 잘 대 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사실 남북관계가 갈 길을 잃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내려왔던 남과 북의 서로 체제 인정·존중을 버리고 자유의 북진론, 주민해 방론 이렇게 해서 사실상의 붕괴론, 흡수통일론으로 회귀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까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평화 공존의 길을 찾기 위해서 독일의 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 렇게 생각합니다. 독일은 통일부를 포기하고 내독관계부로 가면서 평화 공존을 제도화했 고 그 길이 통일의 길이었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운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개혁할 때 의견이 엇 갈리면 반 발짝만 앞서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통일부의 명칭 변경을 포함해서 전반적으 로 원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국민 의견을 충분히 살필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것을 압박 협상 전술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쪽 사람들 중에. 과거에 많은 경험을 했던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아

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렇게 격앙된 표현을 썼을 때는 분명히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중요한 것은 사실은 신성하다는 것인데 숙청도 사실이 아니고 혁명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친위쿠데타가 실패했던 그 사실을 역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혁신당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저도 준비한 질의가 있는데 우선 하도 큰 현안이 나와서 계속해서 여쭙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교부차관님, 외교부장관계서 이번에 일본 일정을 스킵하고 바로 미국으로 갔는데 다소 이례적이라라는 평가가 사실 나오긴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어떤 왜곡된 내지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걸 혹시 외교부 차원에서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제가 이 SNS 경위나 배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 실제로 타국 정상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면 그 타국 정상의 의중을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위원** 그럴 수 있는데, 단순히 이 SNS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감이나 위기 징후 같은 것들을 느끼신 적이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여쭙보는 겁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기본적으로 워싱턴 동향은 저희가 각급에서 항상 파악하고 있고 거의 매일 24시간 함께 소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차도 있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 나왔는데 이게 가짜뉴스, 페이크 뉴스는 아닌지 공식 계정이 맞는지 이런 걸 확인하겠다는 입장 정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뭐 사실 누가 봐도 공식 계정인 것 같은데, 외교부는 이 내용이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SNS 포스팅이 맞는지 확인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 이미 사실상 언론에서 다 확인이 된 건데도 아직 확인된 입장은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지금 확인됐다는 것은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리고 지금 몇몇 언론 보도들을 보면 숙청 또 혁명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미국이 암참에서도 사실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굉장히 센 우려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혹시 노란봉투법 같은 다소 반시장주의적인, 반기업적인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에 악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는 언론들의 추측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외교부에서 파악할 때 암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미국의 당국자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지 뭐 그런 부분들 좀 감지된 건 없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여러 가지 협상에 대한 사안을 제가 지금 단계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럽고요. 조금 부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냉정하게 또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저도 당연히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냉정하게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기에는 좀 이례적인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부장관이 바로 일본 일정이 아니라 미국으로 달려가시고, 사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하는 미국 측의 의전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의전장이 아니라 부의전장이 나온 부분들 이런 여러 부분들, 블레어하우스도 그렇고,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사안들이 많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다소 되는 부분들이 있는 데요. 외교부에서 그래도 혹시 우리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뭐 안심하라는 말씀도 좋고요, 어떻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시간에 좀 있으실까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미 측은 블레어하우스는 개조 중이고 또 의전장이 나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 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블레어하우스라든가 부의전장이 나오는 문제는 전에도 전례가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조금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줄 수 있지만 보다 실사구시하는 차원에서 내용의 측면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 측에서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천하람 위원 물론 당연히 결과가 좋고 내용이 잘돼야 될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서 국민들의 걱정을 대신 전달하는 취지에서 여쭙봤고요.

그런데 이게 글썽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 정상회담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내용은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정성호 법무부장관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국내의 여러 특검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보기에 따라서 저는 정부 여당이 굉장히 일방독주식으로 밀어붙이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또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하는 것이라면 차제에,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속도 조절이라든지 대화와 타협 또 야당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돌이켜 보는, 이게 꼭 미국 때문이 아니더라도 한번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총리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일단 이제 정상회담을 몇 시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 여러 가지

걱정을 주시는 충정과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다양한 협상의 경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두고 지금 협상에 나선 대통령과 저희 정부 측 협상팀을 믿고 응원하는 것이 최상이 아니겠는가, 그 이상의 과도한 해석은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그다지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주신 것은 감사하게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예.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에 이어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잠시만……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호명 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천하람 위원, 김기웅 위원, 김종양 위원, 김위상 위원, 전종덕 위원, 정진욱 위원, 안도걸 위원, 이재관 위원, 김윤 위원, 임미애 위원, 조계원 위원, 김승원 위원, 윤후덕 위원, 박형수 감사님, 이소영 감사님.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들과 24시간 위원님들을 밀착 보좌하시는 보좌진 여러분, 속기 및 경호·방호 직원분들, 늦은 시간까지 중계방송을 위해 애써 주신 국회방송에도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우리 위원회 회의를 지켜보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종합정책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3분 산회)

○출석 위원(46인)

고민정	곽상언	김기웅	김남근	김대식	김성희	김승원	김용만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종양	김한규	노종면	박민규	박형수	박희승	배준영	서왕진	송기현
안도걸	유영하	윤후덕	이강일	이병진	이소영	이수진	이재관	이종배	임미애
임종득	전종덕	정점식	정진욱	조계원	조배숙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차지호
천하람	최기상	한기호	한병도	허성무	황정아				

○청가 위원(2인)

김상욱 이성권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원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전문위원 정대영

입법심의관 이동훈

입법심의관 최철민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김민기

사무차장 박태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총리 김민석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우상호

정무비서관 김병욱

대통령경호처

정책관 박관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 방용승

감사원

원장 최재해

국무조정실

실장 윤창렬

기획재정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교육부

장관직무대행 최은옥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외교부

제1차관 박윤주

통일부

장관 정동영

차관 김남중

법무부

장관 정성호

국방부

장관 안규백

차관 이두희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문신학
정책기획관 안창용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환경부
장관 김성환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여성가족부
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제2차관 강희업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차관 노용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인사혁신처
처장 최동석
법제처
처장 조원철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국세청
청장 임광현
관세청
청장 이명구

조달청

청장 백승보

통계청

청장 안형준

우주항공청

청장 윤영빈

재외동포청

청장 이상덕

병무청

청장 홍소영

차장 최규석

방위사업청

청장 석종건

차장 강환석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소방청

청장 허석곤

국가유산청

청장 허민

농촌진흥청

청장 이승돈

산림청

청장 김인호

특허청

청장 김완기

차장 목성호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

기상청

청장 이미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강주엽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의겸

해양경찰청

청장 김용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학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배용

상임위원 김태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박선영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송기춘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차장 배형원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김정원

사무차장 김용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허철훈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조승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2025. 8. 6.
박덕흠	이종배	국민의힘	2025. 8. 18.

○의안 회부

2024회계연도 결산

(2025. 5.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35)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5. 5.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36)

이상 2건 8월 25일 소관 상임위원회(정보 제외)의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됨

○예비심사보고서 송부

2024회계연도 결산

(2025. 5.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35)

8월 25일 소관 상임위원회(기획재정·외교통일·문화체육관광·국토교통)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송부됨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5. 5.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36)

8월 25일 소관 상임위원회(기획재정·문화체육관광·국토교통)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송부됨

○예비심사기간 통지

2024회계연도 결산

(2025. 5.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35)

7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정보 제외)의 예비심사기간을 8월 25일 09시 30분까지로 확정하여 통보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음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5. 5.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36)

7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의 예비심사기간을 8월 25일 09시 30분까지로 확정하여 통보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음

○통지

2024회계연도 결산

(2025. 5.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35)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소관 상임위원회(국회운영·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방·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여성가족)는 예비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송부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5. 5.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36)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소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환경노동)는 예비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송부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